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0호 2020.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중국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 분석

권은주 ▣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7

이유표 ▣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47

우성민 ▣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91

논문

연민수 ▣ 고대일본의 고려군(高麗郡) 설치와 고구려계 씨족의 동향 149

정형아·정창원 ▣ 장제스의 친중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1945~1947) 185

서평

기세찬 ▣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글항아리, 2020) 227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43

Contents

Special Issue Analysis Papers on the Chinese National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Kwen Eunju ■ Analysis of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n History and East Asian History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中外歷史綱要』) 7

Lee Youpyo ■ Research as Descriptive Feature of the Ancient Civilization on the Unifie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47

Woo Sungmin ■ China's Global Values of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Advocated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Narrative and Implications 91

Articles

Yeon Minsoo ■ The Establishment of Goryeo-Kun and the Trends of Goguryeo-Derived Families in Ancient Japan 149

Jung Hyungah · Jung Changwon ■ Kai-shek Chiang's Idea of Establishing a Pro-China Government and Syngman Rhee, 1945~1947 185

Book Review

Ki Sechan ■ *Forgotten Ally: China's War with Japan, 1937~1945* 227

특집

중국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 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권은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중국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
- II.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 내용
- III. 동아시아사 서술 비교
- IV. '용어'와 '첨삭(添削)'에 담긴 중화주의
- V. 맺음말



I. 머리말 – 중국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교과서 편찬을 김정제로 운영하다가 최근 다시 국정제로 전환하였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새로 제정된 〈보통 고중(고등학교) 역사과정 표준(2017년판/이하 약칭 ‘새표준’)〉에 의거해 만든 국정 교과서를 2019년 9월 신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¹

중국이 국정제로 재전환하기 이전 김정제를 실시하였던 것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개혁개방, 글로벌 사회로의 편입 등 시대적 흐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민족갈등, 사회주의 체제의 이완 등은 다시 강력한 국가 권력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이것이 교육에서는 국정 교과서로 나타났다. 중국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마르크스유물론에 입각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강조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새 국정 고등학교 역사 교재 편찬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한 ‘도덕과 정치, 어문(語文), 역

* 투고: 2020년 10월 15일, 심사완료: 202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0년 11월 26일

1 『중외역사강요』가 처음 사용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랴오닝성, 산둥성, 하이난성이다. 원래 계획에는 6개 지역에서 먼저 사용하고, 2020년 가을 학기(신학기)에 9개 지역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었다. 올 4월 중국 교육부 통지 ‘教育部辦公廳關於遴選建立普通高中新課程 新教材實施國家級示范區和示范校的通知(20. 4. 7.)’에 따르면, 전국 32개 국가급 시범구와 96개 국가급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새 교재를 사용한다고 한다. ‘각 성(省)마다 1개의 시범구와 2개의 시범학교를 설정하여 3년 동안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외역사강요』의 사용 범위와 전면 사용 시기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 교재 구성에 대한 연설이었다. 그는 도덕과 정치, 어문, 역사 교재를 하나로 통일하고 편찬하는 것을 국가 권력, 국가의 행위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학교 교육과 인재배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시도는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² 그러나 2017년 시진핑 집권 제2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국정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새표준>이 발표되었다.

<새표준>에 따른 교과서 편찬을 위해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교재위원회 역사전문위원회에서 교재 편집 서술[編寫]을 담당할 조직(이하 편사조)을 구성하였다.³ 편사조는 장하이펑(張海鵬)⁴과 쉬란(徐藍)⁵이 총 주편을 맡고, 베이징대학, 베이징사범대학, 수도사범대학, 푸단대학, 화둥사범대학,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문가와 인민교육출판사 및 고등학교 일선 교사로 구성되었다.

편사조는 고등학교 국정 새 역사교과서인 필수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上·下)』, 선택성 필수 1~3 『국가여사회치리(國家與社會治理)』·『경제여사회생활(經濟與社會生活)』·『문화교류여전파(文化交流與傳播)』의 초안을 작성

-
- 2 국정제 논란은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1 참조.
 - 3 <새표준>에 따른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편찬 과정은 張海鵬, 2019, 「統編高中歷史教科書的學科體系和學術體系-適應和掌握統編高中歷史教材《中外歷史綱要》(上)的意見」(『課程·教材·教法』 39-9)와 人民教育出版社에서 출판한 필수 『中外歷史綱要(上)』(2019)·『中外歷史綱要(下)』(2020), 선택성 필수 1~3 『國家與社會治理』(2020)·『經濟與社會生活』(2020)·『文化交流與傳播』(2020) 後記 참조.
 - 4 張海鵬(1939~):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學部委員). 주요 연구로는 『中國近代史基本問題研究』, 『簡明中國近代史讀本』, 『中國近代通史』, 『台灣史稿』 등이 있다.
 - 5 徐藍(1947~): 중국 首都師範大學 교수, 수도사범대 국가중점학과 세계사학과 책임자. 주요 연구로는 『國際冷戰中的大國戰略關係研究』, 『英國與中日戰爭1931-1941年』, 『國家大戰略與對外政策調整-20世紀40-60年代冷戰態勢的演變』 등이 있다.

하였고, 중국 전국 1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선정된 시범학교에서 시험 사용 과정을 거쳤다. 편사조는 시범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서에 대한 의견과 각 지역 역사교육연구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본을 역사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다시 140여 명의 전문가가 심도 있게 독해 한 뒤, 초·중·고 및 필수·선택 역사교과서들을 상호 비교하며 개선하였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개정한 뒤 『중외역사강요(상)』는 2019년 6월 초 정식으로 승인 되어 2019년 가을 신학기 베이징, 상하이 등 6개 지역에서 1학년부터 사용하였다. 이후 나머지 교과서도 완성되어 『중외역사강요(하)』는 2020년 봄 학기에, 선택성 필수 1~3 교과서는 가을 학기부터 사용되었다.⁶

새 역사교과서의 주편을 담당하였던 장하이핑은 「통편 고중 역사교과서의 학과체계와 학술체계-통편 고중 역사교재 『중외역사강요(상)』의 적용과 장악에 대한 의견」⁷에서 『중외역사강요(상)』의 목적, 서술 주의점, 핵심 목표와 전략 등을 밝혔다. 그 내용은 사실 새 역사교과서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장하이핑이 밝힌 『중외역사강요』의 목적은 첫째, 국가의 의지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교육에 구현하고, 둘째, 고등학교 역사학과 5개 핵심 교양[유물사관, 시공관념, 사료실증, 역사해석, 가정과 국가를 생각하는 감정(家國情懷, 즉 애국심)]을 관철하고, 셋째, 편찬 서술 과정에서 학과체계와 학술체계를 수립하며, 넷째,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 당과 국가의 장기 통치와 안녕,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있다.

서술 주의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애국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중국 고대사부터 역대(歷代) 강역의 변천을 설명하고, 국가주권의 중요성과 국방 해양의 권익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민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단결의식을 강화하여 자고(自古) 이래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발전하며 중화민족을 형성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구축한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6 선택과목인 『史學入門』과 『史料講讀』도 곧 정식 출판될 것으로 보인다.

7 張海鵬, 2019, 앞의 글.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의 목적이 역사를 활용하여 현재 중국의 영토(분쟁지 포함) 안정, 민족통합, 체제유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자기중심의 세계사 서술을 통해, 신(新)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세계사에 해당하는 『중외역사강요(하)』의 핵심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교과서의 마지막에는 교과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세계로 눈을 돌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이라는 주제의 활동과가 있다.⁸ 내용을 보면 2013년 시진핑이 국제사회에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제시하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연설로 유엔 결의 등의 성과를 내었다고 한다. 또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기본 방침이며,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시대 중국 고등학생들은 세계적 시야를 갖추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해를 갖고, 국가와 세계 발전을 연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 진보 사업에 지혜와 역량을 발휘할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⁹

이렇게 중국은 새로운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마르크스유물론에 입각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통일다민족국가를 강조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국 중심의 세계사를 기술, 세계사 서술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 정책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당연히 중국사 자체의 새로운 해석과 서술을 동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이웃 민족과의 교류 사나 이웃의 역사 서술에서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심할 경우 역사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8 中國教育部, 2020, 『中外歷史綱要(下)』, 人民教育出版社, 143~145쪽.

9 최근 중국은 시진핑의 인류운명공동체 관련 원고를 모아 『인류운명공동체 추진 견지를 논함(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중국공산당사와문헌연구원(中共中央黨史和文獻研究院)에서는 이를 영어·프랑스어·일본어로 번역·출판하여 중국 국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외에 확산·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외역사강요』를 중심으로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내용과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교과서에 사용되는 ‘역사용어’의 함의, ‘침식’을 통해 드러나는 신(新)중화주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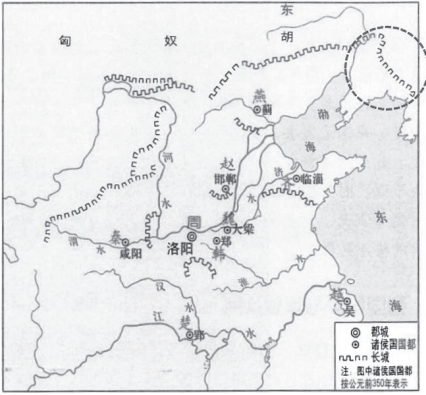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보이는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내용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뤄졌다.¹⁰ 『중외역사강요』의 한국사 관련 내용은 2000년대 이후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교과서 편찬을 국가권력이자 국가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국정 교과서를 만든 만큼, 최근 중국의 역사 인식 및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도에서 보이는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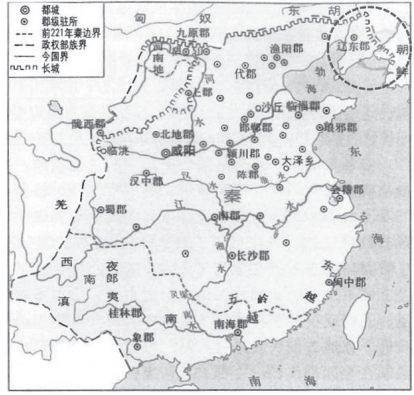
1) 전국시대 장성과 진대 장성의 동단(東端)을 확장한 지도

『중외역사강요(상)』에 수록된 〈전국형세도〉와 〈진조형세도〉를 보면 전국시대

10 관련 연구로는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 오강원 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안병우,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 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75;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연구』 17; 황유진, 2017,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양상과 문제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성민, 2018, 「신간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 개편 동향과 한국사 관련 서술 검토」, 『중국학연구』 86;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등 참조.



지도 1 <전국형세도>



지도 2 <진조형세도>

연(燕)나라의 장성과 진(秦)나라의 장성선을 압록강을 넘어 대령강과 청천강 부근까지 연결하여, 한반도 서북부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¹¹ 이러한 장성 표시와 영토 표시는 영토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탄치샹(譚其骧)의 『간명중국역사지도집(簡明中國歷史地圖集)』을 그대로 따르거나 확대하고 있다. 이런 성격의 지도는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에도 확인된다.¹²

교과서 본문에는 연·진과 고조선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없지만, 지도 표시는 『사기』, 『위략』, 『진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¹³ 연·진과 고조선의

11 中國教育部, 2019, 『中外歷史綱要(上)』, 人民教育出版社, 10쪽 <戰國形勢圖>·16쪽 <秦朝形勢圖>.

12 우성민, 2018, 앞의 글, 419~423쪽.

13 「흉노전」의 ‘진이 농서, 복지, 상군을 설치하고 장성을 설치하여 胡를 막았다’, ‘연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조양으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설치하여 호를 막았다’, 동책 「조선열전」의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았다’, 『삼국지』동이 한전의 위략 인용 ‘뒤에 (조선의) 자손이 점차 교만하고 포악해져 연이 장수 진개를 보내 서방을 공격하여 땅 이천여 리를 얻어, 만번한을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경계나, 장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장성을 장성 벽체뿐만 아니라 관애, 성대, 봉화대 등 다양한 방어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에서 연·진대 장성 벽체가 발견되지 않자, 새로운 장성 개념을 적용한 지도에서는 위의 지도와 같이 장성이 벽체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nnn’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연·진 장성뿐만 아니라 한(漢) 장성(한 장성은 아래 서한강역도 참조)을 서로 연결하여 상호 존재 사실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 장성은 진의 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진의 장성은 연의 장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용하거나 개축한 것으로 보며, 이에 맞춰 사료 역시 선형적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한국 학계에서 많은 비판 연구가 있었다.¹⁵ 장새가 장성에 포함되는 것인가는 차치하고, 장성이든 장새든 연·진의 방어시설이 한반도 경내에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진 장성의 동단은 연 장성과 밀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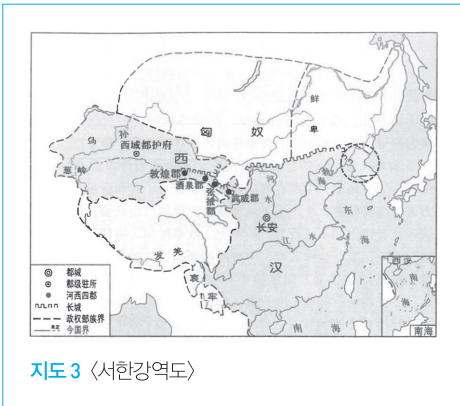
마침내 약해졌다. 『진서』 지리지 낙랑군조의 ‘조선, 둔유, 혼미, 수성은 진이 축조한 장성이 시작된다.’ 『태강지리지(太康地理志)』의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여기에서 시작한다’ 등이다.

- 14 이는 <장성보호공정> 이후 정론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 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간 중국역사 7학년 하에서는 ‘명대 장성은 성벽을 주체로, 관애, 성대, 봉화대 등으로 조성되고 선을 따라 위소, 주둔군대, 둔전운영, 생산을 진행하며, 서로 이어진 도로를 건설하여 하나의 완전한 군사방어체제를 형성하였다’고 서술하여, 기왕의 장성과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명대 장성을 산해관까지 가 아닌 압록강 하구 구련성까지 표시하고 있다(우성민, 2018, 앞의 글, 421~422쪽 재인용).
- 15 자세한 비판 내용은 오강원, 2006, 「중국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고조선 서술 분석과 비판」,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이한상, 2010, 「연북장성의 주향에 대한 논의」, 『고고학탐구』 7; 홍승현·송진·최진열·허인욱·이성제, 2014,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 長城 고찰」, 『백산학보』 99; 공석구, 2015, 「『중국역사지도집』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 長城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43; 공석구, 2017,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문제 고찰-『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6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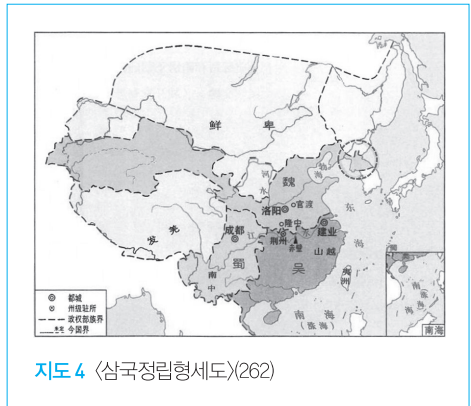
관련이 있지만, 진 장성의 동단이 낙랑군 수성현으로 기재된 것은 문헌상의 오류라는 것이 잘 밝혀져 있다. 더욱이 한 장성의 동단은 축조 기록조차 없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주장은 학술적 증거나 논리가 취약하다.¹⁶

2) 서한과 조위 영역을 한반도 북부까지 확장한 지도

<지도 3>과 <지도 4>는 『중외역사강요(상)』에 수록된 <서한강역도>와 <삼국정립형세도>(262)이다.¹⁷ 두 지도에서 한반도 북부를 서한(西漢, 前漢: 기원전 202~기원후 8)과 조위(曹魏, 220~265)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평양 지역에 설치했던



지도 3 <서한강역도>



지도 4 <삼국정립형세도>(262)

16 북한의 대령강(大寧江) 지역에서 약 120km의 고려 시대 장성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손영중, 1987, 「대령강반의 옛장성에 대하여」, 『력사과학』 2), 중국은 이것이 진 장성의 흔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장성은 한반도 서북(중국 방면)에서 들어 오는 적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방어 특성상으로도 진 장성이 될 수 없다. 『사기』 蒙恬 열전에는 진나라 장성의 동단이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사기 정』에서는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요하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사실상 진나라 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했고, 연·진 장성과 관련한 유적이 요서 지역 阜新까지만 확인되고 있어 진대 장성 기록에 근간한 연·진·한 장성의 주장은 무실한 것이다.

17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22쪽 <西漢疆域圖>, 26쪽 <三國鼎立形勢圖(262年)>.

낙랑군을 근거로 한다. 낙랑군은 313년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중국학계는 한4군과 같이 이민족 거주지에 세워진 변군(邊郡)을 한 제국내의 일반 군현처럼 국가 영역으로 이해하여, 역사지도에서 중원 왕조의 범위를 최대치로 확대하고 있다. 즉, 이민족 지역에서의 변군현 설치를 곧 영역 지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한의 군현 제도와 통치·행정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했는지와 주민 구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중국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¹⁸ 예로 변군은 군현 단위의 거점(城)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통해 토착세력과 교류하거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4군에서 낙랑군과 현도군을 제외한 진번·임둔군은 실제 설치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설치되었다고 해도 얼마 못 가 정식 폐지되었다.¹⁹ 현도군은 고조선 유민과 토착집단의 저항과 성장으로 군의 치소를 몇 차례 이동하였고, 낙랑군과 더불어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직접 지배를 실현할 수 없었다고 본다.

서한이 무너지고 후한이 들어서며 다시 낙랑군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었고, 낙랑군의 지배세력은 토착화된다. 위·진 시기에도 한때 중국과 낙랑군의 결속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지도 3>과 <지도 4>에 표시된 전체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나 영토화의 실현은 부정적이다. 특히 고구려의 성장과 예맥계 토착세력의 정치적 성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역 표시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도 3>과 <지도 4>에서 보이는 공통점이다. 그것은

18 이하 한국 학계의 연구는 안정준, 2017, 「199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樂浪郡 연구 현황과 문제의식」, 『인문학연구』 34; 권오중, 2008, 「낙랑군 역사의 전개」, 『인문연구』 55; 권오중·윤재석·김경호·윤용구·이성제·윤선태, 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오영찬, 1996, 「낙랑군의 토착세력 재편과 지배구조」, 『한국사론』 35; 윤용구, 2007, 「새로 발견된 낙랑목간」, 『한국고대사연구』 46 등 참조.

19 기원전 82년 폐지, 관할 지역은 현도군과 낙랑군에 통합되었다.

현재의 중국 국경선, 즉 중국 영토를 고려한 경계선이 역사 지도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 영역과 중첩되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원왕조뿐만 아니라 당시 유목민족의 영역 및 주변부 지역(해양, 도서 포함)을 아울러 현재 중국 땅(영토권 주장 지역 포함)과 유사하게 외곽 점선을 그렸다. 해당 공간이 과거부터 중국에 속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강역을 기준으로 그 안의 모든 역사가 중국사임을 강조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영토 관념을 적용한 결과이다.²⁰

특히 <삼국정립형세도>에서 고구려 영역을 현재 중국 국경선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라는 이름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중국 역사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고대 북방사와 관련된 지역이 표시된 다른 지도에도 해당되며,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과 교과서에서 지도를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²¹

3) 발해사 관련 서술과 지도

『중외역사강요(상)』에서 발해사 부분은 본문 서술상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북의 말갈족 속말부가 강대해졌다. 당 현종이 그 수령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당조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은 조국의 변강 지구의 개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라고 하였다.²² 여기서 조국은 중국을 가

20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2016년 판)의 한국고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 153쪽.

21 중국 역사교과서의 강역도는 역사상 중국의 영역 변천사를 넘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사’라는 거대한 서사 구조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내적으로는 분리 독립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족분열주의의 논리를 적용하고, 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해 자국의 영토임을 내세우며 失地 회복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윤세병, 2018,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경인문화사, 120~121쪽.

22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34~35쪽.

리킨다.

대조영의 출신을 속말부 수령으로 본 것은 “속말말갈로 고구려에 붙은 자”, “속말소변으로 고구려를 쫓아 안으로 옮겼다[고구려 멸망 후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遷徙)한 것을 이룸] 등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²³ 그러나 이들 기록에는 대조영을 ‘속말말갈 수령’이라고 한 곳은 없다. 반면 중국 사서인 『구당서』에는 ‘고구려 별종(別種)’으로,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한국 사서에는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 하였다. 과거 대조영 출신에 대한 논란은 속말말갈 또는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들 기록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대조영은 속말말갈 출신이지만, 이미 고구려인이 된 고구려 장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계 말갈세력들이 당의 지배에 저항한 고구려부흥운동의 결과로 건국한 독립국이라는 점이다.²⁴

그런데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대조영이 고구려의 옛 장수로서 고구려인이었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발해를 속말말갈의 수령이 세운 속말말갈의 나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발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당의 지방정권으로 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

23 『신당서(新唐書)』 말갈전,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 고구려에 붙은 자이며 성은 대씨이다(渤海, 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 『동문선(東文選)』 사불허복 국겨상표 “신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의 원류는 구려(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본래 사마귀 혹은 같은 부락으로 말갈에 속했습니다. 번성하여 무리를 이루어 속말소변이라 하였고, 일찍이 구려를 쫓아 안으로 옮겼습니다(臣謹按, 渤海之源流也, 句驪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 靺鞨之屬, 寔繁有徒, 是名粟末小蕃, 嘗逐句驪內徙.)” 등.

24 한국학계의 대조영의 출자와 당에 저항하여 독립국가를 세운 과정에 대해서는 한규철, 1992, 「발해건국과 남북국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 5; 송기호, 1995, 「대조영의 출자와 건국 과정」,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임상선, 1999, 「발해 건국과 참여 집단」, 『발해의 지배세력연구』, 신서원; 한규철, 2000, 「발해 건국을 성공케 한 요동의 고구려유민세력」, 『春史 卞麟錫教授 停年紀念論叢』; 김종복, 2004,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연구』 34; 권은주, 2010,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反唐활동과 발해건국」, 『백산학보』 86 등 참조.

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중국 학계에서는 당에 반기를 들고 독립국을 세웠던 발해 초기 ‘진국(振國 또는 震國)’ 단계를 부정하면서, 초기 국명이 ‘말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⁵ 그리고 비록 당에 반기를 든 시기가 있다고 해도, 713년 당 현종의 ‘발해군왕’ 책봉을 계기로 발·당 사이의 정식 국교 수립을 당의 지배 수용으로 이해하여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설명하고, 이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⁶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지도 5>의 ‘발해도독부(713년 설치)’



- 25 張碧波, 2002, 「渤海早期國號考索」, 『黑龍江民族叢刊』 2002-1; 紀勝利·郝慶雲, 2004, 「渤海國初建之際國號考」, 『中國邊疆史地研究』 14-2; 魏國忠, 2014, 「論大祚榮政權初稱“靺鞨”」, 『社會科學戰線』 2014-8 등.
- 26 『中外歷史綱要(上)』의 발해사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 중국 역사교과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한 분석과 비판은 임상선,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참조 바람.

부분이다.²⁷ 그런데 이 지도는 고구려가 멸망한 바로 다음 해인 669년의 지도이다. 발해가 건국된 것은 698년이며, 당의 ‘발해군왕’과 ‘도독’ 책봉은 713년의 일이다. 그런데도 이 지도에 ‘발해도독부’를 표시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713년에 책봉된 ‘도독’은 ‘발해도독’이 아닌 ‘홀한주도독’이었다.²⁸ 중국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낯선 ‘홀한주’ 대신 ‘발해’라고 표기한 것은 이 지역이 중국(당)의 지방이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도와 더불어 “당조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은 조국의 변방 지구 개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라는 문장을 발해사 관련 내용 뒤에 잇따라 서술한 것은 669년 상황은 아니지만 곧 발해 지역이 당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²⁹

2. 한국사 서술에서 보이는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이 보이는 한국 고대사 관련 지도는 모두 중국사를 다루는 『중외역사강요(상)』에 보이는 내용이다. 우리가 한국고대사로 보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사로 범주화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한국사 이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직접적인 한국사 이해를 반영하는 내용은 세계사를 다룬 『중외역사강요(하)』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 관련 서술은 크게 축소되었는데,³⁰ 『중외역사강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권에서 직접 한국사에 대한

27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35쪽 〈唐朝前期疆域和邊疆各族分布圖(669年)〉.

28 『구당서』 권199하, 열전 149하, 발해말갈 “睿宗先天二年(713), 遣郎將崔訢往冊拜祚榮爲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 仍以其所統爲忽汗州, 加授忽汗州都督, 自是每歲遣使朝貢.”; 『신당서』 권219, 열전 144, 발해 “睿宗先天(712~713)中遣使拜祚榮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以所統爲忽汗州, 領忽汗州都督”.

29 동일 지도에 보이는 북정도호부(702년 설치), 흑수도독부(726년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0 주) 10 연구 참조.

내용을 다룬 것은 ‘제2단원 중고시기의 세계-제4과 중고시기 아시아-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에서 총 10줄 분량에 해당한다. 내용(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① 7세기 말, 신라는 초보적으로 조선(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을 모방하여 중앙 집권국가를 세웠다. ② 10세기 초 신라인 왕건이 고려왕조를 세웠다. ③ 고려왕조는 중국 당제도를 본받아 중앙에 3성 6부제를 세웠고, 지방은 10도(道)로 구분하고, ④ 토지국유제를 시행하고, 과거제를 도입하여 관원을 선발하였으며, 중국 유가경전과 시문의 사장(詞章)문학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⑤ 14세기 말 고려대장 이성계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한성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⑥ 16세기 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20만 대군을 파견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명조는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싸웠다. 명조의 대장 등자룡(鄧子龍)과 조선의 대장 이순신은 전투 중 장렬하게 희생하였다. 7년간의 험난한 전투를 거쳐 중국과 조선 군민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승리를 얻었다. (하권, 25~26쪽)

위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사 서술의 시작이 7세기 말이라는 점이다. ‘제2단원 중고시기의 세계’의 머리말에서는 “세계사상 5~15세기는 일반적으로 중고시기라고 불린다”³¹고 하여, 이 단원에서 한국사 서술의 시간 범위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고시기 이전의 단원에서 한국사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중외역사강요』에서 한국사의 시작은 7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고시기를 5세기부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한국사를 삼국시기부터 서술할 수도 있는데, 신라의 통일부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삼국시기부터 언급할 경우 고구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관련해서 원문 ②부분 ‘신라인 왕건’이 ‘고려왕조를 세웠다’라는 서술이 주

31 中國教育部, 2020, 앞의 책, 14쪽.

목된다. 이는 ⑤의 ‘고려대장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식의 서술 방식과 동일하여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안의 함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학계에서는 왕건이 고구려와 전혀 관계가 없고, 고려 역시 고구려와 무관한 역사라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주장을 함축한 것이 바로 ‘신라인 왕건’이 ‘고려 왕조를 세웠다’라는 구절인 것이다.

이 글은 한국고대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기 때문에 이 외의 한국사와 관련된 서술에 대한 상세 분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신라와 고려가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집권을 이루고, 문화적 발전을 이뤘다는 식의 서술은 독자적 발전이나 내재적 성장 및 중국 문화의 자발적 수용과 변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 영향만 강조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가 ‘토지국유제’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전시과 제도’와 ‘왕토사상’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왕토사상’은 관념에 불과하고 상당한 사전 또는 민전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국 학계에서는 고려의 토지 국유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³³ 그리고 조선의 국호가 먼저 제정되고 천도된 사실을 순서를 뒤바꿔 서술한 점이나,³⁴ 임진왜란에서 명군의 파견 및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서술 등에서 한국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중국 중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2 史長樂, 2006, 「王建爲何定國號爲高麗」, 『東北史地』 2006-6; 楊保隆, 1999, 「論高句驪與王氏高麗无前后相承關係」, 『社會科學戰線』 1999-1 등.

33 1970년대에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전시과에 의해 사적 소유권이 제한되었지만 단순한 토지국유제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소개하며, 개인의 소유지인 민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예로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다. 대부분의 경작지는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었지만, 왕실이나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참고)라고 서술하였다.

34 조선이란 국호를 정하고 사용한 것은 1393년(태조 2) 2월이며, 한양 천도는 그 다음 해인 1394년(태조 3) 10월의 일이다.

Ⅲ. 동아시아사 서술 비교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서술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동아시아사 서술 역시 한국사 관련 서술과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과 서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술 비중을 통해, 현재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위상과 중요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 중국의 문화·정치·군사적 영향을 강조하는 동아시아사 서술

1) 중국 모방 중앙집권 국가 건립

『중외역사강요』에서는 중국 주변 국가들이 중국(제도)을 모방하여 중앙집권 국가를 건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조선, 베트남, 신라 등의 중앙집권국가 건립을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결과로 오인하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대 일본과 조선은 중국을 모방하여 중앙집권 국가를 건립’(하권, 24쪽 학습 초점)
- ② ‘베트남은 ...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관료제도를 시행’(하권, 25쪽 역사총횡)
- ③ ‘개혁(다이카게신) 이후 약 반세기를 넘어 일본은 중국을 모방하여 중앙집권 국가를 건립’(하권, 25쪽)
- ④ ‘7세기 말 신라는 조선반도를 초보적으로 통일하고 중국을 모방하여 중앙집권 국가를 건립’(하권, 25쪽·147쪽 연표)

이러한 서술은 동아시아사를 이해할 때, 타율성과 정체(停滯)성을 조선사의 특징으로 본 일제 식민사관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

다. 신라의 경우 중앙집권화 과정은 4~6세기에 걸쳐 장기간에 이뤄졌고, 7세기 이후 당제를 수용한 뒤에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전통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변용하여 운영하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모방만 강조할 경우, 동아시아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앙집권화와 문화적 발전에 중국 제도의 수용이 전제나 필수 요건이 아닌, 독자적인 발전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주체적으로 수용한 측면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동아시아사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2) 전근대 중국과 주변국을 종번관계로 개념화

『중외역사강요』에는 전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우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위계를 제도적 종속적인 관계로, 즉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관과 근대적 중주국-속국의 개념을 결합하여 변용시킨 ‘종번관계’로 개념화³⁵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로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중국과 ‘종번관계’를 맺었고, 중국의 ‘번속국’이었다는 것이다.

상권에 보면 전근대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종번관계가 형성되었고, 중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나라인 번속국으로 조선, 류큐, 베트남, 미얀마 등을 꼽았다.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종번관계는 1879년 일본이 류큐를 합병하면서 해체되었고, 조선의 경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으로 독립한 것으로 서술하였다.³⁶

35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98쪽 <역사중형: 종번관계>, “경제 문화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명·청 시기에 중국과 주변 일부 나라들 사이에는 일종의 종번관계라는 국가관계 체계가 형성되었다. 일부의 주변 국가는 명·청 조정을 향해 “납공칭신(納貢稱臣, 조공을 바치고 신하를 칭함)”을 행하며, 명·청 황제의 책봉을 받았고, 명·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주국은 번속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무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조선, 유구, 베트남, 미얀마 등의 국가가 모두 중국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1879년 일본이 유구를 합병하면서부터 이러한 종번관계는 점차 해체되었다.”

36 中國教育部, 2019, 위의 책, 98~99쪽.

베트남의 경우 하권 ‘제2단원 중고시기의 세계’의 본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역사총횡’ 박스에서 ‘고대 베트남’을 다루며 번속국과 종번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 역사의 독자성보다 중국과의 정치적 예속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베트남은 예전에 교지로 불렸는데, 진한에서 당말까지 천여 년간 베트남 북부는 줄곧 중국의 중앙정권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당나라 말년에 이 지역은 분열 할기 상태가 되었다. 968년 베트남 북부의 지방통치자가 자립하여 왕이 되고, 이후 북송에 이르러 승인받아 번속국(藩屬國)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1010년 베트남이 이조(李朝)가 건립하여 국호를 ‘대월(大越)’로 정하고, 중국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관료제도를 시행했다. 명나라가 건립된 이후 줄곧 베트남에 직접 주현을 설치하고 베트남의 번속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후 베트남과 중국은 종번(宗藩)관계를 유지하다가 19세기 서방 식민세력의 침입을 받았다. (하권, 25쪽 <역사총횡: 고대 베트남>)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종번관계, 번속국으로 규정한 것은 ‘조공책봉’ 관계를 근거로 한다. 고대부터 전근대 한국사에 포함된 모든 나라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근대 모든 역사는 중국과 종번관계를 맺고 중국의 번속국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종번은 황실과의 관계에서 쓰이던 용어로, 주변 국가와의 국가관계에 쓰인 적은 없고 역사 용어로 개념화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사료상에 ‘외신(外臣)’, ‘속국(屬國)’, ‘번국(藩國)’ 등의 표현은 확인되지만, ‘종번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극히 근대적인 개념이다.³⁷

37 중국 학자들도 ‘종번관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들어 ‘번속’이라는 용어(이 용어 역시 한국학계에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비판과 논란이 많음)를 사용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 외교 의례 형식인 책봉-조공 관계를, ‘중번관계’라는 이름의 국가 관계 내지 체제로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번(속)국’의 중국 왕조에 대한 종속성을 은연중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번(속)국’으로 표현되는 여러 나라의 주체적 입장과 다양한 대중(對中)관계를 하나의 틀로 설명함으로써, 각 시기별·대상별 특수 상황에서 맺어진 상호성이 배제되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을 관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오인되어, 제국주의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³⁸

3) 중국의 동아시아 원조 전쟁 프레임

이상과 같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정치적 종주국으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진화시켜, 스스로 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질서의 수호자라고 위치 짓기에 이른다.³⁹ 중국은 중국이 참전했던 베트남전쟁, 임진왜란, 6.25전쟁 등을 중국의 항프·항미·항왜·항일 원조에 의해 승리한 전쟁으

한 연구가 많다[이다룡(李大龍), 2006, 『한당번속체제연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황송권(黃松筠), 2008,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 길림인민출판사; 푸바이천(付百臣) 주편, 2008, 『중조역대조공제도연구』, 길림인민출판사 등]. 그리고 ‘중번관계’라는 용어가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경험으로 등장한 종주권, 종주국, 속국의 개념을 번역한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중국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관계에 적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역사상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劉清濤, 2017, 「“宗主權”與傳統藩屬體系的解體-從“宗藩關係”一詞的來源談起」, 『中國邊疆史地研究』 2017-3). 중국 국정 교과서가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를 개념화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38 중국의 ‘중화민족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사 서술과 그에 연동하는 주변지역 및 민족(현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사와 동아시아사 포함) 역사 서술의 ‘제국성’에 대해서는 유희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역사교육』 132; 오병수, 2017, 「항전시기 중국의 “중국 근대사” 서술과 동아시아 인식의 변용 및 그 유산」, 『서강인문논총』 50 등 참조.
- 39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전 지구 발전의 공헌자이자 국제질서의 수호자(中國作為世界和平的建設者, 全球發展的貢獻者和國際秩序的維護者)”(中國教育部, 2020, 앞의 책, 141쪽)로 자처하고 있다.

로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다. 아래는 베트남전쟁의 사례이다.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이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에 항거한 민족해방 전쟁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치민이 이끈 베트남독립연맹(베트남공산당)은 베트남 북부에 베트남 공화국을 건립하였다. 프랑스 식민세력은 권토중래하여 베트남 남부에 괴뢰정권을 유지하였다. 중국의 원조 아래, 베트남인민은 항프전쟁의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미국의 방해로 베트남은 통일을 실현할 수 없었다. 베트공은 남월 정권에 반대하는 유격전을 펼쳤다. 미국은 이른바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먼저 남월 정권에 재정과 군사적 지원을 했고 이후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며 아울러 베트남 북부에 폭격을 가하였다. 소련, 중국 등의 큰 지원을 받은 베트남 군민은 미국의 침략을 격패시켰고, 미국 국내에서는 대규모 반전운동이 일어났다. 1973년 파리 정전 협정에 서명하며 미국은 베트남 침략 전쟁을 멈추었다. 1975년 베트남 남부가 해방되며 전국 통일을 실현하였다. 베트남 인민의 항미전쟁은 승리를 얻었다. (하권, 118쪽 <역사총횡: 베트남 전쟁>)

원조 전쟁 프레임을 통해,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 등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도움으로 각 나라는 침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역사상의 원조 전쟁을 통해 최종 현재와 미래의 세계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귀결임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세계 전략과도 연결된다.⁴⁰

이러한 중국의 위치 짓기로 인해 역사교과서에는 중국이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중국이 침략을 받아 위태롭게 된 상황은 서술하지 않거나 매우 축소하고 있

40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대일로’ 세계 전략과 관련해서는 同 『동북아역사논총』 70, 우성민의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동북아역사논총』 70, 2020) 참조.

다. 평화의 수호자이자 강국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는 역사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다.

4)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과 일국체제론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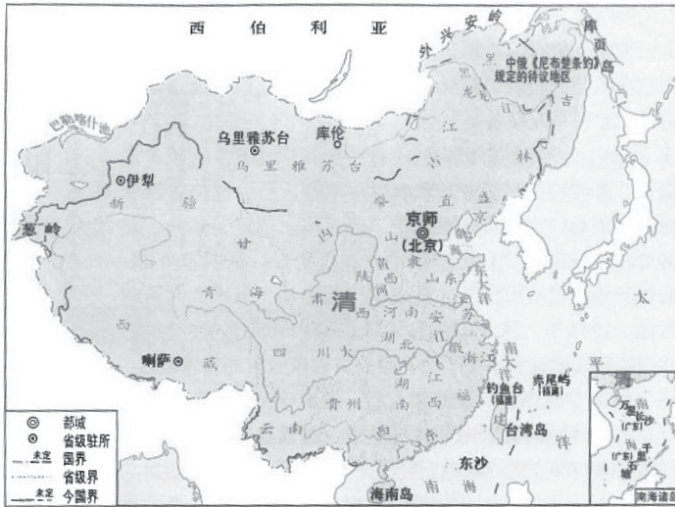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이 보이는 한국사 관련 지도와 마찬가지로 그 밖에 티베트, 베트남 북부, 몽골, 만주, 남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 남해 열도 등지가 나오는 역사 지도는 현재의 중국 국경선과 거의 중첩되어 있다. 그것은 이들 공간이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이며, 이 지역에 있었던 역사가 중국사라는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기준은 청조 때의 최대 강역이다. <지도 6>은 청나라의 최대 강역도로, 중국은 이때의 영토를 기준으로 중국사를 범주화한다. 근대와 현대에 역사문제로 연해주, 대만, 남해 도서에 대한 영토 주권이 일시 훼손되었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⁴¹ 앞서 사례로 든 <지도 3>~<지도 6>에서 공통적으로 남해 부분을 별도로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 부분만이 아니라 선사 고고학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현재 중국의 영토 위에 신석기 유적을 표시한 <지도 7>은 대만 아래쪽으로 해양 영토선을 표시하고 있다.⁴² 그리고 전체 지도에 담지 못한 해남도 아래의 남해열도를 박스 안에 별도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이들 지역이 중국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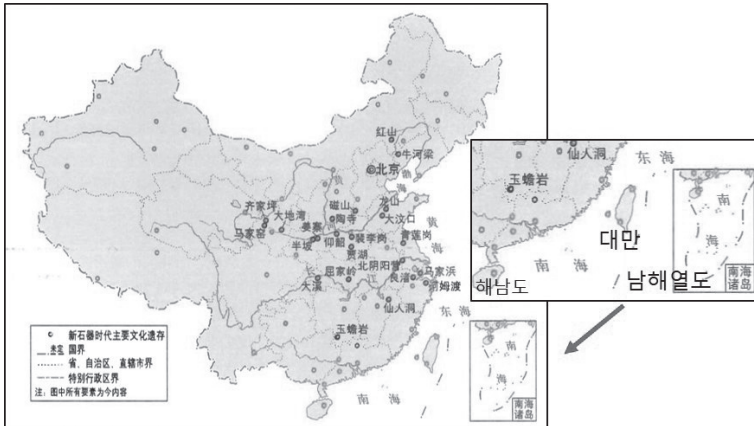
이러한 영토주의 역사관은 국제 분쟁을 유발하는 해양 영토와 일국체제의 대상에 대한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 대만 등 영토 분쟁

41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80쪽 <清朝疆域圖(1820年)>와 관련해서 교과서는 “청조가 ‘강역을 확정(다짐)[疆域的奠定]’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같은 책, 78쪽 학습초점), “왜 청조가 현대 중국의 판도를 기본적으로 확정(다짐)했다고 하는가”(같은 책, 80쪽 생각할 점)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진다. 이것은 현재의 영토와 역대 강역의 관계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42 中國教育部, 2019, 위의 책, 3쪽 <中國新石器時代文化遺存分布圖>.



지도 6 청조강역도(1820)



지도 7 중국 신석기시대 문화유적분포도

과 관련된 서술에서 역사적으로 대만이 중국 영토이고, 펑호 군도가 중국 동남 해강(海疆: 해양 영토)이라는 사료와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며, 제국주의 시기에 일부 영토를 침탈당했지만, 알타이제에서 일본이 탈취했던 동북지구, 대만과 부속도서, 펑호 군도 등이 다시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특기하고 있다.⁴³

신홍국가의 발전에서 ‘20세기 1960~1980년대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가 고속성장을 실현하고 신홍공업국가를 이뤘다’⁴⁴라는 설명에서 대만·홍콩을 빼 놓는 것도 이러한 중국의 영토주의 역사관과 일국체제 입장을 반영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보이는 한국사 서술의 문제점

『중외역사강요』의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차지하는 한국사 관련 서술의 비중은 일견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의 각 단원의 전체적인 인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머리말에 해당한다. 한국사 서술이 집중되어 있는 『중외역사강요(하)』의 ‘2단원 중고시기(5~15세기)의 세계’의 머리말에는 아시아와 관련해서 아랍·인도·일본만 언급되어 있고,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단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세계역사에서 5~15세기는 일반적으로 “중고시기”라고 불린다. ... 아시아에서는 아랍제국이 정치적인 안정, 경제 번영을 이루고, 동서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었다. 돌궐(투르크)인은 인도에서 텔리 술탄국을 건립하고, 일본은 다이카(大和)개신 이후 중앙집권국가를 건립하고 이후 막부가 실권을 장악하였다.(하권 14쪽 전체 15줄 중)

43 中國教育部, 2020, 앞의 책, 104쪽.

44 中國教育部, 2020, 위의 책, 129쪽.

본 내용에서도 일본사에 비해 한국사 서술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⁴⁵ 다른 단
 원에서도 일본, 인도, 아랍은 여러 차례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중고시기’ 뿐 아니라 근현대 시기의 한국사 역시 그렇다.
 제13과 중 ‘아시아의 각성’에서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과 제16과 중 ‘아시아 민
 족민주운동의 새로운 고조’에서 중국의 공산당 성립과 국공합작 등은 중요하게
 다루면서, 동아시아 민족운동에 영향을 준 3.1운동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일
 제 침략에 대해서도 중국 침략과 중국의 항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일제
 의 조선 식민지배에 관해서는 ‘1910년 일본이 조선반도를 병탄했다’와 전후 알
 타체제에서 ‘조선이 최종 독립된 것을 승인’이라는 짧은 문장만 있다. ‘일본군
 위안부’, 1930~1940년대 전시체제 강제동원, 독립운동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
 급하지 않았으며, 현대 한국사 역시 신흥국가 발전에서 국가명만 나온다. 갑오
 중일전쟁(청일전쟁)이나 6.25전쟁에 관련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지만,
 중국사를 다룬 『중외역사강요(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국사를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전쟁, 원조 전쟁사를 기술한 내용이다.

『중외역사강요』에서 동아시아 각 나라의 서술 비중은 중국이 현재 중시하는
 외교 대상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중외역사강요』에는 실제 한국사의 서술 분
 량이 적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중 본문에 직접 개별 역사가 기술된 나라는 많지
 않다. 앞서 살펴본 제4과에서 한국사 서술에 10줄 정도를 할애한 것도 상대적
 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정치성이 강
 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의 위상이나 중국이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
 도에 따라 역사 기술이 달라진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중국의 오랜 우방이고, 대한민국 역시 현재 중요한 외교
 대상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술되었지만, 베트남의 경우 하권 ‘중고시기’ 단

45 2단원 제4과 ‘중고시기의 동아시아’ 본문의 일본 서술 17줄, 한국 서술 10줄. 일본
 은 별도로 ‘탐구와 발전 코너’에 사카모토 타로(坂本太郎)의 『일본사』 중 일본의 쇠
 국정책에 대한 비평 8줄 소개.

원의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 베트남이 중국의 최우방이었던 시기에는 중국 역사교과서에 많이 서술되었으나 현재 양국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에 대한 서술이 많은 것은 일본의 국제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⁴⁶

결국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사와 한국사 서술의 비중은 중국의 현재 정치·외교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임의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별적인 역사 경험의 다소(多少)와는 별개로 분량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불균형한 동아시아사, 한국사 서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사를 다루는 『중외역사강요(하)』에서 한국사의 비중이 낮은 원인은 기본적으로 세계사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나 중국의 세계사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하권이 세계사를 다룬다는 것을 모르고 부분 부분을 읽다보면 세계사인지 중국사인지 모호할 정도로 중국사와 관련된 내용과 사료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세계사에서 중국사 서술이 증가하고, 중국사의 위상에 준하거나 대비할 만한 동아시아사 서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밖의 주변부 역사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중국을 강조하는 이러한 서술 태도로 인해, 한일 교류와 관련한 기술에서 간접적인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하나는 하권의 중고시기 일본사 서술에서 ‘진한 무렵 중국이민이 야철과 논농사 기술을 일본에 가져와 일본사회의 발전을 추동시켰다’고 서술 부분이다. 일본 고대 야철·벼농사·제방축조 기술 등이 고대 한국과 한반도 이주민에 의해 전래되었다는 것은 한·일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고대 한국인의 역할을 배제한 채 곧바로 중국에서 이주한 사

46 중국 역사교과서에 한국, 베트남, 일본의 서술 분량 차이가 중국의 대외관계와 중국이 인식한 대상국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김지훈 선생님(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의견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람들이 일본의 사회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집권국가 건립을 중국을 모방하여 ‘646년 다이카개신 이후 약 반 세기 만에’라고 기술한 반면, 한국은 7세기 말인 신라의 통일 이후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한국이 일본보다 늦거나 비슷한 시기에 중앙집권국가를 건립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⁴⁷ 고대 일본의 제도 정비에는 상당기간에 걸쳐 삼국이 영향을 끼쳤고, 다이카개신과 이후 중앙집권화에는 그보다 앞선 삼국의 중앙집권화 경험과 한반도 도래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⁸ 그런데 『중외역사강요』 등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고대 한국 또는 한반도 도래인의 역할과 영향은 빠지고 중국의 역할만 기술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IV. ‘용어’와 ‘첨삭(添削)’에 담긴 중화주의

중국 문자는 소리글자인 한글과 달리 뜻글자이다. 글자 한 자 한 자 속에 뜻을 담고 있어, 공문서나 역사책, 문학 작품을 가릴 것 없이 글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특정 ‘용어’에는 사용자의 목적성이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중국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 당 중앙과 국가의 역사 교육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민족 정책과 역사 연구에서 북방 지역과 중국 중원 지역, 소수민족과 한족의 교류와 융합에서 ‘융합(融合)’이라는 용어 대신 ‘교유

47 中國教育部, 2019, 앞의 책, 25쪽.

48 참고로 2020년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교과서는 도리어 한반도 이주민이 도작을 전래하였다는 사실과 다이카개신 등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중국과 고대 한국의 영향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東京書籍, 『中學校 社會(歴史)』, 32·37쪽; 山川出版, 『中學校 社會(歴史的分野)』, 30·36~37쪽 등.

(交融)’이라는 용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역사교과서에서 ‘융합’으로 표현되던 것이 ‘교용’으로 대체되었다. ‘교용’이라는 단어가 중화민족의 형성에 다민족이 상호 교류하며 융합되었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족(漢族)의 역사가 중심이었던 중국사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과거의 여러 소수민족이 모두 적극적으로 교류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⁴⁹ 이러한 ‘교용’의 작용은 중국 영토 또는 역사 공간의 확장이라는 결론을 수반한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영토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지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당조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발해를 포함)은 조국의 변방 지구 개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라는 식의 서술의 명분을 얻게 된다.

‘중변관계’라는 용어는 『중외역사강요(상)』의 〈역사총횡〉에서 “경제·문화 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명·청 시기에 중국과 주변 일부 나라들 사이에서 형성된 국가관계 체제이며, 중주국은 번속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⁵⁰ 그렇지만 이 용어는 글자 자체에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유사한 국가 간 위계와 제도적 중주국-속국 관계를 내포함으로써 이미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일방적 상하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교육받는 중국 학생들은 중국의 제국주의 질서에 편제되어 있는 하나의 동아시아 체제를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고, 자국 중심의 불평등한 동아시아사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조공책봉’, ‘납공칭신(納貢稱臣)’의 형태는 전근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동일한 형태를 보인 ‘고구려’

49 위홍웨이(于宏偉)는 “민족사의 내용은 교육에서 역사상 각 민족의 상호 “交往·交流·交融”의 역사과정을 학습하여 각 민족이 공동으로 중화문명을 창조하였고, 모두 다민족 통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于宏偉, 2020, 『統編高中歷史教材“中華民族共同體”內容評述』, 『教育與社會科學綜合』2020-3, 52쪽.

50 주) 35 참조.

‘발해’ 등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주장하는 만큼, ‘중번관계’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중국사로 편입되거나 주장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중화주의로 빚어낸 ‘중화민족’, ‘중화문명’ 등도 동일한 확장성을 가진 개념으로, 동아시아 민족과 문화는 언제든지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으로 각색될 위험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명권을 설정하고, 동아시아 문명의 종주국이자, 세계문명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로 자신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이민족의 국가는 모두 지방 정권으로 격하시키고, 발해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역사 발전과 영토 확장이 아닌 조국(하나의 중국)의 변장지구를 개발한 역사로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 중국 영토 밖의 동아시아사는 ‘중번관계’를 맺은 번속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방정권보다는 조금 낫지만, 중국의 종주권 아래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문화·정치적 우위와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중화민족’, ‘중화문화’ 등 확장성을 갖는 중화주의에 언제라도 편제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중국은 민족의 개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먼, 고대부터 중화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선형적으로 중화민족을 이루는 여러 소수민족이 일찍부터 통일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원 왕조에 대해 공통의 조국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과 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재적 필요에 따른 자의적 해석이다.⁵¹

중국 역사교과서가 역사의 주체로서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중화민족과 찬란한 중화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 강화라는 맥락과 연결된

51 중원과 사방이라는 지정학적 서열구조에 임의로 집어넣고, 지역적·문화적 우열의식에서 비롯된 화이관과 책봉-조공관계에서 파생된 의례적 외교관계의 다양성을 배제한 역사 해석은 팽창적 문화주의로서의 중화주의 역사관을 잘 보여준다. 윤희탁, 2006a,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中華意識」, 『중국사연구』 45, 288쪽.

다. 그에 따라 영광의 유무로 교과서 서술에서 선택과 배제가 이뤄졌고, 중원왕조와 병존했던 다른 민족과 관련한 서술에서 대립과 갈등, 중원 왕조의 탄압 등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서술 배제, 삭제의 방식은 한국사 관련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예로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본/검정제)>에 따른 중국 역사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역사는 진한(秦漢)시대부터 나온다. 고등학교 『중국고대사』 제6절 ‘양한(兩漢)시기의 대외관계’ 중 ‘조선과의 관계’라는 소제목에서 삼한과의 교류와 특산품에 대해 서술하였고, 중국인 수만 명이 피난한 사실과 조선의 특산인 단궁과 과하마를 중국이 수입하고, 중국이 동경, 칠기, 철제 생산도구를 수출했다는 점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과 한사군의 설치에 대한 기술은 삭제되었다. 한나라의 침공과 지배를 강조할 경우 중국이 지속적으로 임진왜란이나 6.25전쟁을 ‘항왜·항미원조’ 프레임으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도왔다는 서술 내용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유의할 만하다.⁵²

이렇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런데 『중외역사강요』에서는 7세기 말 이전 한국사 서술을 아예 빼버림으로써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이어지는 한국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살펴본 지도 자료를 통해 중국의 역사 영토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중국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사인 상권과 세계사인 하권에서 모두 생략함으로써 고구려사가 중국사인지 한국사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건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정립형세도>(지도 4)에 국명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역사 영토 범위 안에 고구려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수와 고구려의 전쟁을 ‘정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52 김지훈·정영순, 2004, 앞의 글, 163~165쪽 참조.

교과서에는 수와 고구려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고구려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수의 ‘침공’은 침략 전쟁이었다. 그런데도 ‘정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지방정권인 고구려가 중앙인 수에 반기를 들거나 잘못을 저질러 징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흉노와 한나라의 전쟁이나 돌궐과 당나라의 전쟁, 몽골과 송나라의 전쟁 등을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통일을 유지하거나 통일하기 위한 내전으로 본 것과 성격이 같다. 설명을 배제하여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중화’라는 개념과 이와 관련된 중화문명, 중화민족의식, 중화국가, 중화 강역,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등을 중화주의 혹은 신(新)중화주의 역사인식이라고 부른다.⁵³ 현재 중국에서 ‘중화’는 당면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적 접합체 역할, 특히 민족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국가의 통일을 정당화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 중화는 과거에는 지리 개념인 ‘중국(中國: 중원, 중토)’과 인문 개념인 ‘화하(華夏: 족명)’의 결합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이라는 지역과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류 및 그들이 창조한 문화의 통일체’로 인식되고 있다.⁵⁴ 자연, 민족, 문화개념까지 포괄한 광의의 개념으로, 매우 탄력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사교과서에 직접적인 서술이 없다고 해도, 한국사를 포함한 동아시아사는 중국사에 편입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⁵

53 윤휘탁, 2006a, 앞의 글; 윤휘탁, 2006b, 『新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54 윤휘탁, 2006a, 위의 글, 262쪽.

55 오병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서 ‘근대사’가 성립된 것은 1930년대이다. 근대 역사학의 발전과 일제의 침략으로 고조된 민족주의가 그 배경이다. 邊疆과 屬國에 대한 전통적 지배권 상실 등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적 동아시아 담론에 대응하면서 스스로의 민족, 강역, 문화를 절대화하는 한편 기왕의 동아시아 인식을 재구성하였다. 전통적인 중화주의

이상과 같이 중국 국정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는 의도된 ‘용어’ 사용과 ‘침식’을 통해 중화주의로 재구성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서술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중요도에 따라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며 그에 맞는 역사를 서술하여, 주변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타자화되고 종속적인 불균형한 역사상(歷史像)을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중화주의로 무장한 ‘중번관계’, ‘중화문명’, ‘중화민족’ 등 확장성을 가진 역사 개념과 인식에 의해 강제로 중국사에 포섭되어 역사를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V. 맺음말

이상 『중외역사강요』를 중심으로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 고대사와 동아시아사 서술의 내용과 역사인식을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은 스스로 강대국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구현하려고 하며, 다양한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발맞춰 중화민족주의와 대국 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국사와 세계사의 전면적 재

를 대신하여 자국의 안전과 문화적 통합의 대상으로서 동아시아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동아시아 인식은 현재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는 역사 서술로 계승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자국사 서술은 ‘중화민족’사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제국적 역사 서술 방식과 인식론적 방법을 공유하는 한편, 내부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주변에 대한 팽창을 속성으로 하는 이중의 ‘제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주도의 질서체계와 중국 문화를 매개로 통합되어야 할 지역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930년대 『新標準初中本國史』(周子同, 1935, 開明書店) 제4장 ‘중화민족의 확대’에서 만주족이 입관 후 한족에 동화되었고 몽골, 티베트 신장, 묘족은 물론 조선,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藩屬화함으로써 현재 중화민족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였다. 청의 강역과 조공국을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조선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와 함께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로 파악되었다(오병수, 2017, 앞의 글, 273~274쪽). 현재 중국 역사교과서에 조선을 중화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중국 소설과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보면, 이와 같은 인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중외역사강요』와 같은 국정 역사교과서이다.

역사학의 성과를 교육현장에서 전달하는 역사교과서는 서술 방식과 내용이 정치적인 문제에 속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 현장에서의 역사교육은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의 구체적 서술이 이런 전제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⁵⁶ 중국 특색사회주의 체제하의 역사교과서 편찬을 국가 권력 내지 의지라고 표명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러한 성격이 더욱 분명하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은 민족주의 역사 서술과 상호 배타성을 갖는다. 그런데 중국 역사교과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서술되던 것이 점차 민족주의 중심의 서술로 변화하면서 자체 논리의 모순을 극복해갔다.⁵⁷ 신석기시대의 전통을 이어, 전국시대에 이미 ‘중국’, ‘중화’ 개념이 형성되고 삼황오제라는 인문시조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갔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가지고 있던 역사 서술상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시기부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다거나 다원적 ‘중화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고대부터 민족 ‘교융(交融)’에 의해 중화민족과 역대 강역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서술을 강화하며 재진화를 거듭하였다.⁵⁸

현재 중국 내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중국사로 주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국 영토는 아니지만 변경지역의 교지함을 이루는 역사(예로 고구려, 발해)를 지방정

56 박영철, 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 111쪽.

57 박영철, 2002, 위의 글, 114~119쪽.

58 고대 문명사와 인문시조 및 유물사관에 입각한 서술 경향은 이유표의 논문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동북아역사논총』 70, 2020) 참조.

권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중국 영토와 관련이 없지만 영토 내 지방정권과 비슷한 외교관계나 교류를 맺었던 국가들(예로 베트남, 신라, 고려, 조선)을 종번관계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갈등과 대립에 대한 내용이나 침략에 대한 서술은 삭제되고, 독자적인 문화나 발전에 대한 기술은 축소되었으며, 중국의 경제·문화·정치적 영향이 강조된 심하게 불균형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서술이 이뤄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자료

中國 教育部, 2019, 『中外歷史綱要(上)』, 人民教育出版社.

中國 教育部, 2020, 『中外歷史綱要(下)』, 人民教育出版社.

단행본

권오중 외, 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오강원 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윤세병, 2018,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경인문화사.

윤희탁, 2006b, 『新중화주의: '중화미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이개석 외,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홍승현·송진·최진열·허인욱·이성제, 2014,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논문

권은주, 2010,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反唐활동과 발해건국」, 『백산학보』 86.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 연구』 17.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역사 교학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검토」, 『중국근현대사연구』 23.

박영철, 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

손영중, 1987, 「대령강반의 옛장성에 대하여」, 『력사과학』 2.

안병우,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75.

안진준, 2017, 「1990년대 이후 한국학계의 樂浪郡 연구현황과 문제의식」, 『인문학연구』 34.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교과서(2016년 판)의 한국고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역사교육』

- _____, 2017, 「항전시기 중국의 “중국 근대사” 서술과 동아시아 인식의 변용 및 그 유산」, 『서강인문논총』 50.
- 우성민, 2018, 「신간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 개편 동향과 한국사 관련 서술 검토」, 『중국학연구』 86.
- _____, 2020,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70.
- 유용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1.
- 윤휘탁, 2006a,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中華意識」, 『중국사연구』 45.
- 이유표, 2020,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70.
-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 한규철, 1992, 「발해건국과 남북국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 5.
- 황유진, 2017,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양상과 문제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于宏偉, 2020, 「統編高中歷史教材“中華民族共同體”內容評述」, 『教育與社會科學綜合』 2020-3.
- 劉清濤, 2017, 「“宗主權”與傳統藩屬體系的解體-從“宗藩關係”一詞的來源談起」, 『中國邊疆史地研究』 2017-3.
- 張海鵬, 2019, 「統編高中歷史教科書的學科體系和學術體系-適應和掌握統編高中歷史教材《中外歷史綱要》(上)的意見」, 『課程·教材·教法』 39-9.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권은주

중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강조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중국 중심의 세계사를 기술하며, 세계사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새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중국사 자체를 새롭게 정리하고, 세계사는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주변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중국 중심으로 서술되어, 이를 교육받는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영향만을 받은 동아시아사라는 불평등한 역사 인식을 가질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는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 필수 과목인 『중외역사강요』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와 동아시아사 관련 서술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교과서에 사용되는 ‘역사용어’의 함의, ‘침략’을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신(新)중화주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중외역사강요,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신(新)중화주의, 중국의 한국 고대사 서술, 중국의 동아시아사 서술, 중국의 역사인식, 중국의 역사교육

ABSTRACT

Analysis of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n History and East Asian History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中外歷史綱要』)

Kwen Eunju

Through the recent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for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China has sought to emphasize the country's multi-ethnic yet unified identity as well as characteristic socialism based on Marxist materialism, thereby reinforcing patriotic education, in what is seen as an attempt to secure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modern Chinese state. Furthermore, by rewriting world history to make it centered on China, China has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the nation's role in world history.

These elements are reflected in the new nationalized history books, wherein Chinese history has been reorganized while world history has been rewritten in a China-centric fashion. As a result, the history of the peoples and countries surrounding China has also been described in a

China-centric way. Thus, there are concerns that Chinese students who are educated through such textbooks may perceive East Asian history solely as a culmination of Chinese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descriptions of ancient Korean history and East Asian history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中外歷史綱要』), one of the nationalize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used in Chin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rise of the new Sino-centricism, which is evident in the editing of the textbooks, and the undertones of historical terminologies used in the textbooks.

Keywords: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中外歷史綱要』), Chinese nationalized history textbook, Chi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New Chineseism(新中華主義), Description of Chinese ancient Korean history, Description of China's East Asian History, Chinese history perception, History Education in China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이유표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과정표준』(2017)을 통해 본 고대문명사 부분 내용 특징
- III. 『중외역사강요』 고대문명사 부분의 내용적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7년 중국은 『보통 고등학교 역사 과정 표준(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 2017』¹(이하 『과정표준』(2017)로 약칭)을 발표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였다.² 『과정표준』(2017)이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총 여섯 과목으로, 필수교과인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상/하)를 비롯하여, 선택적 필수과목(選擇性必修)³인 『국가제도와 사회치리(國家制度與社會治理)』, 『경제와 사회생활(經濟與社會生活)』, 『문화교류와 전파(文化交流與傳播)』, 그리고 선택과목인 『사학입문(史學入門)』과 『사료강독(史料閱讀)』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식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중외역사강요』(이하 『강요』로 약칭)다.

『강요』의 후기에 의하면, 『강요』는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조직하고, 중국 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의 장하이펑(張海鵬) 연구원⁴과 수도사범대학(首都

* 투고: 2020년 10월 7일, 심사 완료: 202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0년 11월 25일

- 1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年版2020年修訂)』,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2 중국은 공산화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다가 1988년 이후 검정제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유리의 「역사교과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 개혁-」(『역사교육』 96집, 2005) 참고.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윤세병의 「중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 65집, 2017)와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역사교육연구』 33호, 2019) 참고.
- 3 선택적 필수과정은 학생 개인의 흥미에 따라, 심화학습의 필요에 따라 선택 이수하는 과목을 말한다.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年版2020年修訂)』,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9쪽.
- 4 장하이펑(張海鵬, 1939~):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샤오간(孝感) 출신, 1964년 우한대학 역사학계 졸업 후 중국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재직(1977년 중국사회과학원으로 재편),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2004년 퇴임), 중국사학회 회장, 제10대 전국인민대표를 역임. 『중국근대사연구(中國近代史研究)』(공저, 福建人

師範大學) 쉬란(徐藍) 교수⁵가 총편집을 맡아 편찬된 것으로, 전국 11개 성(省)·시(市)·자치구(自治區)에서 시범 교육을 거쳤다고 한다.⁶ 이는 정식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하기 전, 수정과 보완을 위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강요』는 2019년 9월부터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하이난성(海南省),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 등 6개 성·시에서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⁷ 교재의 출판은 인민교육출판사(人民教育出版社)가 담당했고, 지도는 중국지도출판사(中國地圖出版社)가 제작하였다.⁸

중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재 중국의 정보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3년 『과정표준』을 발표한 이후, 장고의 시간을 갖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과정표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에 나온 중학교용 『역사과정표준(歷史課程標準)』과도 6년의 차이가 있다. 그 까닭에 대해 윤세병은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공산당은 교과서 편찬이 국가 권한임을 밝히고 국가교재제도와 국가교

民出版社, 2005), 『중국근대통사(中國近代通史)』(공저, 江蘇人民出版社, 2007) 등 근 300편의 논저를 발표함.

- 5 쉬란(徐藍, 1947~): 중국 베이징 출신, 수도사범대학 역사학과 교수, 1990년 수도사범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 중국사학회 부회장, 베이징시역사학회 상무이사 재임. 대표 저서로 『영국과 중일전쟁(英國與中日戰爭) 1931~1941』(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1)이 있으며, 국가급 교재 『세계사(世界史)』(吳于廑, 齊世榮 주편, 高等教育出版社, 1994)에 참여하는 등 교재 집필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
- 6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성(浙江省), 산둥성, 허난성(河南省), 광둥성(廣東省), 스촨성(四川省),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하이난성 등의 교육과학원(소), 교연실 및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시범 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 教育部組織編寫, 2019,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7쪽; 教育部組織編寫, 2020, 『中外歷史綱要』(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7 樊未晨, 2019, 「普通高中三科統編教材今秋在六省市使用」, 教育部政府門戶網站, 2019-8-28, http://www.moe.gov.cn/fbh/live/2019/51084/mtbd/201908/t20190828_396234.html(2020. 9. 29. 접속)
- 8 教育部組織編寫, 2019, 『中外歷史綱要』(上), 197쪽.

재위원회를 요구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⁹ 바로 시진핑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교과서 국정화를 구상했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2017년에 『과정표준』이 발표된 것은 2018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과 동시에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¹¹

이는 또한 중국이 추진했던 이른바 ‘역사공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투 트랙의 역사 ‘공정’, 곧 변지(邊地)지역의 역사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인식으로 정리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신강항목(新疆項目), ‘서남변강항목(西南邊疆項目)’, ‘북강항목(北疆項目)’ 등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였고, 내지(內地)의 역사적 시원을 밝히고자 추진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1996~2000)과 중원지역 및 주변지역의 문화적 시원을 밝히고자 추진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2001~2015)’이 완료된 시점이었다. 바로 2017년은 이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

9 윤세병, 2017, 「중국의 역사와 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집, 92~93쪽.

10 그렇다면 왜 국정교과서는 시진핑 집권과 동시에 출간되지 않고, 집권 2기에 들어 서서야 출간되었는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시진핑 집권 후 국정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 시진핑의 사상과 정책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출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출간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사이에 얽혀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가 출간부터 전국으로 일제 적용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11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3호, 25쪽; 김지훈은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당장(中國共產黨黨章)』에서 “당과 정부와 군과 민간과 학교에서 동서남북, 중앙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는 방침의 영향이 중국 국정 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김지훈, 2019, 「국가의지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호). 이 방침은 『강요』에도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된 대형 역사 ‘공정’의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중국적’ 역사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준비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하자마자 국제사회에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 이념을 제시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은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연설에서 ‘운명공동체’ 이념을 제기한 이후,¹² 2015년 9월 28일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한 바 있고,¹³ 2017년 2월 10일에는 유엔 결의에 채택되기도 하였다.¹⁴ ‘인류운명공동체’론은 결국 중국 내부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확장론으로,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중화민족’이 평화공존을 해나가는 것과 함께, 인류가 맞이할 갖가지 도전 또한 세계 인류가 ‘평화공존’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자(堅持和平發展道路,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¹⁵고 호소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사를 다룬 『강요』 상권 말미의 ‘활동과제’의 주제가 ‘애국주의와 통일 다민족 국가의 진전(家國情懷與統一多民族國家的演進)’이라는 것과, 세계사를 다룬 『강요』 하권 말미의 ‘활동과제’가 ‘세계로 눈을 돌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12 習近平, 2013, 「順應時代前進潮流, 促進世界和平發展」, 國家主席習近平在莫斯科國際關係學院的演講(全文), 中國政府網, 2013-3-23, http://www.gov.cn/ldhd/2013-03/24/content_2360829.htm(2020. 9. 29. 접속)

13 習近平, 2015, 「攜手構建合作共贏新伙伴, 同心打造人類命運共同體」, 人民網, 2015-9-28, <http://theory.people.com.cn/n1/2018/0104/c416126-29746010.html>(2020. 9. 29. 접속)

14 新華社, 2017b, 「聯合國決議首次寫入“構建人類命運共同體”」, 新華網, 2017-2-10, http://www.xinhuanet.com/world/2017-02/11/c_1120448960.htm(2020. 9. 29. 접속)

15 新華社, 2017a, 「習近平提出, 堅持和平發展道路,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新華網, 2017-2-10, http://www.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18/c_1121821003.htm(2020. 9. 29. 접속)

을 추진하자(放眼世界,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배경이 무엇인지 여과 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사를 재편하고,¹⁶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세계사’ 속으로 ‘중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사’를 다시 정립하겠다는 의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사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대내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민족 간의 갈등, 대외적으로 중국의 패권화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으로, 온전히 동시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두 담론을 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자연적 장벽 등의 연유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문명사 서술에 이 두 담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이를 위해 기존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 내용 구성을 꾸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강요』의 고대문명사 부분, 곧 『강요』 상권의 제1단원 「중화문명의 기원에서 진한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과 공고(從中華文明起源到秦漢統一多民族封建國家的建立與鞏固)」, 그리고 하권의 제1단원 「고대문명의 탄생과 발전(古代文明的產生與發展)」의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반영된 두 담론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II. 『과정표준』(2017)을 통해 본 고대문명사 부분 내용 특징

『과정표준』(2017)은 2014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에 확정된 것으로 <표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¹⁷

16 윤세병과 김지훈은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선명한 ‘국가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세병, 2019, 앞의 글; 김지훈, 2019, 앞의 글.

〈표 1〉 『과정표준』(2017) 목차

중국어	번역문 ¹⁸
一, 課程性質與基本理念 (一) 課程性質, (二) 基本理念	1. 과정의 성질과 기본이념 (1) 교육과정의 성질, (2) 기본이념
二, 學科核心素養與課程目標 (一) 學科核心素養, (二) 課程目標	2. 학과 핵심 역량과 교육과정의 목표 (1) 학과의 핵심 역량, (2) 교육과정의 목표
三, 課程結構 (一) 設計依據, (二) 結構, (三) 學分與選課	3. 교육과정의 구성 (1) 설계의 근거, (2) 구성, (3) 시수 및 선택과목
四, 課程內容 (一) 必修課程, (二) 選擇性必修課程 (三) 選修課程	4. 교육과정 내용 (1) 필수과정, (2) 선택 I 과정, (3) 선택 II 과정
五, 學業質量 (一) 學業質量內涵, (二) 學業質量水平 (三) 學業質量水平與考試評價的關係	5. 학업의 질적 표준 (1) 학업의 질적 내용, (2) 학업의 질적 수준 (3) 학업의 질적 수준과 시험 평가의 관계
六, 實施建議 (一) 教學與評價建議 (二) 學業水平考試與命題建議 (三) 教材編寫建議 (四) 地方和學校實施本課程的建議	6. 실시 건의 (1) 교수 학습과 평가 건의 (2) 학업수준 평가와 대입시험 출제 건의 (3) 교과서 집필 건의 (4) 지방과 학교의 본 교육과정 실시 건의
附錄1 歷史學科核心素養水平劃分 附錄2 教學與評價案例	부록A 학과 핵심 역량의 수준 부록B 교수·학습과 평가(예시)

이 중 제4장 ‘교육과정 내용(課程內容)’에는 각 과목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정표준』(2003)에서는 이 부분의 표제가 ‘내용표준(內容標準)’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과정표준』(2017)의 ‘교육과정 내용’에 기록된 『강요』의 고대 문명사 부분의 내용을 2003년판의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 고대문명사 부분의 설명을 보도록 하자.

〈표 2〉를 통해 『과정표준』(2017)과 기존 2003년판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17 윤세병, 2017, 앞의 글, 106쪽.

18 윤세병, 2017, 위의 글, 106쪽의 번역 참고.

〈표 2〉 『과정표준』(2017)과 2003년판 비교: 중국 고대문명사 부분

시기	『과정표준』(2017)	『과정표준』(2003)
선사 및 삼대	<p>1.1 초기 중화문명(『강요』 상) 석기시대 중국 경내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을 이해하여, 중화문명의 기원 및 사유제, 계급, 그리고 국가 탄생의 관계를 인식한다. 갑골문, 청동명문 및 기타 문헌 기록을 통하여 사유제, 계급 및 초기 국가의 특징을 이해한다.</p>	<p>-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조와 특징(『역사』Ⅱ) (1) 고대 중국 농업의 주요 경작 방식과 토지제도를 알고, 고대 중국 농업 경제의 기본 특징을 이해한다.</p>
춘추 전국	<p>1.2 춘추전국 시기의 정치, 사회 및 사상 변화(『강요』 상) 춘추전국 시기의 경제발전과 정치 변화를 통하여, 전국 시기 변법운동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노자, 공자 학설을 이해하고, 맹자, 순자, 장자 등을 통하여, '백가쟁명'의 국면 및 그 의미를 이해한다.</p>	<p>- 고대중국의 정치제도(『역사』Ⅰ) (1) 종법제와 분봉제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여, 중국 초기 정치제도의 특징을 인식한다. (2) '시황제'의 내력과 군현제 건립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중국 고대 중앙집권제도의 형성 및 그 영향을 이해한다. - 중국 전통문화 주류 사상의 변천(『역사』Ⅲ) (1) 제자백가를 알고, 춘추전국 시기 백가쟁명 형성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공자·맹자와 순자 등 사상가 및 유가 사상의 형성을 이해한다. (2) 한나라 유학이 정통사상으로 된 역사적 사실을 안다.</p>
진한	<p>1.3 진한 대일통 국가의 건립과 공고(『강요』 상) 진나라의 통일 업적과 한나라의 삭번(削藩), 강도 개척, 독존유술 등의 정책을 이해하여,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 및 공고의 중국 역사상의 의미를 인식한다. 진한 시기의 사회 모순과 농민 기의를 이해하여, 진나라 붕괴와 양한 쇠퇴의 원인을 인식한다.</p>	

먼저, 『과정표준』(2003)에서 정치사(『역사』Ⅰ), 경제사(『역사』Ⅱ), 문화사(『역사』Ⅲ)로 나뉘어 있던 '내용표준'이 『과정표준』(2017)에서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는 각 주제별로 나뉘어 있던 필수 교과과정을 통사적으로 합쳐서 편찬

하겠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내용적으로도 『과정표준』(2017)이 교과서 서술 기초가 더욱 상세해 졌는데, 이는 각 내용의 집필 ‘표준’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교과서의 장절을 요약한 느낌을 준다. 기존의 ‘내용표준’이라는 표제를 ‘교육과정 내용’으로 변경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물사관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일단 『과정표준』(2003)에서 세 차례 등장하는 ‘유물(唯物)’이라는 단어가 2017년판에서는 51차례나 나타난다. 특히 ‘내용표준’에서는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는데, 2017년판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31차례나 보인다. 량옌(梁燕)은 『과정표준』(2003)은 ‘역사유물주의의 기본관점과 방법을 학습’¹⁹한다는 문장만 있을 뿐 역사유물주의의 기본관점과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2017년판²⁰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²¹ 이는 <표 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판은 중국 초기의 농업, 제자백가 사상의 전개, 그리고 중국 고대 중앙집권제 형성까지의 서술 기초를 간단히 밝혔지만, 2017년판은 여기에서 ‘사유제’와 ‘계급’, ‘사회 모순’과 ‘농민 기의’ 등 유물사관의 핵심 용어를 표면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진한(秦漢) 왕조에 대해서는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 및 공고’의 중국 역사상의 의의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드러낸 것 또한 특징이다. 개혁개방이

1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5쪽.

20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年版2020年修訂)』, 14쪽, “인류사회 형태가 밑에서 위로 발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변증관계, 경제기초와 상부구조 사이의 상호작용,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민군중의 중요한 작용 등 유물사관이 과학적 역사관임을 이해하고, 인류역사 발전의 전체적 추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유물사관을 역사적 학습과 탐구에 응용하고, 아울러 유물사관을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지도 사상으로 삼는다.”

21 梁燕, 2018, 『2003年版與2017年版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比較』, 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4쪽.

후, 사회주의 지배이념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 중화민족주의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염황자손(炎黃子孫)’의 구호와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조(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²²이론이다.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주의는 그동안 시소처럼 작용하면서 중국을 들어 올리는 지배이념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과정표준』(2017)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시소가 아닌 중국을 받치는 두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석기시대(石器時代)의 ‘국가 탄생’과 청동기시대 ‘초기 국가’의 특징을 이해하는 부분이 새로 첨가된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표준’에서 선사시대의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이번 교육과정 ‘표준’에서는 국가를 강조하는 정치적·민족적 측면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1996년부터 중국이 청동기시대 왕조의 연대를 확정 짓기 위해 추진했던 ‘하상주단대공정’²³과 중국 전역의 선사 유적을 대상으로 중국 문화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 추진한 ‘중화문명탐원공정’²⁴이 완료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어서 서양의 고대문명사 부분의 내용 서술을 보도록 하자.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과정표준』 사이에는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과정표준』(2003)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제도와 문화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2017년판에서는 ‘초기 인류 문명’의 탄생, ‘각 문명 고국’, ‘고대 각 대제국’ 등 ‘표준’ 범위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제한하

22 費孝通, 1988,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 等, 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3 夏商周斷代工程傳家組 編著, 2001,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김경호·심재훈·민후기·최진묵, 2008,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동북아역사재단.

24 박양진 등, 2007, 『중화문명탐원공정과 중국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史一棋, 2018, 「“探源工程”成果: 考古實證中華文明五千年」, 新華網, 2018-5-29,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29/c_1122901854.htm(2020. 9. 29. 접속)

〈표 3〉 『과정표준』(2017)과 2003년판 비교: 세계 고대문명사 부분

시기	『과정표준』(2017)	『과정표준』(2003)
선사~고대	<p>1.15 고대문명의 탄생과 발전 초기 인류 문명의 탄생을 알고, 각 문명 고국 발전의 서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고, 아울러 이러한 특징이 형성된 서로 다른 시간적·공간적 조건을 분석하고 인식한다. 고대 각 대제국의 지역적 영향과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초기 관계를 인식한다.</p>	<p>-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치제도 (1) 그리스 자연 지리 환경과 그리스 도시국가 제도의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이해하고, 서방 민주정치가 탄생한 역사적 조건을 인식한다. (2) 아테네 민주정치의 주요 내용을 알고, 민주정치의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인식한다. (3) 로마법의 주요 내용 및 로마제국 통치에서 로마법의 작용을 이해하고, 인류 사회 생활에서 법률의 가치를 이해한다.</p> <p>- 서방 인문정신의 기원 및 그 발전 (1)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학과와 소크라테스 등의 사람의 가치에 대한 서술을 이해하고, 인문정신의 함의를 이해한다.</p>

지 않았다. 이는 지난 교육과정에서 그리스와 로마 위주로 편성한 세계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특히 ‘각 문명 고국 발전의 서로 다른 특징(各文明古國發展的不同特點)’, ‘서로 다른 시공간적 조건(不同時空條件)’,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초기 관계(不同文明之間的早期聯系)’ 등 ‘서로 다른(不同)’이라는 말이 유독 강조되는 것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곧 다양한 문명 발생의 자체적 특징을 살펴본 후, ‘문명 사이의 초기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류 또는 교용을 통한 인류 문화의 탄생을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중국이 강조하는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과정표준』(2017)의 ‘고대문명사’ 부분 내용을 2003년판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과정표준』의 체제상의 변화 외에도, 내용적으로 ‘유물사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점, 그리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적 이념 또한 고대문명사에까지 적용된 것을 살펴보았다. 기존 『과정표준』에는 드러나지 않

있던 석기시대의 국가 탄생과 청동기시대 초기 국가의 특징을 이해하는 부분이 새로 첨가된 것 또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바탕으로 추진된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이 완료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세계사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눈에 띄는데, 바로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기록된 교과서 편찬 기초가 ‘서로 다른’, ‘문명 고국’, ‘시간적·공간적 조건’, ‘문명 사이의 초기 관계’를 강조하는 기초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중국이 그리는 세계사의 모습, 그리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인류운명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과정표준』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체현되었을까?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중외역사강요』 고대문명사 부분의 내용적 특징

전술했듯이 『강요』에서 고대문명사를 다루는 부분은 『강요』(상)의 제1단원과 『강요』(하)의 제1단원이다. 그 단원 구성을 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그 시기를 보면 『강요』(상)의 중국은 진한 시기(서기 220년)까지, 『강요』(하)의 세계사는 서로마의 멸망(서기 476년)까지다. 서로마의 멸망은 중국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양자를 같은 ‘고대문명사’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강요』(하) 제2과

<표 4> 『중외역사강요』 고대문명사 부분 목차

『강요』(상)	『강요』(하)
제1단원 중화문명의 기원에서 진한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과 공고 제1과 중화문명의 기원과 초기 국가 제2과 제후 분쟁과 변법 운동 제3과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 제4과 서한과 동한-통일 다민족 봉건국가의 공고	제1단원 고대문명의 탄생과 발전 제1과 문명 탄생과 초기 발전 제2과 고대 세계의 제국과 문명의 교류

의 서술 중점이 로마제국의 전성기까지, 곧 중국의 양한(兩漢)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양자를 같은 ‘고대문명사’ 범위로 설정해도 무방할 듯하다.

다음으로 분량을 보면, 양자 모두 제1단원을 범위로 하지만, 『강요』(상)은 총 4과 24페이지, 『강요』(하)는 총 2과 1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분량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 또한 『강요』(상)에 비중을 더 둘 것이다.

그리고 내용 분석의 틀은 위의 『과정표준』(2017)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요』(상)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유물사관’을, 『강요』(하)는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전설의 역사화’ 부분은 현재 학계의 뜨거운 주제이므로 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²⁵

1. 『중외역사강요』(상)에 나타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강요』(상)에서 고대문명사 부분은 제1단원 「중화문명의 기원에서 진한 통일다민족 봉건국가의 건립과 공고」에 편제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단원 제목에서 이미 서술적 이론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전술한 대로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적 지배논리가 점차 퇴색되어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염황자손(炎黃子孫)’으로 상징되는 중화민족주의(中華民族主義)였다. 이는 고고학계에서 등장한 이른바 수빙치(蘇秉琦)의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²⁶과 인류학에서 나타난 페이샤오통(費孝通)의 ‘중화민족의 다원 일체 구조’²⁷론으로 시너지 효

25 중국 중학교 국정 교과서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 참고. 윤세병, 2017, 앞의 글; 조복현, 2017, 「중국의 현행 역사과 과정표준 연구」, 『중국사연구』 110집; 김유리,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집;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 『중국고중세사연구』 52집; 윤세병, 2019, 앞의 글; 김지훈, 2019, 앞의 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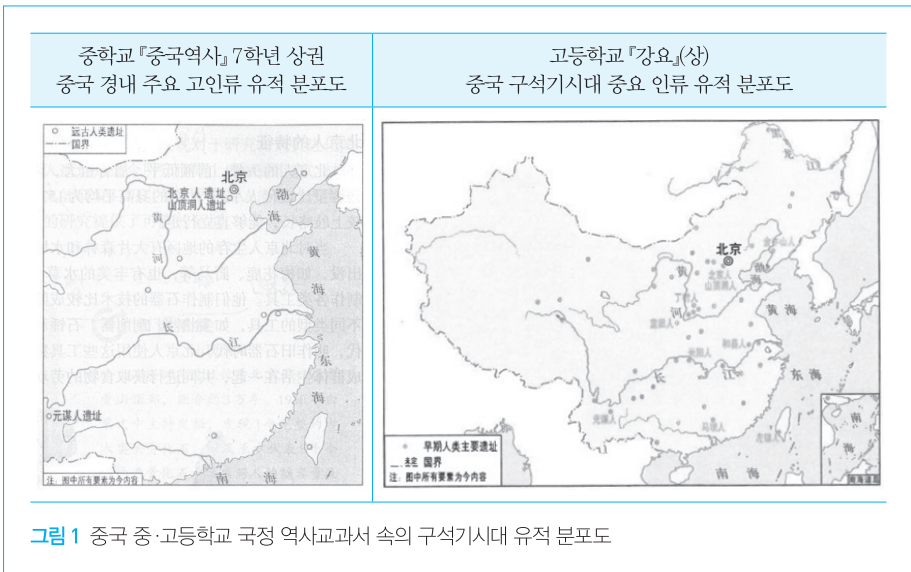
26 蘇秉琦 著, 박재복 역, 2016, 『중국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탐구한 구계유형론』, 고고.

27 費孝通, 1988, 앞의 글.

과를 이루었다. 이는 기존 ‘황허문명(黃河文明)’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가 발전해왔다는 일원론적 발전론과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중국이 형성되었다는 한족 중심 중국론을 대체하면서, 중국의 문명은 선사 시기 중국 각지에서 발전한 이후 상호 교류를 통하여 중국의 문명을 이루었고, 이 문명의 주체는 한족이 아닌 중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곧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논리를 도출해내었다. 이는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먼저 선사 시기 부분에서는 지도 두 장이 눈에 띈다.²⁸

기존 『과정표준』(2003)에서는 선사시대 유적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국정 중학교 『중국역사』 7학년 상권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초기 인류(人類) 유적에 대해 중국 중동부 지역의 지도에 북경인(北京人)과 원모인(元謀人) 유적만 표시한 데 반해,²⁹ 고등학교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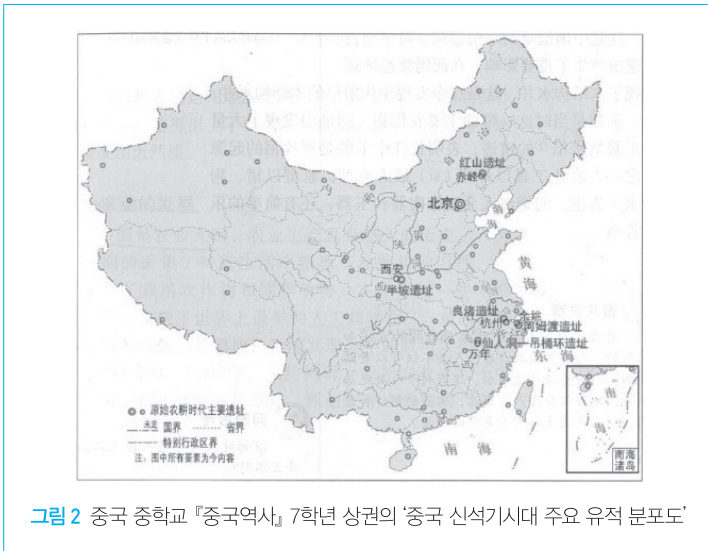


28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2~3쪽.

29 教育部組織編寫, 2017, 앞의 책, 3쪽.

요』(상)에서는 중국 전도에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을 표시하였다. 또 신석기 시대와 관련해서도 위의 지도와 똑같은 지도를 실었으나,³⁰ 내용적으로는 황허 유역 반포 유적(半坡遺蹟)과 창장유역의 허무두 유적(河姆渡遺蹟), 량주 유적(良渚遺蹟)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요』(상)에서는 내용이 소략해진 데 반해, 황허 중류지역의 양사오문화(仰韶文化), 하류의 다윈커우문화(大汶口文化)와 룡산문화(龍山文化), 창장 하류의 허무두문화와 량주문화는 물론 라오허(遼河) 상류의 홍산문화(紅山文化)까지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³¹ 이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증원 중심론적 고대문명 발전론의 맥락에서 교육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국문명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의도를 볼 수 있다.

『강요』(상)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중국에서 발견된 1만여 곳 이상의 신석기 유적에 대해 『강요』(상)은 “다원 일체적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하였다.



30 教育部組織編寫, 2017, 위의 책, 7쪽.

31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2~4쪽.

이는 수빙치의 ‘구계유형론’³²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10여 년간 추진된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페이지의 ‘개척 학습(學習拓展)’에서 수빙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중국문화의 전통과 중국문명의 다원성을 강조한 것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강요』(상)에 의하면, 이처럼 신석기문화에서 다져진 ‘다원 일체적 발전의 기초’는 춘추전국 시기의 ‘화하 정체성(華夏認同)’을 거쳐, 진나라의 통일로 인한 ‘다민족 봉건 국가(多民族封建國家)’의 건립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 시기에는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한다.

〈표 5〉 『중외역사강요』 8쪽 ‘개척 학습’ 내용

㉟ 学习拓展

我国考古学家苏秉琦在《关于重建中国史前史的思考》中说：“相对于世界其他几大历史文化系统而言，中国文化是自我一系的；中国古代文化又是多源的；它的发展不是一条线贯彻始终，而是多条线互有交错的网络系统，但又有主有次。各大文化区系既相对稳定，又不是封闭的……中国文明之所以独具特色、丰富多彩、连绵不断，中华民族之所以能够形成一个统一的多民族国家并在数千年来始终屹立在世界的东方，都与中国文化的传统、中国文明的多源性有密切关系。”

중국 고고학자 수빙치는 「중국 선사사 재구성에 관한 사고(關於重建中國史前史的思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기타 유수의 역사 문화 계통과 상대적으로, 중국문화는 한 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국 고대문화는 또 다원적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발전은 결코 한 가닥의 선으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선이 상호 교착된 그물과 같은 것이지만, 여기에는 간선과 지선이 있다. 각 문화 구계(區系)는 이미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 중국 문명이 독특한 색채를 띠며, 풍부하고 다채롭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까닭은, 또 중화민족이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아울러 수천 년 동안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 중국문화의 전통 및 중국문명의 다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³

32 蘇秉琦 著, 박재복 역, 2016, 앞의 책.

33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8쪽.

10페이지에서는 “춘추에서 전국에 이르는 시기, 민족 관계에 중요한 변화나 나타났다. 춘추 시기, 중원 각국의 사회 발전이 이윽한 용적만이(戎狄蠻夷)보다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화하’라 일컬었다. 빈번한 왕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들 민족에게는 또한 ‘화하 정체성’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국시대에 들어선 후, 용적만이는 점차 화하족으로 용입(融入)되었다. 화하는 대량의 신선한 혈액을 흡수하면서 더욱 안정화되었고, 더욱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었다”³⁴ 고 한다. 이는 춘추전국의 분열 국면 속에서도, 민족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가들 사이에는 분열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⁵ 그러나 이는 분열의 혼란 상태로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사상적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지, 결코 민족적 측면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춘추 시기의 ‘존왕양이(尊王攘夷)’는 중국과 외국 간의, 전국 시기의 ‘합종연횡(合從連橫)’는 중국 내부적인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상)은 15페이지에서 “통일된 중앙집권국가의 형성은 필연적인 역사 발전이자, 객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전에 없던 통일적 봉건 국가는 각 민족의 왕래와 교류, 교유를 촉진시켰고, 통일 다민족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였다”³⁶고 서술하였다. 전국시대 육국(六國) 유민의 반란에 의한 진의 멸망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진의 폭정에 대한

34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10쪽.

35 이에 대해 『강요』(상)은 제3과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국 중후기, 통일은 점차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되었다. 맹자(孟子)는 ‘하나로 안정(定于一)’의 사상을 제기하였다. 전국 말기에 편찬된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기록에서는 ‘혼란은 천자가 없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천자가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에 포악하게 굴며, 병기를 가지고 서로 해치니, 실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저자는 통일만이 전란을 끝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14쪽).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로는 이성규(1974)의 「전국시대 통일론의 형성과 그 배경」(『동양사학연구』 8~9호), 陸青松(2018)의 『文化的視野：秦統一問題的再研究』(西安：三秦出版社) 등의 논저 참고.

36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15쪽.

농민의 반란으로 묘사할 뿐 민족적·지역적 갈등에 대해서는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⁷

한나라 시기의 발전에 대해 『강요』(상)은 한나라의 통일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서기 202년 한나라 성립 이후, 이른바 ‘문경지치(文景之治)’라 불리는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시기의 ‘휴양생식(休養生息)’을 거치면서 국력을 회복한 한나라는 무제(武帝)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통일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특히 ‘추은령(推恩令)’을 통한 제후국 세력의 약화와 중앙집권의 강화, 염철(鹽鐵) 전매와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력 강화, 그리고 전국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자백가의 사상을 폐출하고 오직 유학만 존승한다는 ‘존숭유술(尊崇儒術)’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흉노와 서남이 정벌 및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개척 등을 언급하면서, 『강요』(상)은 “통일 다민족 봉건국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일관적으로 중시하던 것이지만,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적 유물사관을 다시금 강조한 것과 이른바 ‘G2’의 한 축으로서의 중국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 그리고 최근 발표된 소수민족 지구에서의 중국어교육 강화³⁸ 등이 한나라 시기의 통일정책과 오버랩된다. 게다가 한나라 때 흉노와 서남이 정벌 및 실크로드 발견을 통한 서역개척 등은 현재 중국이 펼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물론 20세기 후반부터 중국이 추진한 여러 역사 공정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상으로 『강요』(상)에 나타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강요』(상)에서는 선사 시기에 이미 ‘다원 일체적 발전의 기초를 다졌’고, 춘추전국 시기에 이르러 ‘화하 정체성(華夏認同)’ 사상이 나타났으며, 진나라에 의해 ‘통일적 다민족 봉건 국가’가 건립되고, 한나라 때에 이르러 ‘통일적 다민족 국가’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기초가 일관

37 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16~17쪽.

38 艾北疆, 2020, 「全面落實國家統編教材使用工作, 堅定不移推進國家通用語言文字教育」, 光明網, 2020-9-11, http://news.gmw.cn/2020-09/11/content_34176219.htm(2020. 9. 29. 접속)

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다. 전술했듯이 춘추 시기 ‘존왕 양이’는 중국과 외국 간의, 전국 시기의 ‘합종연횡’은 중국 내부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긴 측면이 있으나 이 교과서는 이를 외면하였다. 진의 멸망에 대해서도 육국 유민의 불만과 반란은 언급하지 않고, 폭정에 대한 농민의 ‘기의’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따라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한 교과서 서술은 객관적 측면에서 당시 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전설과 역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의 첫 머리를 「오제본기(五帝本紀)」로 설정하였다. 이 「오제본기」는 바로 ‘황제(黃帝)’로부터 시작된다. 사마천은 그 까닭에 대해 “학자들이 오제를 많이 일컬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상서(尙書)』에는 오직 요(堯) 이후만 기록되어 있는데, 백가들이 말하는 황제는 그 글이 별로 우아하지가 않아서 선생들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 내가 여러 학설을 차례로 논하여, 그중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골라 「본기」의 첫 머리에 드러냈다”³⁹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마천은 『사기』를 편찬하면서, ‘사(史)’, 곧 역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어떤 확고한 신념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생각했던 ‘역사’란 무엇일까? 어쩌면 『사기』가 만들어낼 ‘사실(史實)’이 신빙성 있는 ‘사실(事實)’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신념은 오히려 후세에 그가 기록한 ‘사실(史實)’에 의해 ‘사실(事實)’이 재창조되는 아이러니도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사마천은 중국은 물론 당시 사마천이 인식하고 있던 ‘천하’ 여러 민족의 계보를 ‘황제’로 소급시켰다. 심지어 조선(朝鮮)은 은(殷)나라 유민인 기자

39 『史記』 권1 「五帝本紀」, 北京: 中華書局, 1959, 46쪽, “學者多稱五帝, 尙矣. 然『尙書』獨載堯以來, 而百家言黃帝, 其文不雅馴, 薦紳先生難言之. … 余并論次, 擇其言尤雅者, 故著爲本紀書首.”

(箕子),⁴⁰ 흉노(匈奴)와 월(越)은 우(禹)의 후손이라고 서술하였는데,⁴¹ 은나라와 우임금 모두 황제의 후손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천하의 족속이 모두 황제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⁴² 따라서 중국 역대로 모든 왕조는, 심지어 이민족이 세운 왕조 또한 ‘황제’의 후예를 자처하기도 하면서 황제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이 같은 황제 후손 인식은 현재 ‘염황자손(炎黃子孫)’이라는 구호 속에 녹아 있다. 현행 국정 중학교 『중국역사』 7학년 상권에서는 이를 ‘원고적 전설(遠古的傳說)’이라는 단원에서 다루었다. 단원의 도입부에서 “중국의 오래된 전설 속에서 염제(炎帝)와 황제는 수많은 창조적 발명을 하여 중화민족의 ‘인문시조(人文始祖)’로 존송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전설 속의 염제는, 그 부락은 주로 산시(陝西) 웨이허(渭河) 유역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전설에서 염제는 백성들에게 개간과 농사를 가르쳤는데, 생산 도구를 제작하고, 오곡과 채소를 심었다. 또 도기를 제작하고, 방직을 발명하였으며, 소금을 생산할 줄 알았고, 백성들에게 통상 교환을 가르쳤다. … 전설에 의하면 염제는 또 거문고와 비파 같은 악기를 제작하였고, 또 가장 이른 천문과 역법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고 기술하였다.⁴³

황제에 대해서는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이다. 황제는 이미 궁실을 지어 추위를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의상을 제작하고, 우물을 팠으며, 배를 만들고, 구리를 제련할 줄 알았으며, 아울러 활과 화살,指南車(指南車)를 발명하였다고 전해진다. 황제 시기에 창힐(蒼頡)은 문자를 창조하였고, 영륜(伶倫)은 음률을 제작하였으며, 예수(隸首)는 주판을 발명했다고 전해지고, 황제의

40 『史記』 권38 「宋微子世家」, 1620~1621쪽.

41 『史記』 권110 「匈奴列傳」, 2879쪽; 『史記』 권41 「越王句踐世家」, 1739쪽.

42 張大可·凌朝棟·曹強 著, 2015, 『史記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06쪽.

43 教育部組織編寫, 2017, 앞의 책, 13쪽.



그림 3 황제와 염제상,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鄭州市) 황허풍경명승구(黃河風景名勝區)에 위치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2,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동북아역사재단, 24쪽.

아내인 누조(嫫祖)는 누에를 칠 줄 알아 방식에 능했다고 전해진다⁴⁴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반파, 양사오 유적을 비롯한 황허와 창장 유역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전설의 신빙성을 제고시켜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염제를 이야기할 때는 ‘전설(傳說)’이라는 말을 썼고, 황제를 이야기 할 때는 ‘전해지다(相傳)’이라는 말을 썼지만, 둘을 병칭할 때는 ‘전설’ 혹은 ‘원고 전설’로 표현하였다. 이는 염제와 황제를 역사로 보는 인식을 유보한 것이지만, 황제 같은 경우 신화나 전설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래도 역사로 인식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강요』(상)에서도 드러났다. 『강요』 4페이지의 ‘부락에서 국가로(從部落到國家)’ 소절의 내용을

44 教育部組織編寫, 2017, 위의 책, 13~14쪽.

보도록 하자.

옛 사서에 전해지길(古史相傳), 중국의 역사는 삼황오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삼황시대는 비교적 이른데, <삼황의> 이름 또한 여러 설이 있고, 신화적 색채가 농후하다. 오제의 사적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전설에서 오제의 시작은 황제가 차지하고 있다. 황제는 황허 중상류 일대 부락의 수령이었다. 그는 다른 부락 수령이었던 염제와 연합하여 ‘염황부락연맹(炎黃部落聯盟)’을 결성하였는데, 그들은 후세에 ‘화하시조(華夏始祖)’로 존송받고 있다.⁴⁵

비록 황제를 이야기할 때 ‘전설에서 오제의 시작’으로 표현하였지만,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바로 ‘옛 사서에 전해지길’이라는 말이다. 또 염황의 사적을 이야기할 때는, ‘전설’이라는 주어가 걸리지 않는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단정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 또한 황제와 염제 시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염황 서술에서 보이는 역사와 전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요(堯)·순(舜)·우(禹) 서술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요순에 대해 『강요』(상)은 “오제 중 마지막 두 자리는 요와 순으로, 중원지역의 연맹 수령이었을 것이다. 요가 연로했을 때, 추천과 그의 순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순이 요의 자리를 계승하였다. 이러한 계승 방법을 ‘선양(禪讓)’이라고 한다. 고고학이 증명했듯이, 대략 오제 후기에 상당하는 용산문화시대는 중국 땅에 방국이 숲처럼 세워졌던 시기로, 역사에서는 ‘만방(萬邦)’시대라 일컫는다. 어떤 방국의 도성은 규모가 비교적 큰데, 예컨대 타오스 유적(陶寺遺蹟)의 궁전건축과 천문건축 및 각종 예기(禮器)로, 계급과 계층 분화 또한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국가의 초기 형태를 갖추었다고 여기기도 한다”⁴⁶고 서술하였다.

45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4쪽.

46 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4쪽.

고고학으로 역사를 증명할 수 있을까? 20세기 초에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난 ‘의고(疑古)’ 사조는 기존 중국의 역사가 ‘오제’시대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에 치명타를 날렸다. ‘오제’ 가운데 요순은 춘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황제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며, 그 이전의 삼황 전승은 전국 및 그 이후의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대가 이른 고사일수록 그 출현 시기는 오히려 늦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의고 사조는 ‘동주(東周)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⁴⁸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사변(古史辨)’ 사조는 서구의 실증주의 사조와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이루면서 향후 수십 년간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의고사조의 대안으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고학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인쉬(殷墟) 발굴을 통한 대량의 갑골 출토는, ‘동주 이전의 역사’에 대한 불신론을 일축시키며, 중국의 역사를 상나라 은허 시기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⁴⁹ 이후 중국은 중국 전역의 수많은 고고 발굴을 통해, 그동안 황허유역 중심의 중국 고대문명사를 ‘구계유형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1990년대 리쉐친(李學勤)은 「의고시대를 걸어 나오며(走出疑古時代)」를 발표하면서⁵⁰ 그동안 축적된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20세기를 풍미했던 ‘의고’ 사조의 극복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47 白鳥庫吉, 1909, 「支那古傳説の研究」, 『東洋時報』 131號; 顧頡剛, 1923,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등

48 胡適, 1922, 「自述古史觀書」, 『古史辨』(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22~23쪽.

49 서양에서는 중국 최초의 왕조를 대체로 ‘상’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특권 『선진사(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로, 데이비드 키틀리(David Keightley)가 집필한 제4장의 소제목이 ‘상: 중국 최초의 역사적 왕조(The Shang: China’s First Historical Dynasty)’로 설정하였다. Michael Loewe ed.,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李學勤, 1992, 「走出疑古時代」, 『中國文化』 1992-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 ‘하상주단대공정’(1996~2000)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이다. 전술했듯이 중국은 ‘하상주단대공정’을 통해 고대사의 연대를 확정지으려 하였고, ‘중화문명탐원공정’(2001~2015)을 통해 신석기시대를 역사의 영역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상주단대공정’ 같은 경우, 하나라를 약 기원전 2070년에서 1600년으로, 상대를 약 기원전 1600년에서 1046년으로 대략 확정지었으나, 학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⁵¹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이 연표를 적용시켜, 중국 고대문명사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5페이지에서는 “하(夏) 부락의 우(禹)는 치수로 공을 세워, 순(舜)의 선양(禪讓)을 받아 연맹의 수령이 되었다. 약 기원전 2070년, 우는 중국 최초의 노예제국가인 하를 건립하였다”고 서술하였고, 또 “하왕조 마지막 왕은 걸(桀)인데, 포학무도하여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왕조의 통치에 반항하였다. 약 기원전 1600년, 상(商) 부족의 수령인 탕(湯)의 통솔하에 군대를 일으켜 걸(桀)을 토벌하여, 하나라 군대를 크게 패퇴시키고 걸을 남방으로 추방시키니, 하왕조가 멸망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는 “상왕조 말기, 사회 모순이 첨예해 졌다. … 기원전 1046년, 주(周) 부족의 수령인 주무왕(周武王)이 민중을 이끌고 주(紂)를 정벌하여, 쌍방이 상나라 도읍의 남쪽 교외인 목야(牧野)에서 격전을 펼쳤다”고 서술하였다.⁵²

게다가 아직까지 동시대적인 문자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그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라를 역사로 반영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전거했듯이 5페이지에서는 기원전 2070년 우가 하왕조를 건립했다고 기술하고, “고고

51 하상주단대공정이 끝나고, 간략한 보고서가 출판되기는 했으나(夏商周斷代工程傳家組 編著, 2001, 앞의 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보고서는 출판되지 않고 있다. 하상주단대공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김경호 등(2008)의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정원철(2016)의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53호) 등을 참고.

52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5~6쪽.

학자는 허난성(河南省) 뤼양시(洛陽市) 옌스(偃師)에서 발견된 얼리터우 유적(二里頭遺蹟)이 하문화(夏文化)의 유존(遺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⁵³고 서술하여 ‘얼리터우 유적’과 하나라를 연결시키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얼리터우 유적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하’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오히려 얼리터우 유적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1999년부터 얼리터우 유적의 발굴을 주도했던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고고연구소(考古研究所)의 쉬홍(許宏) 연구원은 이리두와 하를 연결시키는 것, 심지어 하의 존재를 과도하게 긍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베이징 대학의 순칭웨이(孫慶偉) 같은 경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이 같은 학계의 침예한 대답에도 불구하고,⁵⁶ 『강요』(상)이 ‘하상주단대공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하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리두 유적을 하나라의 유존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필자는 비교문화적인 콤플렉스를 지적해보고 싶다. 중국과 함께 세계 4대문명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국가 출현 시기를 보면,⁵⁷ 이집트 같은 경우 대략 기원전 3500년에 노예제 소국들이 나타났고, 기원전 3100년경에는 초보적으로 통일된 고대 국가가 수립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국들이 나타났고, 대략 기원전 24세기에 초보적인 통일이 이뤄졌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인더스강 유역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서 대략 기원전 23~18세기에 상당하는 문명이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하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

53 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5쪽.

54 許宏, 2019, 「二里頭遺蹟與夏商文化探索」, 第二屆“夏文化”國制研討班演講稿.

55 孫慶偉, 2018, 『鼎宅禹蹟: 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 北京: 三聯書店.

56 이와 관련된 세계 학계의 인식에 대해서는 심재훈(2020)의 「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역사학보』 245호)를 참고.

57 이 연대는 『강요』(하)와 국정 중학교 『세계역사』 9학년 상권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면, 중국 초기 국가의 성립 시기는 상나라 은허 시기에 상당하는 기원전 1300년 경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기원전 20세기를 전후한 고대 도시 문명 유적으로 타오스 유적, 얼리터우 유적 같은 훌륭한 고고유적이 중국 고대문명의 시작을 알려주지만, 동시대적 문자자료로 그 문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형성된 풍부한 신화 전설 자료는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의 추진을 제안한 승젠(宋建)은 이스라엘의 테드모어와 교류하면서 중동의 아쉬르학과 이집트학의 체계적인 연대학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⁵⁸ 중국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처럼 연대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중국 역사의 시원 또한 그 연대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도, 그 근처에 자리 잡은 비교문화적인 콤플렉스를 확인해볼 수 있다.

3. 유물사관에 입각한 서술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유물사관은 중국 역사학계의 지배이념이었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역사학 연구에서 유물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역사교육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표준』(2003)에서는 ‘유물’사관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내용 표준’에 이를 드러내놓고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2017년판에서는 ‘유물’이라는 말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 ‘교과과정 내용’에서는 ‘사유제’, ‘계급’, ‘사회 모순’, ‘농민 기의’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유물사관을 다시금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요』(상)에 나타난 유물사관적 서술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4페이지 신석기시대의 경제 발전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다원커우문화와 량주문화 등의 고고 발견이 나타내듯이, 이 시기에 사유제

58 岳南 著, 심규호·유소영 옮김, 2005, 『하상주단대공정』(1), 일빛, 31~42쪽.

가 이미 나타났고, 계급 분화가 날로 분명해졌으며, 부락 중에서 특권 계층이 나타났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부단히 재부와 권력을 다투었고, 중국은 곧장 계급 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 있었다.”⁵⁹ 이는 국가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씨족 사회에서 부락연맹 사회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를 ‘사유제’와 ‘계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물사관적 서술 태도는 5페이지 “우(禹)는 중국 최초의 노예제국가인 하(夏)를 건립하였다”는 서술로 부락연맹에서 국가 단계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는 상(商)과 서주(西周) 시기를 중국 노예제 사회 경제 발전 및 변영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역사종횡(歷史縱橫)’ 코너에서는 ‘상주 시기 노예매매’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설정한 하상주로 이어지는 노예제 국가의 양상을 방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과정표준』에 의거한 『역사』 교과서 중국 고대문명사 서술 부분에는 ‘노예’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유제’, ‘계급’을 나타내는 서술이 경제사 부분을 다룬 『역사』Ⅱ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Ⅰ에도 하나라의 성립과 관련된 말은 있지만, “약 기원전 2070년, 우가 우리나라 역사

〈표 6〉 『강요』(상) 역사종횡, ‘상주 시기 노예 매매’

商周时期的奴隶买卖

据《周礼·地官·质人》记载，商周奴隶制国家设有专门掌管奴隶和牲畜买卖的官吏，可见当时奴隶买卖的普遍。留(hū)鼎铭文记载了有关奴隶买卖的价格，五名奴隶的身价相当于一匹马加一束丝。

상주 시기의 노예 매매

『주례(周禮)』 「지관(地官)·질인(質人)」의 기록에 의하면, 상주 노예제 국가는 노예와 가축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리를 두었는데, 당시 노예 매매의 보편성을 볼 수 있다. 흘정(留鼎) 명문은 노예 매매와 관련된 가격을 기록했는데, 다섯 노예의 몸값은 말 1필과 한 묶음의 비단에 상당하였다.

59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4쪽.

상 첫 번째 왕조인 하를 건립하였다”고만 했지, 그 성격을 ‘노예제’로 국한 짓지 않았다는 것에서 양자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강요』(상)에 기록된 선사 시기부터 진한에 이르는 사회 발전단계를 정리해 보면, 씨족 사회에서 부락연맹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유제와 계급이 나타났고, 부락연맹에서 국가가 성립되면서 노예제가 나타났으며, 춘추전국 시기의 혼란기를 거쳐 중앙집권적 진한 제국이 나타나면서 봉건제로의 전환이 완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가 기존 『과정표준』(2003)에 입각한 교과서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역사』 I 에서는 하나라의 세습제도, 서주의 분봉제와 종법제, 춘추 이후 군현제의 출현과 진한 중앙집권제 국가의 출현이라는, 비교적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해낸 내용 전개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 서술이 중국에서 강조하는 ‘중국 특색’에 더욱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강요』(상)의 내용 전개는 오히려 ‘중국 특색’이 엮어진 것 같은 이미지를 던져준다.

또 『강요』(상)은 이른바 ‘사회 모순’과 ‘농민 기의’가 강조되어 있다. 진한(秦漢) 왕조의 멸망은 물론 심지어 하상주의 멸망까지, 모두 폭정에 의한 멸망과 백성들의 기의로 일관되어 있다. 하나라는 마지막 왕인 걸이 ‘포학무도’하여 ‘백성들이 부단히 하왕조의 통치에 반항’한 결과로 멸망하였고, 상나라는 말기에 사회 모순이 첨예화되었으며, “마지막 왕인 주(紂)가 많은 궁전과 정원을 만들고, 종일 술과 음악에 취하여 생활이 부패해졌으며, 또 ‘포락(炮烙)’과 같은 형벌을 만들어 신민(臣民)들을 해쳤기 때문에 <백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서주 또한 기원전 841년, “주려왕(周厲王)이 이익을 탐하여 포학한 정치를 펴서 ‘국인폭동(國人暴動)’을 야기하였다. … 기원전 771년, 서북 유목 민족인 견융(犬戎)이 서주 왕실의 혼란을 틈타 호경(鎬京)을 공격하고 주유왕(周幽王)을 살해하여, 서주가 멸망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⁶⁰

60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5~6쪽.

이른바 ‘진한 통일 다민족 봉건 국가’의 멸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전국(戰國)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은 가혹한 형벌과 토목공사로 인해 계급 간의 모순이 점차 격화되었고, 분서갱유(焚書坑儒) 같은 도 넘은 폭정으로 인해 결국 농민 기의로 멸망하였다.⁶¹ 서한(西漢) 말 왕망(王莽)의 찬탈 또한 “토지 검병이 심해지고, 부세와 요역이 무거워짐에 따라 파산한 농민이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망하게 되면서 사회가 동요되고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며, 왕망의 멸망 또한 “왕망 통치 말년에 국가에 심한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이 나타나 황무지가 천리에 이르니, 결국 녹림(綠林)과 적미(赤眉) 등의 농민 대 기의가 폭발하였다”고 서술하였다.⁶²

이는 기존 『역사』 I 의 11페이지에서 진(秦)의 멸망에 대해 “진왕조는 황제의 전제 권위에 의존하여, 인민에 대한 압착(壓搾)이 강화되면서, 계급 간의 모순이 빠르게 격화되었다. 많은 농민은 이를 견디지 못해,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농민 기의가 폭발하게 되었다”⁶³고 간단히 언급한 것 외에는 기타 초기 국가의 멸망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내용 체제의 변화, 곧 ‘사회 모순’에 따른 ‘농민 기의’의 발생, 그리고 국가의 멸망을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강요』(상) 후반부에서 강조한 대로 중국의 주요한 사회적 모순이 이미 해결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중국이 강조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은 결국 아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오지 않았고, ‘중국몽’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하이핑

61 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16~17쪽.

62 教育部組織編寫, 2019, 위의 책, 22쪽.

63 人民教育出版社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I,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1쪽.

(張海鵬)은 교학과과정에서 진말 농민 기의와 서한, 동한 말 농민기의는 모두 사회 계급 모순이 날로 첨예해진 결과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⁴ 상기한 자신감 이면에 잠재된 수많은 내부적 모순은 교육현장의 지역적·대상적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중국에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하이펑의 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국가 멸망의 메커니즘을 역사교육을 통해 환기 시킴으로써, 현재 중국이 마주한 민족적·경제적·환경적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의도가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4. 『중외역사강요』(하)의 세계 고대문명사 서술의 특징

앞의 『과정표준』의 비교를 통해 언급했듯이, 2017년판의 세계 고대문명사 관련 서술은 2003년판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바로 2003년판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2017년 판에서는 ‘서로 다른(不同)’ 여러 지역의 ‘문명 고국’, ‘시간적·공간적 조건’, ‘대제국의 지역적 영향’, ‘문명 사이의 초기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체계로 이들 ‘서로 다른’ 여러 문명을 하나로 녹여서 서술했을까? 『강요』(하)의 제1단원을 보면서 그 체계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옌샤오양(晏紹樣)은 『강요』(하)의 서술이 ‘시공관념(時空觀念)’, 곧 “특정한 시간 관계와 공간 관계 속에서 사물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 의식과 사유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하지만, 이는 그들이 창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조건 속에서 창조하는 것도 아니며,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이미 정해진 과거로부터 계승되어온 조건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다”라는 마르크스의

64 張海鵬, 2019, 「統編高中歷史教科書的學科體系和學術體系-適應和掌握統編高中歷史教材『中外歷史綱要』(上)的意見」, 『課程·教材·教法』2019-9, 28쪽.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⁵ 곧,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농업과 목축업이 나타나고, 다양한 문화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계 문화는 다원성을 띠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요』(하)는 최초의 문명이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 남아시아의 인더스강과 갠지스강 유역, 중국의 황허와 장강 유역, 그리고 유럽의 발칸반도 남부와 지중해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 수준과 교통의 제한을 받아 각 문명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며, 분명한 다원적 특징을 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고대 그리스에 대한 지리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 등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예컨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과 바빌로니아 시기의 『함무라비법전』,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천문역법과 종교의 발전,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불교, 고대 그리스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도시 국가의 발전과 민주정치, 문화 등이다.

그러나 『강요』(하)는 이러한 고대 문명의 다원성을 설명하기 전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유제와 계급의 발생, 그리고 노예제 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농업과 목축이 활발해지면서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잉여 생산품이 축적되면서 사유제와 계급이 발생했으며, 부락과 부락 사이의 전쟁을 통해 정복민과 피정복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노예제 사회로 발전해나갔고, 노예주와 노예 사이의 계급투쟁도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계급 모순과 부락 전쟁 사이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정부·군대·감옥 등의 ‘강제기관’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형성되었고, 기록과 관리의 필요에 따라 문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 사회발전 논리는, 『과정표준』(2017)에서 강조한 ‘서로 다른’ 다원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유물사관이라는 획일적인 사관으로 다원성을 언급하는 것은 내재적인 모순성이라 할 수 있다.

65 晏紹祥, 2020, 「高中統編『中外歷史綱要(下)』世界上古中古史內容解讀(上)」, 『中小學教材教學』2020-5, 4쪽.

이어서 제2과 「고대 세계의 제국과 문명의 교류」에서는 주로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력 확장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이용한 교류와 무역을 통한 교류로 문명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집트 신왕국 시기의 메소포타미아 점령, 바빌로니아의 지중해 동안 진출, 앗시리아의 소아시아와 이집트 정복,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으로의 진출 및 식민지 개척 등을 통해 문명 사이의 강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기원전 6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란고원에서 페르시아가 흥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이집트와 소아시아, 그리고 발칸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가 흥기하여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여 분열되었고, 원래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흥기하여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다.⁶⁶

『강요』(하)가 이러한 무력과 무역을 통한 교류를 설명한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문명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시켰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예컨대, 서아시아의 농경과 야철 기술의 주변으로의 확산, 서아시아의 신화와 이집트 예술의 그리스 전파,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의 유럽 전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문명 간의 대화’와 ‘인류운명공동체’ 담론,⁶⁷ 그리고 ‘일대일로’ 같은 중국의 세계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결국 로마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교류를 거

66 『綱要』(下)는 로마의 확장을 설명하면서, “대량의 전쟁 포로와 피정복민을 노예로 매매하면서 노예제가 신속히 발전했다”는 말과 로마제국 통치하에 지중해는 200여 년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노예와 수많은 평민의 고된 노동으로, 제국 내 여러 지역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 및 무역이 발전하면서 제국은 1~2세기 동안 공전의 번영을 누렸다”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서술 또한 잊지 않았다.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0쪽.

67 潘岳, 2019, 「古老文明對話與人類命運共同體」, 人民網, 2019-9-11, <http://theory.people.com.cn/n1/2019/0911/c40531-31349316.html>(2020. 9. 29. 접속)

론하면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기원전후, 한왕조(漢王朝)와 로마제국은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양단에서 흥기했다. 양대 강국 사이에는 관방의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으나, 실크로드를 통하여 쌍방 간의 간접적인 무역과 문화교류가 있었다. 일찍이 페르시아제국 시기, 중국의 비단이 이미 지중해 동안(東岸)에 이른 적이 있다. 동한(東漢)의 반초(班超)는 서역을 경영하면서, 일찍이 감영(甘英)을 대진(大秦, 로마)에 사신으로 파견한 적이 있다. 로마가 지중해 동부 지역을 정복한 이후, 현지 상인들 또한 동쪽에 뜻을 두고, 한왕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2세기, 로마의 상인이 낙양에 이른 적이 있다. 이후 로마 상인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와서 중국과 무역을 하였다.⁶⁸

이러한 내용 전개는 기존 그리스와 로마를 위주로 다루던 『역사』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현행 국정 중학교 『세계역사』 9학년 상책에는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교류는 서술되어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는 다루지 않았다. 기존 검정제 인민교육출판사 중학교 『세계역사』 9학년 상권 ‘자유독서카드(自由閱讀卡)’란에서 ‘로마제국과 동한제국(羅馬帝國與東漢帝國)’을 주제로 중국과 로마 간의 교류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⁶⁹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행 국정 중학교 『중국역사』 7학년 상책에서 이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만, 『강요』(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나라와 로마 사이의 교류는 유라시아 대륙 양단이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시기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중국역사』의 범위에서 다루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흥미롭다. 어쩌면 중

68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2쪽.

69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6, 『世界歷史』(9年級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40쪽.



그림 4 한왕조와 로마제국 교류의 주요 노선도[『綱要』(下), 12쪽]

학교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편찬이 독립된 체제 속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⁷⁰ 양자 간 합의에 의한, 어쩌면 그보다 더 고도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사가 세계사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도했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가 중국사로 들어오는 과정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중국역사』 7학년 상에서는 “반초가 서역에 있을 때, 또 감영을 대진(로마)에 사신으로 파견한 적이 있다. 감영은 안식(安息, 파르티아)에 이른 후 저지를 받아 계속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번 사행으로 서아시아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서술하여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위의 『강요』(하)에서는 로마 ‘현지 상인’들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 이러한 의도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류와 융합을 통한 인류 문화의 전개, 곧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70 윤세병, 2017, 앞의 책, 92~93쪽.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2019년 9월부터 중국 6개 성/시에서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먼저 『과정표준』(2017)의 ‘교육과정 내용’과 2003년판의 ‘내용 표준’을 비교하면서, 체제상의 변화는 물론, 내용적으로 『강요』(상)에서 ‘유물사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적 이념이 강조된 것, 『강요』(하)에서는 기존 그리스·로마 위주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명 고국, ‘서로 다른’ 시공조건,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초기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강요』의 고대문명사 부분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을 『과정표준』(2017)에 두드러진 기초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강요』(상)의 고대문명사 부분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전설과 역사 사이의 줄타기’, 그리고 ‘유물사관’이 두드러졌고, 『강요』(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발전한 고대문명이 무력과 무역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교류해나가는 양상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적 특징을 몇 가지 지적하는 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강요』(상)에 보이는 전설과 역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다시 말해 전설을 역사로 인식하고자 하는 속내가 드러나 있는데, 이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그중 필자는 어쩌면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고대문명 출현 시간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인도 고대문명보다 시간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강요』(상)은 씨족사회에서 부락연맹으로 발전하면서 사유제와 계급이 발생했고, 부락연맹에서 국가가 성립되면서 노예제가 나타났으며, 춘추전국

의 혼란기를 거쳐 진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봉건제로 전환되었다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역사』 I의 하나라의 세습제도, 서주의 분봉제와 종법제, 춘추 이후 군현제의 출현과 진한 중앙집권제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내용 전개가 오히려 역사적 실제에 가깝고, 중국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에 더욱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강요』(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발전한 고대문명을 강조하면서도 그 발전단계는 ‘유물사관’이라는 정해진 틀로 해석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유물사관’이라는 획일적 사관으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강요』(하)가 지닌 내재적 모순성이라 지적하고 싶다.

넷째, 『강요』(하)의 고대문명사 부분은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 유라시아대륙 양단에 있었던 로마와 한나라 간의 교류로 막을 내리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을 현행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국역사』 7학년 상권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사가 세계사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도했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가 중국사로 들어오는 과정을 의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인류문화의 전개, 곧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결코 일방적이지 아닌, 쌍방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의 동시대적인 고민이자 현재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호이다. 이를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을 주입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고대부터 다원일체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였고, 중국과 세계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또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학습시키는 것은 아직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민족 간의 갈등, 대외적으로 중국의 패권화

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 어쩌면 이러한 구호 자체가, 또 교과서에 과도하게 반영한 것 자체가 바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감추고 싶은 ‘아킬레스건’을 아이러니하게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사료 및 교과서

-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6, 『世界歷史』(9年級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教育部組織編寫, 2017, 『中國歷史』(7年級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9,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20, 『中外歷史綱要』(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년판.
- 人民教育出版社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I,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3.
- _____, 2020,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年版2020年修訂)』,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단행본

- 김경호·심재훈·민후기·최진복, 2008,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2,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동북아역사재단.
- 박양진 등, 2007, 『중화문명탐원공정과 중국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蘇秉琦 著, 박재복 역, 2016, 『중국 문명의 기원을 새롭게 탐구한 구계유형론』, 고고.
- 岳南 著, 심규호·유소영 옮김, 2005, 『하상주단대공정』(1), 일빛.
- 孫慶偉, 2018, 『鼎宅禹蹟: 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 北京: 三聯書店
- 陸青松, 2018, 『文化的視野: 秦統一問題的再研究』, 西安: 三秦出版社.
- 張大可·凌朝棟·曹強 著, 2015, 『史記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夏商周斷代工程傳家組 編著, 2001,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簡本),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Michael Loewe ed.,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김유리, 2005, 「역사교과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 개
혁-」, 『역사교육』 96집.

_____,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집.

김지훈, 2019, 「국가의지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호.

심재훈, 2020, 「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역사학보』 245호.

윤세명, 2017, 「중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집.

_____,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3호.

이성규, 1974, 「전국시대 통일론의 형성과 그 배경」, 『동양사학연구』 8~9호.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 『중국고중세사연구』 52집.

정원철, 2016, 「중국 고대 문명 연구의 회고와 전망-중국의 고대 문명 역사공정에 대한
한국 학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조복현, 2017, 「중국의 현행 역사과 과정표준 연구」, 『중국사연구』 110집.

顧頡剛, 1923,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潘岳, 2019, 「古老文明對話與人類命運共同體」, 人民網, 2019-9-11, [http://
theory.people.com.cn/n1/2019/0911/c40531-31349316.html](http://theory.people.com.cn/n1/2019/0911/c40531-31349316.html)(2020. 9. 29. 접속)

白鳥庫吉, 1909, 「支那古傳説の研究」, 『東洋時報』 131號.

樊未晨, 2019, 「普通高中三科統編教材今秋在六省市使用」, 教育部政府門戶網站,
2019-8-28, [http://www.moe.gov.cn/fbh/live/2019/51084/mtbd/201908/
t20190828_396234.html](http://www.moe.gov.cn/fbh/live/2019/51084/mtbd/201908/
t20190828_396234.html)(2020. 9. 29. 접속)

- 費孝通, 1988,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 等, 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史一棋, 2018, 「“探源工程”成果: 考古實證中華文明五千年」, 新華網, 2018-5-29,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29/c_1122901854.htm(2020. 9. 29. 접속)
- 習近平, 2013, 「順應時代前進潮流, 促進世界和平發展」, 國家主席習近平在莫斯科國際關係學院的演講(全文), 中國政府網, 2013-3-23, http://www.gov.cn/ldhd/2013-03/24/content_2360829.htm(2020. 9. 29. 접속)
- _____, 2015, 「携手构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 人民網, 2015-9-28, <http://theory.people.com.cn/n1/2018/0104/c416126-29746010.html>(2020. 9. 29. 접속)
- 新華社, 2017a, 「習近平提出, 堅持和平發展道路,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新華網, 2017-2-10, http://www.xinhuanet.com//politics/19cpnc/2017-10/18/c_1121821003.htm(2020. 9. 29. 접속)
- _____, 2017b, 「聯合國決議首次寫入“構建人類命運共同體”」, 新華網, 2017-2-10, http://www.xinhuanet.com/world/2017-02/11/c_1120448960.htm(2020. 9. 29. 접속)
- 晏紹祥, 2020, 「高中統編『中外歷史綱要(下)』世界上古中古史內容解讀(上)」, 『中小學教材教學』 2020-5.
- 艾北疆, 2020, 「全面落實國家統編教材使用工作, 堅定不移推進國家通用語言文字教育」, 光明網, 2020-9-11, http://news.gmw.cn/2020-09/11/content_34176219.htm(2020. 9. 29. 접속)
- 梁燕, 2018, 「2003年版與2017年版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比較」,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李學勤, 1992, 「走出疑古時代」, 『中國文化』 1992-2.
- 張海鵬, 2019, 「統編高中歷史教科書的學科體系和學術體系-適應和掌握統編高中歷史教材『中外歷史綱要』(上)的意見」, 『課程·教材·教法』 2019-9.
- 許宏, 2019, 「二里頭遺蹟與夏商文化探索」, 第二屆“夏文化”國制研討班演講稿.
- 胡適, 1922, 「自述古史觀書」, 『古史辨』(1), 上海古籍出版社, 1982년판.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이유표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이하 약칭 『강요』)를 베이징, 상하이 등 6개 성/시에서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검정제 체제하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체제적·내용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체제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치사(『역사』 I), 경제사(『역사』 II), 문화사(『역사』 III)로 나뉘어 있던 체제를 중국사(『강요』상)와 세계사(『강요』하)로 나누어 통사적으로 집필하였다. 내용적으로 보면 상권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유물사관’이, 하권은 ‘서로 다른’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른 문명/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문화 사이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고대문명사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상권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이에 입각한 ‘전설과 역사 사이의 줄타기’, ‘유물사관’에 입각한 발전론이 두드러지고, 하권은 ‘서로 다른’ 다양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발전한 고대문명이 무력과 무역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교류해나갔고, 로마 시기에 이르러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사가 중국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주제어: 중외역사강요, 국정교과서, 고대문명, 고등학교, 유물사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인류운명공동체

ABSTRACT

Research as Descriptive Feature of the Ancient Civilization on the Unifie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Lee Youpyo

From September 2019, th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is referred to as *the Outline*) has been officially used in Beijing, Shanghai and other six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Compared with the high school textbook history under the existing an authorized textbook system, we can find the differences in system and content. In terms of system, the former system, which was divided into political history(*History Vol.1*), economic history(*History Vol.2*) and cultural history(*History Vol.3*), has been transformed into Chinese history(*The Outline Vol.1*) and world history(*The Outline Vol.2*). In terms of content, *The Outline Vol.1* emphasizes the “multi-ethnic and unity country” ideology and “historical materialism”; *The Outline Vol.2* emphasizes the differences of civilization and culture

under the “different” space-time conditions,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ivilizations and cultures. The same goes for the ancient civilizations. *The Outline Vol.1* highlights “multi-ethnic and unity country” ideology, “the double image of legend and history” based on it, and narrat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with “historical materialism”. *The Outline Vol.2* highlights the exchange and development of ancient civilizations under “different” geographical conditions through the mechanism of force and trade. and describes that by the time of the Roman Empire, “World History” came into the “Chinese History” when it began to interact with Han Dynasty.

Keywords: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中外歷史綱要), the Unified text book, ancient civilization, High School, Historical Materialism, multi-ethnic and unity country, 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all mankind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우성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구축 배경과 언론보도 사례
- III. 중국 초중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인류운명공동체 서술
- IV. 『중외역사강요』 속의 인류운명공동체 서술
- V.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함의와 시사점
- VI. 맺음말

I. 머리말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 가을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신판 보통고중역사교재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공식 출간하였다.¹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반포된 『2017년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것이다.²

구판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시대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2001년부터 도입된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2003년 과정표준을 적용한 교과서를 사용해왔다.³

중국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기존 형태의 『역사 1』, 『역사 2』, 『역사 3』을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중심의 필수과목으로 장기간 배우다가 2019년 9월부터 중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한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의 ‘중(中)’은 중국사에 해당하고 ‘외(外)’는 세계사에 해당하는 외국사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1학년 상·하반기에 상·하권

* 투고: 2020년 10월 16일, 심사 완료: 2020년 11월 13일, 재심사 완료: 2020년 11월 19일, 게재 확정: 2020년 11월 26일

1 教育部組織編寫, 2019,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9년 8월 중국 교육부 고시에 고등학교 1학년은 9월부터 『중외역사강요』를 사용할 것을 공지하였고, 신교재를 사용하는 곳으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랴오닝성, 산둥성, 하이난성 등 6개 지역을 발표하였다.

2 李卿 編輯, 2018, 『보통 고중(고등학교)역사과정표준(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 (2017)』,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3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구소련 교육을 모델로 삼아 중국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육 지침인 교학대강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김지훈, 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229쪽; 윤세병, 2017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

으로 분리하여 상권에서 중국사와 하권에서 세계사를 배우게 하였지만 분량 면에서 구판에 비해 중국사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중국 교육부가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중화 5000년 문명사, 중국인민 170여 년의 투쟁사와 중국 공산당 90년사, 민족단결 진보교육 및 국가주권, 해양의식 교육을 중점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힌 바와⁴ 같다. 이번 보통고중역사교재 총주편(總主編)이자 중국사학회 역대 회장이었던 장하이펑(張海鵬)은 이번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선정된 총 5권은 필수교재인 『중외역사강요』 상하권, 선택적 필수교재인 『국가제도와 사회거버넌스』, 『경제사회생활』, 『문화교류와 전파』 3권임을 설명하였다. 교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티베트, 신장, 타이완 및 그 부속도서, 남중국해 도서 등 한 부분도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로서 역사적 연원을 가르쳐서 국가 통일과 국가주권, 안보의식 수호에 대한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과 함께 보통 고중역사교재 총주편이자 수도사범대학 역사학원 세계사학과 쉬란(徐藍) 교수는 새로운 역사교재 편찬팀은 영웅인물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중국역사상 대표적인 영웅인물들을 교재 안에 녹여냈는데, 그 실례로 『중외역사강요』의 상권에서 약 70여 명, 30여 개의 영웅군을 다루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변강을 개척했던 웨이칭(衛靑), 후오취빙(霍去病), 나라에 충성했던 위에페이(岳飛), 항왜(抗倭) 영웅인 치지광(戚繼光), 갑오해전의 덩스창(登世昌), 항일전쟁의 영웅 짜오이만(趙一曼), 주오첸(左權), 한국전쟁의 영웅 양근쓰(楊根思), 황지광(黃繼光), 치우샤오윈(邱少雲) 등의 실례를 들었다.⁵

개편한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총주편들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4 「교육부: 새로 편찬한 고등학교 역사교재, 국가주권, 해양의식 교육강화(教育部: 新編高中歷史教材突出國家主權, 海洋意識教育)」, 『紅星新聞』, 2019년 8월 27일.

5 『紅星新聞』, 2019년 8월 27일, 위의 기사.

중점학습 내용이 ‘국가 통일과 국가주권, 안보의식 수호’임을 밝혔는데, 이는 타이완 주권과 서양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대응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역사교재에서 특별히 중시하여 나열한 영웅들도 국토를 지키거나 영토를 확장시킨 위인들이다. 보통고중 역사교재 총주편이 ‘해양의식 교육’을 중점학습 내용이라고 역설하면서 영토 주권 수호의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듯이 결국에는 개편된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국가 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가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⁶ 이는 당 중앙이 당의 교육 방안을 완전히 관철시키기 위해 교과서는 국가의지를 체현하는 것이고 교과서 편찬이 국가의 권리라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⁷

2017년 7월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국가 교재 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교과서 작업을 인도하고 총괄한다는 교과서 관련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⁸ 국무원 부총리가 위원회의 주임, 교육부 부장(장관)과 중앙 선전부 부장(장관)이 부주임을 맡아 교과서 제작 과정 중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중앙 선전부 부장의 경우 현재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서기처 서기 중 한 명이며 중앙정신문명 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다. 명실상부한 중국 지도부가 교과서 편찬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을 통해 중국 최고 영도자의 의지를 대

6 김지훈, 2019, 「국가의지(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 83~117쪽.

7 「국가교재위원회위원과의 대화: 교재 건설은 사실상 국가의 직권이다(對話國家教材委員會委員: 教材建設實質上是國家事權)」, 『光明日報』, 2017년 7월 14일; 김지훈, 2019, 위의 글, 83~117쪽.

8 「국무원이 국가 교과서위원회 성립을 결정하고, 리우옌둥(劉延東)이 주임을 역임하다(國務院決定成立國家教材委員會 劉延東)」,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017년 7월 6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 기자간담회에 앞서 중앙선전부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역사학에 관한 중요 논술이론에 대해 학습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중요 논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역사를 배우는 ‘학사(學史)’, 역사를 연구하고 다루는 ‘치사(治史)’, 역사를 사용하는 ‘용사(用史)’의 각 방면을 관통하고, 공산당사(黨史)와 국사, 중화민족사, 세계사 등 각 분야를 포함하여 역사와 역사학에 대해 당대 중국 공산당원들이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도의 역사 자신감과 역사의식, 넓은 역사 시야와 큰 역사관, 강한 문화 자신감과 역사적 사명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시대 중국역사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자 기본준칙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원이 공산당사와 중국사 및 세계사를 모두 섭렵하여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중외역사강요』에서 공산당사와 중국사 및 세계사를 구관에 비해 상세하게 다루게 된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이어서 중앙 선전부 부장은 신중국 건국 70년간 중국의 사학 발전성과는 훌륭하며 인재도 많이 배출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지도 지위가 동요 없이 중국 특색의 역사학 학문체계·학술체계·담론체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결합하여 근본부터 바로잡고 역사학문의 본연을 찾아가는 업무를 착실히 하여 ‘역사허무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중앙선전부 부장이 언급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결합’의 중요성은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이다.

2019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 최고의 역사 연구기관인 중국역사연구원 설립을 축하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축하 전신을 통해 “국가주권·국가안보·영토보전·국가통일 등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하여 중국인민의 통일된 역사의식을 고취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상술한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교과

서의 총주편이 밝힌 교과서의 중점학습 내용인 “국가주권, 해양의식 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역사연구원의 ‘역사연구’의 기능과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교육’의 기능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중앙 선전부 부장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결합’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교과서는 국가의지를 체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곧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⁹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본 사업이므로 교육사업을 우선 위치에 두고 교육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집권 1기에 제시했던 ‘양대 100년의 꿈’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발언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국가 미래 전략과 함께 중국 특색의 대외외교로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대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 강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포부 아래 전방면의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발된 『중외역사강요』는 중국 당 지도부의 국정운영 지침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을 고스란히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시각과 역사 인식의 변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한중 수교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지만¹⁰ 『중외역사강요』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는

9 김지훈, 2019, 앞의 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흥미로운 점은 『중외역사강요』 하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활동과제(活動課)의 주제가 “세계로 눈을 돌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이라는 점이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방침이며,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¹²

『중외역사강요』 상하책의 대단원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으로 종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외역사강요』의 핵심 목표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외역사강요』 상책의 활동과제 주제인 “가정과 나라에 대한 애정과 통일적다민족 국가의 발전”과 짝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현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와 중국의 세계 전략을 교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당 지도부의 국정운영 지침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인류운명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구축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이 글에서는 『중외역사강요』에 서술된 인류운명공동체의 내용과 함의에 주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인류운명공동체 관련 보도 사례에 이어 초중등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통해 『중외역사강요』에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순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¹³

10 오병수, 2016, 「국내 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147~170쪽; 김지훈, 2007, 앞의 글, 224쪽.

11 우성민, 2020, 「중국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자국사 및 세계사의 ‘현대’ 서술」, 『역사와 교육』 30, 252쪽.

12 教育部組織編寫, 2020, 『中外歷史綱要』(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43쪽.

13 이 글에 대해 중요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론 보도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중국 정부 측의 의도를 직접 반영하긴 하지만 그 정책 입안에 개입한 지식인 집단과 정책 엘리트의 담론을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역사 교육의 이면에 작용하는 사고체계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후속 과제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분석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내용 분석이 동시에 시도되는 과정에서 다소 분량이 많아 논지가

II.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구축 배경과 언론보도 사례

최근 중국에서 표방하는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미중 무역전쟁도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유엔의 역할, 국제 정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역 협력과 같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하였다.¹⁴

보고서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큰 격동의 시기에 접어든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대국(大國)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대국의 공헌을 할 것이며 더 많은 글로벌 공익 물자를 제공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⁵ 이어 보고서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공동으로 유엔의 재정비를 다시 시작하며, 공동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¹⁶

코로나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도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중국식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다.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바이두에 따르면 인류운명공동체는 본국의 이익을 추

호려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목차 구성의 조정이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였는데, 본문의 시간 흐름에 따른 순서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 14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유엔 창설 75주년 관련 입장문서’(中國外交部發布『中國關於聯合國成立75周年立場文件』)」, 『人民日報海外版』, 2020년 9월 17일 第6版.
- 15 『人民日報海外版』, 2020년 9월 17일, 위의 기사.
- 16 『人民日報海外版』, 2020년 9월 17일, 위의 기사.

구할 때 다른 나라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 자국의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각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인류는 지구가 하나 뿐이고 모든 국가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류운명공동체식을 제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라고 하는 글로벌 가치관은 상호 의존적 국제 권력관, 공동 이익관, 지속 가능한 발전관, 글로벌 거버넌스관(觀)이 포함된다고 소개하였다.¹⁸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시작이 2012년 11월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 인사를 만났을 때, “국제 사회는 점점 더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는 ‘운명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복잡한 상황과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여 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¹⁹

‘운명공동체’는 중국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인류 사회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국제형세 변화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인류가 어떠한 세계를 건설하고, 어떻게 구축해나갈지 등 인류 운명과 결부된 중요 과제에 대해 고민해왔음을 드러냈다.

2011년 9월에 출간된 『중국의 평화 발전』 백서에서 시진핑이 ‘운명공동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류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⁰ 오늘날 세계는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적 다극화, 경제적 세계화, 문화적

17 『百度百科』, baike.baidu.com/item/人類命運共同體/1096715?fr=aladdin

18 『百度百科』, 위의 글. 이 글의 제목도 인류운명공동체를 글로벌 가치관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19 『百度百科』, 위의 글.

20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6일 평화 발전」 백서 발표(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6日發表『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 國務院新聞辦公室網站, 2011년 9월 6일.

다양화, 사회적 정보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으며 각국 간의 유대와 상호 의존은 심화되고 있지만 여러 공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식량 안보, 자원 부족,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인구 폭발, 환경 오염, 전염병 유행 등 초국제 범죄와 같은 전 세계의 비전통 안보문제가 차례로 등장하여 국제질서와 인간 생존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원하던 원하지 않든 사실상 이미 ‘운명공동체’가 되어 인류의 공동된 도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일종의 글로벌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구축의 출발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면서 담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국제사회에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상술한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회에 이어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이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 “역사를 통해 중국과 아프리카는 항상 ‘운명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공동의 역사적 난제, 공동 발전의 임무 및 공동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우리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발언했음을 밝히고 이를 최초의 사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13년 3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시대의 발전적 흐름에 순응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사례가 ‘인류 문명의 방향에 대한 중국의 판단’을 세계에 알린 시발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¹

이어 시진핑 주석이 2015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 연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지는 방안을 창안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운명공동체’를 향한 “네 가지 주장”을 제안하였는데 ① “각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견지하고, ②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견지하며, ③ 공통적·포괄적·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를 견지하며, ④ 서로 다른 문명의 포용과 수용 및 교류와 학습을 견지한다”

21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43쪽.

는 내용이다.

아프리카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 하이난성의 보아오로 무대를 옮기면서 ‘운명공동체’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로, 다시 ‘인류운명공동체’로 규모와 영향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2015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상호 의존적이며 동고동락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계승하고 이행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자”는 연설을 통해 명실공히 국제 무대에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위상을 드러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 촉진을 제창하였다. 중국의 당·국가·군의 최고 지도자가 제안하며 중시한 만큼 2017년 12월에 개최된 중국인 인벤토리 공식 행사에서 ‘인류운명공동체’가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2017년의 국제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8년 3월 개최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는 인류운명공동체를 헌법에 추가하기 위해 급기야 헌법까지 개정하게 된다. 헌법 서문 제 12번째 단락에서 기존의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를 “각국과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한다”라고 수정한 것이다.

2015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에 이어 2018년 4월에 개최된 아시아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제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인류운명공동체가 유엔 결의에 기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주목받도록 강조해온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중국의 권위 있는 문예월간지 『교문작자(咬文嚼字)』에서도 2018년 상위 10대 유행어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

2018년 12월 18일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지난 40년 개혁 개방의 중국의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요약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 중국의 지혜, 중국식 솔루션, 중국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반드시 개방 확대를 견지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부단히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²²

해를 거듭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구축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내용도 구체화되는 가운데 2019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에서도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시작을 알리는 시점부터 대두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이 처음에는 ‘운명공동체’와 ‘아시아 운명공동체’의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위한 ‘중국 솔루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중국 대내외적 컨퍼런스와 포럼의 연설에서 ‘인류운명공동체’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3월 26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 G20 특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하에 국가들과 방역에 관한 유익한 방법을 공유하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²³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담론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이어 중국 신화망의 3월 30일자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저서 『인류운명공

22 『百度百科』, 앞의 글.

23 「시진핑, G20 지도자 신관폐렴 대응 특별정상회의에서 중대담화(習近平在二十國集團領導人應對新冠肺炎特別峰會上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20년 3월 26일.

동체 구축 추진 견지를 논함』의 일문판이 출판되었는데, 외국 독자들로 하여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외교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²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견지를 논함』은 2018년 6월 중앙문헌출판사를 통해 이미 출간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원고 85편을 수록했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전하고 있다.

특히 ‘어떤 세계를 건설할지, 이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지’ 등 인류의 미래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과제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이론적 사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 실현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외교 사상의 풍부한 내용과 중국의 외교 방침 및 정책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상세하게 소개하였다.²⁵ 영문판의 경우 2019년 4월 중앙편역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는데,²⁶ 1년 만에 일문판이 출간된 것이다. 중국의 외교 사상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선전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광범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사회과학망의 5월 25일자 기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75주년을 기념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중국어) 국제 평등과 정의를 수호하고 다변주의를 지지하여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⁷ 중국사회과학망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국가

24 「시진핑,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하다』 일문판을 출판 발행하다.(習近平『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日文版出版發行)」, 『人民網』, 2020년 3월 29일.

25 「시진핑 동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하다』를 출판 발행하다.(習近平同志『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出版發行)」, 『人民網』, 2018년 10월 15일.

26 「시진핑,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하다』 영문판을 출판 발행하다.(習近平『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英文版出版發行)」, 『央視網』, 2019년 4월 9일.

27 「제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받아(從二戰歷史吸取經驗教訓)」,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 2020년 5월 25일.

전략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급 사회과학 학술연구 포털사이트이다.

2020년 1월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이 신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중국 특색의 역사학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판 『역사연구』, 『중국역사연구원집간』, 『역사평론』을 창간한다는 소식을 알렸다.²⁸ 전면적으로 전국 사학 연구를 총괄 지도하여 능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학술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 역사적 계몽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중국역사연구원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가 정상급 중국 역사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인류운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중국적 시각의 세계역사 서술 등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이 설립 목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 중앙의 요구에 부응하듯 중국역사연구원 고대사연구소 소장은 인민일보에서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구축을 위해 중국 고대제사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근거를 중국 사료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였다.²⁹ 시진핑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와 국가경영체계가 중화민족이 고대부터 형성해온 국가제도 및 국가경영체계 간 내재한 논리적 관계에 대해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국 고대의 ‘협화만방(協和萬邦: 만방 협력하여 평화를 이룬다)과 오늘날의 인류운명공동체 간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탐구하는 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28 「고급 학술 출판과 전파의 플랫폼을 마련한 중국역사연구원 역사연구잡지사 신간 발표회의 요점(打造高端學術出版和傳播平台-中國歷史研究院歷史研究雜誌社新刊發布會述要)」, 『人民日報』, 2020년 2월 3일.

29 「중국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구축을 위해 중국 고대제사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構建中國特色哲學社會科)人民日報:不斷深化中國古代制度史研究)」, 『人民日報』, 2020년 6월 22일.

‘협화만방(協和萬邦)’은 중국 고대 유가 오경(五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 곧 『상서(尙書)』 ‘요전(堯典)’의 ‘백성소명 협화만방(百姓昭明 協和萬邦)’에서 유래하였다.³⁰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근원을 중국 고대 원전에서 찾음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중국적 정체성을 역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2017년 2월 유엔 사회발전위원회 제55기 회의의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과 같이 “각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며, 냉전적 사고와 독재정치를 버리고, 대항하지 않고 대화하며, 동반자의 관계지만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와 국가가 새로운 길로 교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신형 국제질서를 이끄는 대국의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현상과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이 신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핵심 내용이 되어 공식 출간된 사실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까? 중국 최고 지도부가 새롭게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와 주요 언론을 통해 왜 동시에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강조하고 있을까?³¹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당장(中國共產黨黨章)”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가 “당과 정부와 군과 민간과 학교에서, 동서남북, 중앙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³²고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30 『尙書』권1, 堯典, 1쪽,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四部叢刊景宋本.

31 이와 관련하여 당 중앙의 통일전선 업무 방면에서의 참모 역할을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 중국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 결정 과정 등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것이 당장(黨章)에 기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怎樣認識“黨是領導一切的”寫入黨章?)」, 『人民日報』, 2018년 1월 25일; 『中國共產黨章程』, 2017, <https://zh.wikisource.org/wiki/%E4%B8%AD%E5%9B%BD%E5%85%B1%E4%BA%A7%E5%85%9A%E7%AB%A0%E7%>

국내의 각종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출간된 중국 역사교과서는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당장(黨章)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역대 당대회와 지도자들의 사상 및 주요 정책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인류운명공동체는 시진핑 2기 체제를 알리는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중국의 통합모델로 제시된 것이다.³³

인류운명공동체가 시진핑 제1기 체제보다 현저하게 부각되는 과정에서 근년 언론 보도는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국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밝힌 교과서에 인류운명공동체는 주요한 서술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³⁴에 반영된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의 지도적 사상과 기본 원칙에 ‘인류운명공동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 제작 시점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보다 일렀을 것으로 본다면, 현행 교과서에 중국 최고 지도부의 공식적인 담론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 중국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을 근거로 신속한 보완 작업이 수반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음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와 비교 대조하는 차원에서 중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다룬 인류운명공동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8%8B_(2017%E5%B9%B4)

33 이희옥, 2017,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결과와 의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34 李卿 編輯, 2018, 앞의 책.

Ⅲ. 중국 초중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인류운명공동체 서술

중국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의 『도덕과 법치』, 『어문』, 『역사』 과목의 교재는 국정에 해당하는 통편 교재만 사용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³⁵

『도덕과 법치』는 기존의 『사상과 품덕』을 변경한 과목으로, 개인,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는 윤리를 교육한다. 초등학교의 『도덕과 법치』의 경우 5학년, 6학년 상하책에서 찬란한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역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중 『도덕과 법치』 6학년 하책의 제4단원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자”에서 인류운명공동체와 연결된 인류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³⁶ 다시 제1과 ‘과학기술의 발전, 인류 복지의 건설’, 제2과 ‘날로 중요해지는 국제 기구’, 제3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의 소단원으로 나누고, 제2과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과 국제기구’라는 주제의 단원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을 기치로 하여 민족 부흥의 중심축을 촉진하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이행하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하였다. 초등학생 교육과정부터 국내적·국제적 책무를 동시에 발휘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국 창설 회원국으로 연합국 설립과정부터 참여한 중국은 연합국 안보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관계된 중대한 실무에 관한적인 발언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본래 스스로 중대한 국제적 책임을 짊

35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17, 「교육부 관공실의 2017년 의무교육 도덕과 법치, 어문, 역사와 초등학교 과학 교학용서에 관한 사항 관련 통지(教育部辦公廳關於2017年義務教育道德與法治·語文·歷史和小學科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教材廳函(2017)6號).

36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義務教育教科書 道德與法治 六年級』, 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어지고 있으며 연합국의 권위를 존중하고, 각 항목의 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인류 평화와 발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³⁷

‘활동 공원’이라는 보조 학습 코너에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연합국 창립 70주년 기념활동에 참가하여 ‘중국은 시종 세계의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을 소개한 뒤 학생들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대화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연합국 이외에도 중국이 각종 국제 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다자적인 사무에 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질서와 국제체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향해 발전하도록 중국이 속해 있는 연합국, 세계 주요 20개국(G20),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시 ‘활동 공원’에서 중국이 참가하는 국제 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국제 기구에 대한 공헌도 점차 많아진다고 평가하면서 학생들에게 중국이 가입한 국제 기구와 그 국제 기구를 소개한 자료를 배열한 뒤 서로 상응하는 내용을 연결 시키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 소개한 자료에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설립한 국제조직이라고 서술하면서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 발전의 “상하이 정신”을 창도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과 질병, 빈곤, 환경 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재난과 고통에 대해 서술한 뒤, ‘평화는 세계의 조류’라는 소주제하에 평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의 주요 추세로 일부 전쟁의 빈도와 규모가 하강세를 드러내고 있고, 평화는 힘들여 얻은 것이니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거행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국가 주권은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므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제도 및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

37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위의 책, 71쪽.

총본부 앞에 있는 평화를 상징하는 “뭉인 권총”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³⁸ 이어 ‘중국의 평화를 위한 공헌’이라는 소주제하에 중화민족은 역대로 평화를 사랑하며 시종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왔고, 자주 독립과 평화외교 정책을 실행할 것을 확고히 해왔다고 평가하였다.³⁹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부 실무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이웃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함을 부각시킨 것이다.

위의 본문과 관련된 보조 학습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중국은 확고부동한 평화공존의 5원칙, 즉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공존의 기초 위에 각국과 협력하며 발전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5원칙 중 주권, 영토 등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를 반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홍콩,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의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권력 정치를 반대하며, 패권은 영원히 잡거나 확장시키실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국제 핫이슈에서 중국의 소리를 낼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2018년 12월 18일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과 동일하다. 중국이 권력 정치와 패권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주권, 영토 보전 및 상호 불가침의 원칙과 함께 궁극적으로 미국을 지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과정부터 현재 중국의 국제문제의 입장과 외교 정책 및 방향을 확고하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단원의 마지막 단락에서 중국은 시종 공동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견지해왔는데 평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임을 명시하며, ‘일대일로’가 바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실천적 플랫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8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위의 책, 78쪽.

39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위의 책, 79쪽.

본문 아래 다음과 같은 대화와 삽화를 통해 ‘일대일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그림 1 참조).⁴⁰

“내가 듣기로는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및 부근의 해양의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에 힘써 연선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들었어.”

“나는 100여 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가 보기에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는 바로 공동으로 발전하고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사례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대화하는 형태로 ‘일대일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대일로’ 건설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나아가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의 역할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중국은 시종 세계 평화의 건설자요,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중국 군대는 시종 세계 평화를 보호하는 굳건한 역량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설립 이래 시종 중국인민의 수호자요, 국가안보의 보호자이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확고한 보위자다. 강대한 국방역량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중요한 보증이다. 근년 이래 중국 군대는 해상 구조 원조, 평화유지군, 합동군사훈련과 해적퇴치 등 국제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영역에서 대국의 책임을 전달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건설을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0 教育部組織編纂 魯潔 總主編, 2020, 위의 책, 80쪽.

活动园

让我们一起收集中国在联合国的声音和身影吧!



2015年,习近平参加联合国成立70周年纪念活动,表示中国将始终做世界和平的建设者、全球发展的贡献者、国际秩序的维护者。

结合中国参加联合国活动的具体例子,谈谈你对习近平主席这句话的理解。



中国始终坚持走共同发展的道路,通过发展促进和平,打造人类命运共同体。“一带一路”建设是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重要实践平台。

我听说,“一带一路”致力于亚洲、欧洲和非洲大陆及附近海洋的互联互通,加强沿线各国之间的合作关系。

我知道,有100多个国家和国际组织参与“一带一路”建设。

我觉得,中国提出的“一带一路”倡议,就是共同发展、共享和平的最佳例证。



.....

中国始终是世界和平的建设者、国际秩序的维护者,中国军队始终是维护世界和平的坚定力量。中国人民解放军自成立以来,始终是中国人民的守护者、国家安全的维护者,是世界和平的坚定捍卫者。强大的国防力量,是维护和平、打赢战争的重要保障。近年来,中国军队积极参与海上救援、维和、联合军事演习和反海盗等国际军事活动,在安全领域承担大国责任,为维护世界和平,促进共同发展作出了重要贡献。

그림 1 『도덕과 법치』(6학년, 하) 4단원의 2015년 시진핑의 연합국 창립 70주년 기념 연설과 ‘일대일로’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출처: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義務教育教科書 道德與法治 六年級』(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80쪽.

본문에 이어 중국인민해방군 현역부대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및 전략 지원부대로 구성되었음을 소개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연이어 2016년 11월까지 중국이 앞뒤로 24회의 연합국 수호행동을 참가했고 누계하면 3만이 넘는 군사 인원, 경찰, 군사관원을 배출하였음을 설명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⁴¹

이상의 초등학교 『도덕과 법치』 6학년 하책은 2020년 1월에 인쇄되었기에 최신 판본의 내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 이어 중등과정에서는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 『중국역사』 하책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담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중국역사』(8학년, 하)는 중국 정부가 2011년 말, 애국주의 정치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제정한 뒤 2017년 중등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한 후 새롭게 개발한 교재라 할 수 있다.⁴²

전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대를 다루면서 국가 발전의 전체적 국면과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신발전 이념 수립을 제안하고, ‘일대일로’ 건설을 통한 중국과 세계의 공동번영 구현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인류운명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⁴³

『중국역사』(8학년, 하)의 경우 『도덕과 법치』 6학년 하책에 비해 두 단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량도 늘렸다. 초등과정과 연계하면서 비중 면에서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과정의 연계뿐 아니라 중등과정 내에서도 중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역사』 7학년 상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무제 시기 해상 실크로드를 소개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2013년 관련국들에게 제안한 ‘일대일로’ 정책을 설명한 뒤, 송대

41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위의 책, 80쪽.

42 김지훈, 2019, 앞의 글.

43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시기 해외무역도와 원대 교통노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당대 국가 플랜의 역사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현대사편인 『중국역사』(8학년, 하)에서 ‘일대일로’를 현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강조하고, 미래의 전방위 외교전략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교육방침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3단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 제11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도입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전체적인 국면을 장악하여 전략을 짜고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막강한 힘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제11과를 다시 ‘중국몽의 웅대한 청사진’, ‘네 가지 전면 전략’, ‘신발전 이념’, ‘경제 건설의 중대한 성과’의 소주제로 나눈 뒤 ‘경제 건설의 중대한 성과’의 본문 아래 ‘관련 역사’라고 하는 보조 학습 코너에서 ‘일대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⁴⁵

‘일대일로’, 즉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60여 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고 동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권, 서로 유럽경제권에 잇닿아 있으며,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약 44억 인구가 포함되며, 경제총량은 21만 억 달러로 각각 전 지구의 63%와 29%를 차지한다. ... 종합국력이 지속적인 강대해짐으로써 중국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 전략목표를 실현하고, 국제대회를 주최하며, 돌발상황에 대응하고, 대형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물질적 기초와 정신적인 힘을 갖추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합국력이 부단히 향상됨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은

44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a,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71쪽;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b,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45쪽,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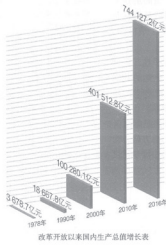
45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앞의 책, 57쪽.

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提出要牢固树立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新发展理念, 着力提高发展质量和效益, 形成平衡发展结构, 改善生态环境, 实现合作共赢, 增进人民福祉。

新发展理念针对的是我国发展中的突出矛盾, 回答的是中国当前最为紧迫的现实问题, 关系我国发展全局和未来发展前景。

经济建设取得重大成就

改革开放以来, 我国社会主义现代化建设取得了巨大成就。中国的国内生产总值持续高速增长, 粮食、棉花、肉类和原煤、钢、水泥等 200 多种工农业产品的产量在世界名列前茅。我国人民生活水平大幅提高, 综合国力不断跃上新台阶。



近年来, 我国经济发展的内外环境发生深刻变化。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作出我国经济发展进入速度变化、结构优化、动力转换的新常态的科学判断。我国创新宏观调控的思路和方式, 优化升级产业结构, 积极推进科技创新, 保障了国家经济的持续稳定增长。

中共十八大以来, 我国加快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 深入实施“一带一路”建设, 筹建和成立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加快自由贸易试验区建设, 推进人民币国际化进程, 体现了中国与世界其他各国携手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的美好愿望。

相关链接

“一带一路”, 即“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它涉及 60 多个国家和地区, 东非亚大陆东端, 衔接欧亚经济走廊, 穿越非洲, 环连亚欧, 涉及人口约 44 亿, 经济总量约 21 万亿美元, 分别占全球的 63% 和 29%。

2013 年以来,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等多个自贸试验区成立。在自贸区内, 跨境贸易和投资更加自由和便利。自贸区的“一带一路”建设在国内的重要支点。

2015 年 12 月,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正式成立, 这是全球首个由中国倡议设立的多边金融机构, 旨在为亚洲国家的基础设施建设提供资金支持, 推动“一带一路”建设顺利实施。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开业仪式

综合国力的持续增强, 使中国在实现国家重大战略发展目标、主办国际盛会、应对突发事件、战胜重大自然灾害等方面具备了雄厚的物质基础和精神力量。伴随着综合国力的不断提升,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

知识拓展

构建人类命运共同体

中共十八大以来, 习近平着眼于世界格局和发展大势, 提出“人类命运共同体”的新思想理念, 并在多个场合阐述了这一理念。

2015 年 9 月 28 日, 习近平出席第 70 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 发表了题为《携手构建合作共赢新伙伴, 同心打造人类命运共同体》的重要讲话, 强调要构建以合作共赢为核心的新型国际关系, 打造人类命运共同体。习近平在讲话中指出, 实现此目标需要我们从以下几方面努力: 要建立平等相待、互商互谅的伙伴关系; 要营造公道正义、共建共享的安全格局; 要谋求开放创新、包容互惠的发展前景; 要促进和而不同、兼收并蓄的文明交流; 要构筑尊崇自然、绿色发展的生态体系。中国打造人类命运共同体的倡议引起国际社会的热烈反响, 对当代国际关系的影响积极而深远。

2017 年 2 月, 联合国社会发展委员会第 55 次会议协商一致通过“非洲发展新伙伴关系的社会层面”决议, “构建人类命运共同体”理念首次被写入联合国决议中。

그림 2 『중국역사』(8학년, 하) 제11과 『관련 역사』의 ‘일대일로’, ‘지식 확장’의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

출처: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56~58쪽.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일대일로’의 설명에 이어 ‘지식 확장’이라고 하는 보조 학습 코너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⁴⁶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시진핑은 세계 구도와 발전의 추세에 착안해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새로운 사상 이념을 제안하고 여러 자리에서 이 이념을 거론하였다.

2015년 9월 28일 시진핑은 제70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참석하여 ‘손잡고 협력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뜻깊은 연설을 통해 협력 상생을 핵심으로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 인류공동운명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의논하며 서로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함께 건설하고 누리는 안전한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포용적인 발전모드를 도모하고, 화이부동(타인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 겸수병축(개방적 태도로) 서로 다른 내용의 사물을 받아들이고 보존한다]의 문명교류를 촉진하며, 친자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제안은 국제사회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 국제관계에 긍정적이고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2017년 2월, 유엔 사회발전위원회 제55기 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 동반자 관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이 처음으로 유엔결의안에 실리게 되었다.

46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위의 책, 58쪽.

상술한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바이두의 설명과 초등학교의 『도덕과 법치』 6학년 하책의 서술에 비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위대한 역사적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 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한 것이다.

제3단원 제11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이어 제5단원 ‘국방건설과 외교성공’의 제17과 ‘외교의 발전’에서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을 다루고 있다. 『도덕과 법치』 6학년 하책의 구조와 동일하게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앞서 제15과 ‘굳건한 국방건설’, 제16과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견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조건이자 중국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제15과 ‘철벽장성’에서 ‘육·해·공군의 건설’, ‘미사일 부대의 발전’, ‘신시대 강군의 길’의 소주제로 본문을 구성한 뒤 중국의 군대 개혁이 거둔 중대한 성과와 강한 군대 건설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서술한 다음에 제16과 ‘독립자주적 평화외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 확장 코너 ‘100만 대군축’에서 1980년대에 들어선 이래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한동안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예견하였다고 설명한 뒤 중국인민해방군의 100만 감축을 전 세계에 선언한 내용이 사실상 이 단원의 마지막이라 새 단원인 ‘평화외교’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제16과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의 ‘평화공존 5원칙의 제시’라는 소단원에서 미국 등 일부 제국주의 국가는 신중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며 외교 고립 정책을 실행하여 중국과는 수교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 봉쇄와 통상정지를 실행하였다고 서술한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7과 ‘외교의 발전’의 ‘중미 수교와 중일 수교’에서도 신중국 수립 후, 미국정부는 신중국을 적대시하였으며 신중국에 대해 봉쇄와 통상 정지, 포위와 위협 정책을 실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전방위 외교’라는 소단원에서 제3단원 제11과 동일하게 ‘일대일로’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소개하고 있다.⁴⁷

전방위 외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시행하였고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다른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 개선과 발전을 중시하고 개도국과의 정치경제 협력 강화를 중시했으며, 중미·중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힘쓰고 중소관계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며 EU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전 세계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상(共商: 지혜를 한데 모아 이익공동체를 구축함)·공건(共建: 전략과 힘을 모아 책임공동체를 구축함)·공향(共享: 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운명공동체를 구축함)의 글로벌 통치관을 견지하고,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시대 조류에 순응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은 다자 경제·사회 영역의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환경, 식량, 범죄 예방, 마약, 난민, 여성 등 글로벌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방위, 다차원, 입체화의 외교 구도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170여 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00여 개의 정부 간 국제단체 업무에 참여하였다. 중국은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서밋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등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 지위는 계속 높아져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견고한 주체가 되었으며 국제 사무에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일대일로’ 국제협력서밋포럼에 참석한 지도자

47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위의 책, 87쪽.

및 국제기구 책임자들과 옌시후(雁栖湖) 국제컨벤션센터를 나서는 시진핑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⁴⁸

구판에 없었던 제3단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서 새롭게 제11과 ‘중국몽 실현을 위한 노력과 분투’를 추가하여 ‘뉴 노멀 시대’, ‘일대일로’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보편논리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들에게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과 함께 대외적으로 전방위 외교정책인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IV. 『중외역사강요』 속의 인류운명공동체 서술

중국 초중등 역사과정에 비해 고등학교 역사과정인 『중외역사강요』에서는 세계사 중 현대 부분에 해당하는 하책의 마지막 제9단원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역사 1』에서는 제8단원 ‘오늘날 세계정치 구도의 다변화 추세’에서 제25과 ‘양극화 세계의 형성’, 제26과 ‘다극화 세계의 출현’, 제27과 ‘세기의 교차점에서의 세계 구도’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마무리하였다.⁴⁹

한편, 신판 『중외역사강요』에서는 제9단원 ‘당대 세계 발전의 특징과 주요 추세’에서 제22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 제23과 ‘평화발전과 협력공

48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8c, 위의 책, 88쪽.

4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9,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18~129쪽.

영의 시대조류'를 소주제로 나누고 기존에 없었던 활동과(活動課) '세계로 눈을 돌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추가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⁵⁰

제22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는 구판의 소주제와 비슷하지만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제23과와 활동과는 구판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인류운명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구판의 제7단원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의 단원 도입 부분에서 개혁개방 이래 중국정부는 연합국과 지역별 국제조직의 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찬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한 뒤 세계 평화 수호와 인류 공동 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¹

사실상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신판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구판의 '세계 평화 수호와 인류 공동 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대한 공헌'의 내용과 상호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중외역사강요』 제9단원 도입 부분부터 인류운명공동체와 관련된 서술을 소개하면서 상술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과 비교 대조해보고자 한다.⁵²

오늘날 세계는 바로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 시기에 처해 있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이 시대의 주제이다. 세계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정보화, 문화다양화는 심화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의 변혁은 가속화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의 상호 연계와 의존은 날로 심화되어 국제역량을 비교하면 더욱 균형 있게 되어 평화 발전의 대세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계는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한 돌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인류가 당면한 여러 공동의 도

50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32~145쪽.

51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9, 앞의 책, 107쪽.

52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32쪽.

전을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세계는 백 년간 전무한 대변화에 직면하여 중국이 창안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 평화 발전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건설에 대해 제안한 중국의 지혜이며 중국 솔루션이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냉전 종식 후 세계 발전의 특징과 글로벌 문제를 알아보고 인류사회가 당면한 기회와 도전을 인지하며,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시대 조류를 이해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의식을 견고히 수립하여 전지구의 평화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초중등 역사교과서에 비해 『중외역사강요』에서는 단원 목표로서 시작부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제22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에서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대형 대국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세계를 세우고자 희망했지만 9·11사건,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동요되면서 어렵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주도할 힘이 없다고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한층 더 개혁개방하여 평화 발전을 이루고, 다자 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호 존중·공평정의·협력공생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대국의 역할을 현재 발휘하고 있고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서술하여 미국과 대비시키고 있다.

제23과 ‘평화 발전과 협력공영의 시대조류’의 ‘인류발전이 직면한 문제’라는 소단원에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래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빈부 격차가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³

오늘날 세계는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며 평화와 발전은 엄중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 반면 최고 빈곤층 50% 인구가 소유한 자산은 인류 재산 총량의 1%를 차

53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39쪽.

지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 『2018년 글로벌 빈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의 26개 대부호의 자산이 지구의 최하 빈곤층 38억 인구의 전 재산에 해당한다. 평화와 안전 방면에서 지역의 핫이슈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실마리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고 2018년 1월까지 이미 540만 명의 난민이 생겼으며,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하였다. 이 외에 핵 확산, 국제 형사 범죄, 생태환경 악화, 테러리즘, 인터넷 안보, 큰 전염병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만연하며 해양권익과 자원 쟁탈이 날로 격렬해지고 패권주의와 독재정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류는 여러 공동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 솔루션’으로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당위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사 중흥’이라고 하는 보조 학습 코너에서 인류의 공동 난제 중 생태환경 악화에 해당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설명하면서 2019년 미국이 정식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음을 서술하였다. 이어 ‘협력공영 중 글로벌 공동 발전의 촉진’이라는 소단원에서 연합국, 국제화폐기금조직, 세계은행, 세계무역조직 등 각종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한 주요 국제 조직을 소개하였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성립된 상하이협력조직이 현재 유효하게 유라시아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2009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와 2015년 설립된 신개발은행 등은 브릭스 국가들이 협력공생하여 신흥시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한 뒤 이러한 조직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특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인류가 직면한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고 반복 서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평화공존의 5원칙으로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세계는 백 년간 전무한 대변화에 직면하고, 냉전 후 국제질서에 존재하는 혼란과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였기에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창안하여 한층 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초중교재의 서술과 중심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본문 중간에 ‘사료 열독’이라고 하는 보조 학습 코너에서 다음과 같은 시진핑의 연설문을 인용하였다.⁵⁴

우리는 각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 지속, 보편적 안전, 공동 번영, 개방 포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호소한다. ...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으로 이견을 해소하며, 전통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한 배를 타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보다 개방적·포용적으로 혜택을 베풀고, 균형 있게 함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의 교류로 문명의 벽을 뛰어넘으며, 문명의 상호 존중이 문명의 충돌을 넘고, 문명의 공존이 문명의 우월을 초월하게 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이고,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인류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구촌을 잘 보호해야 한다. -[사료 열독 『시진핑: 소강사회의 전면적 성취는 반드시 이를 것이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2017. 10. 18.)]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통해 각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상호 존중하고 평

54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41쪽.



▲ 2017年在中国厦门召开的金砖国家峰会的徽标

① 史料阅读

我们呼吁，各国人民同心协力，构建人类命运共同体，建设持久和平、普遍安全、共同繁荣、开放包容、清洁美丽的世界。要相互尊重、平等协商，坚决摒弃冷战思维和强权政治，走对话而不对抗、结伴而不结盟的国与国交往新路；要坚持以对话解决争端、以协商化解分歧，统筹应对传统和非传统安全威胁，反对一切形式的恐怖主义。要同舟共济，促进贸易和投资自由化便利化，推动经济全球化朝着更加开放、包容、普惠、平衡、共赢的方向发展。要尊重世界文明多样性，以文明交流超越文明隔阂、文明互鉴超越文明冲突、文明共存超越文明优越。要坚持环境友好，合作应对气候变化，保护好人类赖以生存的地球家园。

——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构建人类命运共同体，是基于中国对当今世界和平与发展大势的准确把握，是源自中华文明“以和为贵”“协和万邦”的和平思想与和谐理念，是中国为推动世界和平与可持续发展给出的一个可供选择的、理性可行的行动方案，是为了推动国际秩序和国际体系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发展。

人类命运共同体的建设是一个长期、复杂和曲折的过



▲ “一带一路”宣传画

探究与拓展

② 问题探究

有人这样理解“人类命运共同体”：

（他们）将地球比作一艘大船，190多个国家就是这艘大船的一个个船舱。世界各国只有相互尊重、平等相待，合作共赢、共同发展，实现共同、综合、合作、可持续的安全，坚持不同文明兼容并蓄、交流互鉴，承载着全人类共同命运的“地球号”才能乘风破浪，平稳前行。

你同意这种理解吗？谈谈你对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认识。

③ 学习拓展

搜集“一带一路”的资料，以图文并茂的形式呈现“一带一路”倡议和具体实施情况，特别在政策沟通、设施联通、贸易畅通、资金融通、民心相通等方面的国际合作，进一步理解中国在构建人类命运共同体中作出的努力。

그림 3 『중외역사강요』(하) 제23과 '시료열독' 및 '학습개척'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일대일로' 선전도

출처: 教育部組織編寫, 2020, 『中外歷史綱要』(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41쪽.

등하게 협상하며, 냉전적 사고와 독재정치를 버리고 대화하며, 동반자의 관계
지만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와 국가가 새로운 길로 교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중국 역사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중국이 오늘날 세계 평화와 발전 추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
악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며, 그 근원은 중화문명의 “이화위귀(以和爲貴:
조화를 귀하게 여기다)”, “협화만방(協和萬邦: 만방 협력하여 평화를 이룬다)”의
평화사상과 조화 이념이다.⁵⁵

상술한 인민일보의 논설에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뒷받침하는 중국 사
료로 ‘협화만방’을 인용한 사례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본문에서 중국은 세계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국제질서와 국제체제가 더
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장기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 정부가 솔선
수범하여 몸소 힘써 실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행 방안으로서 ‘일대일로’ 창
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⁵⁶

2013년 중국이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약칭 “일
대일로” 협력 창의이다. 이 창의는 중국의 고대 실크로드가 남긴 고귀한 교훈이
남겨준 것으로 각국 국민이 평화와 발전의 공동 꿈을 추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개
방 포용의 공상(共商)·공건(共建)·공향(共享)의 원칙을 굳게 지켜 중국과 관련
국가의 경제협력, 공동 번영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

55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41쪽.

56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41쪽.

이다. 2014년 11월 중국은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여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기간 동안 각 나라가 283개 항목 수행 성과를 달성했고, 총액 640억 달러의 항목 합작 협의에 서명하였다. 이 외에 2015년 12월 중국이 창의하여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정식으로 수립하였고 약칭 “아투행”이라 한다. 2019년 7월 아투행은 이미 100여 개 회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이 현재 자신의 발전을 통해 세계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창의를 각국 국민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의 비전에서 착안했음을 밝힌 기술은 상술한 『중국역사』(8학년, 하)의 맥락과 동일하다. 이 외에 2019년 7월 ‘아투행’의 현황 등 ‘일대일로’ 창의를 통해 거둔 최신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의 본문에 이어 ‘역사 종합’ 코너에서 다음과 같이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⁷

2019년 5월 15일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은 ‘문명교류의 상호학습 심화로 아시아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찬란한 문명 성과를 전승하고 높여 문명의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 상호 학습과 상호 귀감에 목적을 두고 공동 발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아시아 문화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창조적 능력을 분발시켜 아시아 운명 공동체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신적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

57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42쪽.

‘아시아문명대화대회’는 중국이 2019년 5월 15~22일까지 ‘아시아문명주간’으로 선포하고, 전통 음식과 음악 등 문화를 교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학술행사이다. 캄보디아, 그리스, 싱가포르,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대표단 2,000여 명이 참석한 국제행사였다.

『중외역사강요』 제9단원의 본문에서 인류운명공동체에 집중 조명하다가 갑자기 ‘아시아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상술한 2015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인류운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 방안으로 착안되었다고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미국의 ‘채무 함정 외교’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자 ‘아시아운명공동체’로 가까운 우군부터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⁵⁸

9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복습 효과를 위한 ‘탐구와 확장’이라는 코너의 ‘문제 탐구’에서 “어떤 사람은 인류운명공동체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⁵⁹

(그들은) 지구를 하나의 큰 배에 비유하고, 190여 개 국가가 바로 이 큰 배의 하나 하나의 선창(船艙)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이 ‘상호 존중’, ‘평등 대우’, ‘협력공영’하여 ‘공동발전’하고 ‘공동’, ‘통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를 실현하고,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포용과 수용’, ‘교류하며 상호 귀감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할 때만 전 인류 공동 운명의 “지구호”라는 적재 중량을 견딜 수 있고 비로소 풍파와 물결을 타고 평온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58 「시진핑 “다른 문명 개조 시도 어리석어” 트럼프 겨냥」, 『경향신문』, 2019년 5월 15일.

59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42쪽.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를 ‘지구호’라는 큰 배에 비유하고, 이러한 이해에 동의하는지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대화하게 하고, ‘학습 확장’에서 ‘일대일로’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일대일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현황과 중요한 의의를 발언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가 핵심 주제어인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집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식과 국제적인 시야를 갖추도록 하고 시대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 2017년 보통 고등학교 역사과정 표준의 집필지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이 본문에서 다룬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서술 사례라면 『중외역사강요』의 전체 단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활동과도 인류운명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보면 초등과 중등에 이어 고등학교 역사과정에서 다룬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와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⁰

세계로 눈을 돌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다

지금 세계는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調整)의 시기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상호 연계와 의존이 날로 깊어져 평화와 발전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인류는 많은 공동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은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운명공동체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중요 국가조직과 여러 해외교(主場外交), 그리고 정상급 다자외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제창하였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은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원인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 한마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류운명공동체의

60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143쪽.

합의를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밝히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2017년 2월 10일,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은 처음으로 유엔 결의에 채택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유엔대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사회발전위원회의 결의에도 채택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평화발전 도로를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밝혔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는 중요한 사상은 새로운 시대가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하는가’라는 큰 문제에 대한 회답이었다. 이는 신시대 중국 외교에 대한 고도의 설계이자, 세계가 맞이한 공통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방안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고등학생으로서 정확하고 넓은 세계적 시야를 갖추고, 인류 발전 청사진에 대한 충만한 믿음을 갖추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깊은 이해력으로 우리의 현재 학습을 국가 발전 및 세계 발전과 연계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 진보 사업에 지혜와 역량을 바칠 뜻을 세워야 한다.

『중외역사강요』 제9단원의 본문 전체에서 인류운명공동체가 10회 이상 언급된 반면 위의 활동과 안에서만 인류운명공동체가 8회 이상 반복되고 있다. 활동과의 주제에서도 밝혔듯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대한 중요한 사상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사의 학습과 중공 19대 보고 정신을 결합시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핵심 사상 및 구체적 내용과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활동과의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인류운명공동체는 『중외역사강요』 하권 전체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현재 세계의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말아야 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는 목적 의식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의 행복과 세계 인민의 행복’을 긴밀히

연결시킨 ‘국제주의 정신’을 형성하게 하고, 정확한 국제적 시야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전 인류의 역사적 운명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발전, 합작, 윈윈을 위해 공헌을 하고자 하는 인생의 이상을 확립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과의 활동과정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사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세계사 발전과정을 사고하게 한 뒤 왜 과거에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질문한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세계 각국의 상호 연계와 상호 의존의 정도가 전례 없이 심화되고, 인류는 같은 지구촌 안에 생활하고 있는데, 왜 중국은 이 시점에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이념을 제기하였는지 거듭 반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2단계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국제 정치와 경제 발전의 총체적 특징, 현재 인류가 대면하고 있는 공통된 도전 등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하도록 한 뒤, 세계 대부분 국가가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질서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공동 이익에 대해 사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중국몽은 어떠한 국제환경과 국제질서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과 중국몽 실현의 긴밀한 관계를 인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중화민족의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식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한 내용과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무대에서 제시한 중국식 솔루션인 ‘인류운명공동체’가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의 함의와 의의까지 깊이 이해하게 하여 초보적 토론을 진행하게 한 뒤, 4단계에서 관련 문건과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5단계에서 조별 대표 발표 후 종합 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외역사강요』에 나타난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류운명공동체에 관련된 서술은 초등 및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모두 주요한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서로 연결되면서도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은 피하고 상호 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초중 교과서에서 학습한 기초 지식이 『중외역사강요』에서 단계적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해 세계사에 해당하는 『중외역사강요』 하책 9단원에 서술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지만 사실 중국사에 해당하는 『중외역사강요』 상책의 9단원에서도 서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외역사강요』 상책의 9단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사회주의혁명 건설’의 소단원 제29과 ‘개혁개방 이후의 거대한 성취’의 마지막 소주제인 ‘국제적 영향력의 부단한 확대’에서도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를 다루면서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⁶¹ 『중외역사강요』 상책에서도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중국몽’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긴밀한 연결처럼 중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물사관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사관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 결과, 현 중국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인류사회 발전에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주장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외역사강요』 상하책에서 중국 중심의 중국사와 세계사 서술을 통해 얻은 결론이 중국이 추구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으로 귀결되고 있어 중국의 세계 전략을 교육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을 강조하여 중국이 향후 신형 국제질서를 이끄는 대국의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61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181쪽.

V.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의 함의와 시사점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통치 이론이 담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국정 방향을 천명하면서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당 지도부의 대내적 국정운영 지침이라면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의 세계 전략으로서 세계 지도국가로 부상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외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관영통신인 신화사는 여러 기사를 통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시진핑 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면서 2018년 3월에 보도한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론은 세계 흐름을 이끄는 시대적 계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중국 당 지도부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구축을 끊임없이 과장해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부정적이다.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이 표방하는 ‘공동 번영’, ‘포용과 개방’의 개념과는 대비되게 남중국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미중 무역전쟁도 아울러 격화되고 있어 오히려 국제적으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당대 세계 전략으로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은 중국이 오늘날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 위에 제안한 것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체는 중국이 신형 국제질서를 이끄는 대국의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외역사강요』 하책 제22과 ‘세계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에서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2011년 외국 무역 수출 총액이 5,098억 달러에서 3만 6,0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제1의 수출국, 제2의 수입국이 되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과서 본문 오른쪽에 삽입한 학습초점에서 냉전 종식 이후 급부상한 글로벌 문제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세계를 주도할 힘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함과 동시에 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⁶²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슈퍼 대국으로서 미국 주도의 일원화된 세계 건설을 희망하였다. 9·11사건 이후 미국은 ... 2001년 10월 아프칸 전쟁을 일으켰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발동하였다. 이 전쟁으로 중동의 혼란을 한층 더 고조시켰고 미국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세계를 주도할 힘이 없었다. 세계는 현재 다극화되고 있고 그 발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 발전, 공동 번영, 개방 포용’ 등 이상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이른바 세계 각국 국민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외역사강요』의 주변국에 대한 서술은 ‘포용’과 ‘상호 존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상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체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중외역사강요』의 경우 하책 18과 ‘냉전과 국제구조의 변천’에서 전후 미국의 패권과 야심이 날로 팽창하였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 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산주의 반대를 외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경제 대국을 유지하면서 정치 및 군사 대국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원대한 전략 목표로 삼았다고 서술하였다. 구판 교과서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의도적으로 많이 추가되어 향후 중국의 반미·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민족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중외역사강요』에 일본과의 센카쿠(조어도) 열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학문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원나라의 왕대연(汪大淵)도 아프리카에 갔고, 모로코 중에서도 탕헤르(Tangier)까지 갔었을 것이라 하며 『도이지략(島夷志略)』을 찬술했다고 서술하고 있다.⁶³ 『도이지략』에는 팽호열도, 류큐에 대해 기록하

62 教育部組織編寫, 2020, 앞의 책, 133~135쪽.

63 教育部組織編寫, 2020, 위의 책, 29쪽.

고, 대만이 자고 이래로 중국 영토이며, 팽호 열도가 중국 동남해강임을 밝혀주는 기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이 외에 『중외역사강요』 상책 제17과 ‘국가의 출로 탐색과 열강 침략의 가속화’에서 명칭 시기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중변관계를 형성했다고 서술하였다. 중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나라를 번속국으로 규정하고 조선, 류큐, 베트남, 미얀마 등이라고 명시했으며, 1879년 일본이 류큐를 합병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⁵ 주변국에 대해 번속국과 중변관계를 강조한 것은 주변국 역사의 독자성보다 중국과의 정치적 예속관계를 역설한 것으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드러낸다.

물론 ‘역사중흥’이라는 보조 학습 코너에는 중변관계에 대해 경제문화 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명청시대에 중국과 주변 여러 나라 사이에는 일종의 중변관계인 국가관계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비교적 신중하게 언급하고 있다. 종주국은 번속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 이른바 ‘번속국’의 중국 왕조에 대한 종속성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⁶⁶

공교롭게도 『중외역사강요』 이전 고교 교과서인 구판 『역사 1』의 제12과 ‘갑오중일전쟁과 팔국연합군의 침화(侵華: 중화 침략)’에서는 1895년 청정부는

64 원대 취엔저우(泉州) 항만이 발달할 시기에 대만이 팽후(澎湖)는 취엔저우(泉州) 진강현(晉江縣)과 예속관계임을 언급하고 있다[吳遠鵬(Yuanpeng Wu), 2018, 『航海游歷家汪大淵與《島夷誌略》(Navigator Wang Dayuan and His Travel Book “Daoyizhilue”)』, 『中國港口(China Ports)』, 49쪽]. 반면 국내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島夷誌略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별개의 정보에 기반하여 이역과 외국 관련 지식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고 한다. 특히 현실 정치 세계의 우열이나 세력 판도를 고려하지 않고 서술하였음을 밝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수경, 2018, 「섬 오랑캐들의 이야기: 島夷誌略의 세계와 帝國的 재구성」, 『중국학보』 85.

65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98쪽.

66 『중외역사강요』의 중화주의로 재구성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서술 및 중변관계에 대한 개념 관련은 권은주의 「『중외역사강요』의 한국 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동북아역사논총』 70, 2020) 참조.

일본과 굴욕적인 ‘마관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며 조약 규정에 ‘요동반도, 대만과 부속도서,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한다’라고 하여 ‘번속국’ 관련 직접적인 서술은 없다.⁶⁷

그러나 『중외역사강요』 상책 제17과에는 일본이 일찍이 중국의 대만과 번속국 조선, 유구를 점령한 후, 중국 대륙을 진격했다고 서술하고, ‘마관조약’을 설명하면서 요동반도 앞에 ‘조선 독립의 승인’을 추가한 것이다.⁶⁸

일부 중국 학자들은 청조와 주변국의 관계를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맺어진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⁶⁹ 번속이론⁷⁰은 종래 중국 학계에서 널리 언급되지 않던 이론으로 중국의 역대왕조와 한반도에 나타났던 왕조들 간의 관계가 실질적인 지배와 복속의 종번관계⁷¹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외역사강요』 상책의 경우 제29과 ‘개혁개방 이후의 거대한 성취’의 소주제 ‘국제적 영향력의 부단한 확대’에서 중국이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핵문제, 이란 핵문제, 시리아 핵문제, 중동의 평화적 해결을 실례로 들었는데 북핵문제가 가장 우선 순위로 거론되었

6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9, 앞의 책, 59쪽.

68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99쪽.

69 黃松筠, 2008,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吉林人民出版社.

70 이석현, 2010, 「중국의 번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번속이론과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17~20쪽에서 중국의 번속이론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71 최근 국내학계에서 ‘종번’은 역사적 용어라기보다는 20세기 1930년대의 현실의식이 상당히 투영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성욱, 2019, 「종번(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충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66, 130쪽.

다.⁷² 이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중국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을 여러 차례 시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한중관계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분석이 후속 과제로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VI. 맺음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인류운명공동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 방안으로 착안되었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자 인류운명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아시아 문명대화’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고 발표하였다.⁷³ 또한 서방 주류 이론과 평등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증강시킬 것임을 역설하는 ‘중화민족공동체역시’ 담론도 제기되고 있다.⁷⁴ 이는 홍콩과 대만 문제와 연결되어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인류운명공동체 담론과 같은 맥락에서 중시되는 듯하다.

최근 중국중앙(中共中央)의 종합적인 당보(黨報)인 광명일보는 사실을 통해

72 教育部組織編寫, 2019, 앞의 책, 181쪽.

73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문명대화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다(習近平出席亞洲文明對話大會開幕式並發表主旨演講)」, 『新華網』, 2019년 5월 15일.

74 「시진핑이 산시성 시찰 때,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기세를 타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을 강조하다(習近平在山西考察時強調全面建成小康社會乘勢而上書寫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新篇章)」, 『新華網』, 2019년 5월 12일.

현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가장 험난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밝혔고, 중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위험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각종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강화된 중화민족 공동체 인식이라는 강한 정신적 동력과 사상적 뒷받침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표명하였다.⁷⁵ 비록 중국에 대한 냉담한 국제적 반응과 국내외적인 여러 갈등으로 이전처럼 과장되게 선전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당 지도부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운명공동체’, ‘중화민족 공동체’ 등을 동시에 내세우며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한 『중외역사강요』의 ‘국제 신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에서 중국은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류문제를 해결하되, 중국의 지혜와 중국 스타일로 기여할 것이라고 한 서술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 그 안에는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신시대 애국주의교육 실시 요강』 문건을 배포하면서 교육시스템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시대 애국주의교육의 이론적 위치와 사상적 의의라는 주제의 논설에서 개개인은 응당 애국을 자기 본분과 직책으로 생각해야 되며 더 나아가 본인 생명의 의지와도 융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실정인 것이다.⁷⁶ 그렇다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필수 과정으로 역사교과서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함께 중국 스타일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어떤 관점으로 주변국을 이해하고 ‘포용’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를 주도하는 강한 중국이 되려는 ‘중국몽(夢)’을 위해 애국이 필요하고 민족이 단결

75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중화민족 대부흥을 실현한다(增強中華民族共同體意識 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 『光明日報』, 2020년 6월 12일.

76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이론의 위치와 사상 실시 함의(新時代愛國主義教育的理論定位與思想內涵)」, 『中國教育報』, 2020년 3월 26일.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고 있다.⁷⁷ 대외적으로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 부흥, 중국몽’을 구호로 14억 명의 단결을 위해 적극 외치고 있는 것이다.⁷⁸ 다만 민족주의는 잘못 다루면 쇼비니즘에 빠질 우려가 있어 국내외학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몽이 과도하게 민족주의, 강국, 부민, 강군을 추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인류운명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과 대립된다는 국제 학계의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당 지도부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중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에 방해가 되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중국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분석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모색하는 가운데⁷⁹ ‘인류운명공동체’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가 진정성을 발휘하도록 학계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77 「시진핑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 『연합신문』, 2019년 9월 25일.

78 「밖으로 “인류공동체” 안으로 “중화민족 부흥” … 14억 명 단결에 방점」, 『동아일보』, 2019년 9월 28일.

79 이 글에서는 『중외역사강요』 ‘인류운명공동체’의 의의와 실제의 차이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류운명공동체의 새로운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 글에 대한 심사평 중 중국 역사교과서가 갖고 있는 민족지향과 인류지향이라는 특수와 보편적 가치 간의 충돌에 대한 예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족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결국 글로벌 시대라고 서술하는 한국 교과서의 모순적 양상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교과서를 연구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많이 보완한 점과 관련하여 역사 교육학 차원에서의 공동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역사교과서를 한중학계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것도 차체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과서

- 教育部組織編寫, 2019, 『中外歷史綱要』(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20, 『中外歷史綱要』(下), 山東: 人民教育出版社.
- 教育部組織編纂 魯洁 總主編, 2020, 『義務教育教科書 道德與法治 六年級』(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6a,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6b,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6c,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7a,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7b,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8a,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8b,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七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_____, 2018c, 『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下),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李卿 編輯, 201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9,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12, 『義務教育 歷史課程標準(2011)』,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단행본

이석현 외, 2010, 『중국 변속이론과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尙書』,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四部叢刊景宋本.

習近平, 2018, 『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中央文獻出版社.

黃松筠, 2008, 『중국고대번속제도연구(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吉林人民出版社.

논문

권은주, 2020, 「『중의역사강요』의 한국 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김유리,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

김지훈, 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현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_____, 2018,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중심으로-」, 『사림』 64.

_____, 2019, 「국가지의(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교육연구』 33.

동북아역사연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2017, 『한중관계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 중국 역사교과서 문제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손성욱, 2019, 「중반(宗藩)과 중화(中華)로 청제국을 볼 수 있는가-왕위안총 '조선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66.

오병수, 2016, 「국내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우성민, 2018, 「시간 중국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 동향의 특징과 한국사 관련 서술 검토」, 『중국학연구』 86.

윤세병, 2017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현황: 2011·2017 과정표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65.

_____,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6.

이상욱, 2018, 「역사의 종결-당대 중국 사상의 지형(地形)-」, 『중국지역연구』 5.

이희옥, 2017,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결과와 의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최수경, 2018, 「섬 오랑캐들의 이야기: 島夷誌略의 세계와 帝國的 재구성」, 『중국학보』 85.

吳遠鵬(Yuanpeng Wu), 2018, 「航海游歷家汪大淵與《島夷志略(Navigator Wang Dayuan and His Travel Book “Daoyizhilue”)」, 『中國港口(China Ports)』.

신문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6일 평화 발전' 백서 발표(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6日發表『中國的和平發展』白皮書)」, 國務院新聞辦公室網站, 2011년 9월 6일.

「국무원이 국가 교과서위원회 성립을 결정하고, 리우옌둥(劉延東)이 주임을 역임하다(國務院決定成立國家教材委員會 劉延東)」,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017년 7월 6일.

「對話國家教材委員會委員: 教材建設實質上是國家事權」, 『光明日報』, 2017년 7월 14일.

「당의 19대 정신 '역사 허무주의 반대'의 학습과 관철" 세미나를 북경에서 개최하다(學習貫徹黨的十九大精神反對歷史虛無主義"研討會在京召開)」, 중국 『광명일보(光明日報)』, 2018년 1월 3일.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것이 당장(黨章)에 기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怎樣認識“黨是領導一切的”寫入黨章?)」, 『人民日報』, 2018년 1월 25일.

「시진핑 주석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론은 세계 흐름을 이끄는 시대적 계시(習近平主席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的時代啓示)」, 『新華社』, 2018년 3월 23일.

「시진핑 동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하다』를 출판 발행하다(習近平同志『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出版發行)」, 『人民網』, 2018년 10월 15일.

「시진핑이 중국사회과학원(산하) 중국 역사연구원의 설립 축하 메시지를 전하다(習近平致信祝賀中國社會科學院中國歷史研究院成立)」, 『신화사(新華社)』, 2019년 1월 3일.

「시진핑이 산시성 시찰 때 전면적으로 샤오강 사회 건설의 기세를 타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쓸 것을 강조하다(習近平在山西考察時強調全面建成小康社會乘勢而上書寫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新篇章)」, 『新華網』, 2019년 5월 12일.

「시진핑 “다른 문명 개조 시도 어리석어” 트럼프 겨냥」, 『경향신문』, 2019년 5월 15일.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문명대화대회 개막식에 출석하여 기조연설을 하다(習近平出席亞洲文明

- 「교육부: 새로 편찬한 고등학교역사교재, 국가주권, 해양의식 교육강화(教育部: 新編高中歷史教材突出國家主權, 海洋意識教育)」, 『紅星新聞』, 2019년 8월 2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42998656528238712&wfr=spider&for=pc>
- 「일반 고등학교 사상정치·어문·역사 통편교재 금년 가을부터 사용 개시(普通高中思想政治, 語文, 歷史統編教材今秋啓用)」, 중국 『광명일보(光明日報)』, 2019년 8월 28일.
- 「고급 학술 출판과 전파의 플랫폼을 마련한 중국역사연구원 역사연구잡지사 신간발표회의 요점(打造高端學術出版和傳播平台—中國歷史研究院歷史研究雜誌社新刊發布會述要)」, 『人民日報』, 2020년 2월 3일.
- 「중공중앙, 국무원 발행 『중국교육현대화2035』(中共中央, 國務院印發『中國教育現代化2035』)」, 『신화망(新華網)』, 2019년 2월 23일.
- 「시진핑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 『연합신문』, 2019년 9월 25일.
- 「밖으로 “인류공동체” 안으로 “중화민족 부흥” … 14억 명 단결에 방점」, 『동아일보』, 2019년 9월 28일.
- 「시진핑, G20 지도자 신관페럼 대응 특별정상회의에서 중대담화(習近平在二十國集團領導人應對新冠肺炎特別峰會上發表重要講話)」, 『新華網』, 2020년 3월 26일.
- 「신시대애국주의 교육이론의 위치와 사상 실시 함의(新時代愛國主義教育的理論定位與思想內涵)」, 『中國教育報』, 2020년 3월 26일.
- 「시진핑,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하다』 일문판을 출판 발행하다.(習近平『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日文版出版發行)」, 『人民網』, 2020년 3월 29일.
- 「시진핑,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출판 발행하다.(習近平『論堅持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英文版出版發行)」, 『央視網』, 2019년 4월 9일.
- 「제2차 세계 대전의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받아(從二戰歷史吸取經驗教訓)」,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 2020년 5월 25일.
-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중화민족 대부흥을 실현한다(增強中華民族共同體意識 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 『光明日報』, 2020년 6월 12일.
- 「중국 특색의 철학 사회과학 구축을 위해 중국 고대제사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構建中國特色哲學社會科) 人民日報: 不斷深化中國古代制度史研究]」, 『人民日報』, 2020년 6월 22일.
-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유엔 창설 75주년 관련 입장문서’(中國外交部發布『中國關

于聯合國成立75周年立場文件』), 『人民日報海外版』, 2020년 9월 17일.

인터넷 웹

『百度百科』, baike.baidu.com/item/人類命運共同體/1096715?fr=aladdin

『中國共產黨章程』, 2017, [https://zh.wikisource.org/wiki/%E4%B8%AD%E5%9B%BD%E5%85%B1%E4%BA%A7%E5%85%9A%E7%AB%A0%E7%A8%8B_\(2017%E5%B9%B4\)](https://zh.wikisource.org/wiki/%E4%B8%AD%E5%9B%BD%E5%85%B1%E4%BA%A7%E5%85%9A%E7%AB%A0%E7%A8%8B_(2017%E5%B9%B4))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17, 「교육부 관공실의 2017년 의무교육 도덕과 법치, 어문, 역사와 초등학교 과학 교학용서에 관한 사항 관련 통지(教育部辦公廳關於2017年義務教育道德與法治·語文·歷史和小學科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教材廳函[2017]6號),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707/t20170703_308452.html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우성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2019년 가을학기 시작에 맞춰, 중국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신판 보통고중역사교재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공식 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외역사강요』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서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로써 ‘중국이 어떠한 세계를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말아야 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목적 의식을 명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류문제를 해결하되, 중국의 지혜와 중국 스타일로 기여할 것임을 재차 반복하여 서술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 그 안에는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당 지도부가 인민에게 요구하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중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었을 때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에 방해가 되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중국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시각과 변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분석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모색하는 가운데 ‘인류운명공동체’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가 진정성을 발휘하도록 학계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 교과서, 중외역사강요, 시진핑,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신형 국제관계

ABSTRACT

China's Global Values of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Advocated in *The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Narrative and Implications

Woo Sungmin

With the beginning of the fall semester in 2019, which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officially published its new edition of history textbook for ordinary high schools, *Zhongwai lishi gangyao* [中外歷史綱要,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This article reviews the discourse and narrative on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which the textbook emphasizes as a basic polic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The textbook answers the question, "What kind of world does China want to see?" by specifying a sense of purpose to raise awareness of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that China, as a socialist power, must assume for the sake of the advancement of human society. In particular,

a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petitive description that China will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mankind by promoting changes in the global politics in an active manner while contributing Chinese wisdom in Chinese style.

Such description implies that China will ultimately build new international relations, create new order, and expand the legitimacy of its rol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ong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suggested.

When Chin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accept patriotism and nationalism, that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mands from its people, as their mission become the leaders of next gener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diplomatic friction that will hin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History textbooks greatly affect the next generation's perception of history and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neighboring countries, and thus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new perspectives and changes of Chinese history textbooks must be continued.

It is hoped that joint research will gain momentum to allow the value of mutual respect supported by the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to fulfill its true purpose as we seek ways to define and develop Korea-China relations in the lead up t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China, textbooks, *Zhongwai lishi gangyao* [Outline of Chinese and foreign history], Xi Jinping,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One Belt and One Road, new international relations

고대일본의 고려군(高麗郡) 설치와 고구려계 씨족의 동향

연민수 | 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고려약광의 동향과 〈고려씨계도〉
- III. 고려군의 성립과 배경
- IV. 무장국의 고구려계 씨족과 고려군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군(高麗郡)은 신귀(神龜) 3년(716)에 일본 율령국가의 국가시책으로 무장국(武藏國)과 그 주변 7개 지역(國)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인 1,799인을 이주시켜 신설한 군이다. 고려군이 설치된 동국(東國)지방은 중앙에서 볼 때 변방이고 이종족으로 간주하던 에미시(蝦夷) 근거지에 속하며 국방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려군 설치의 주요 목적은 일본고대국가의 동국지방 나아가 동북(東北)지방 경영의 일환이었다. 즉, 고려군 건군(建郡)에 이르는 과정에는 변방에 대한 군사상의 목적을 비롯하여 미간지 개척, 고구려 유민의 활용 등이 포괄되어 있다.

한편, 국·군의 설치는 왕권의 권한이지만 설치과정에서 고구려 유민 자체의 동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고려군 설치는 그 인적 구성이 고구려계 씨족이 중심이 되어 있듯이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군이 설치된 무장국 일대에는 이미 선주한 고구려인들이 있었다. 이들의 일부는 고구려 멸망 이전에 정착하였고, 이후 일본고대국가의 유민정책으로 사민되었다. 『신찬성씨록』에 나오는 고구려계 씨족은 52씨에 이르고,¹ 일본열도에 이주해온 시기는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시작하여 멸망 직후에는 다량의 유민이 발생하여 일본열도에 정착하였다.

* 투고: 2020년 10월 7일, 심사 완료: 202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0년 11월 25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특정분야기회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6-SRK-1230007).

1 『新撰姓氏錄』에서 분류한 고구려계 씨족의 수는 41씨로 되어 있으나 「未定雜姓」 등에 분류된 7씨와 기타 4씨를 포함하면 모두 52씨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등이 참여한 『新撰姓氏錄』역주본(上·中·下, 동북아역사재단, 2020) 참조.

고려군 설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고려약광(高麗若光)이다. <고려씨계도(高麗氏系圖)>에 따르면 고려약광은 고려씨의 시조이자 고려군의 고려씨 조상신을 모시는 고려신사의 제신(祭神)으로 되어 있다. 그는 고구려 멸망 직전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왔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정주한 현무약광(玄武若光)으로 일본조정으로부터 ‘고려왕(高麗王)’ 성(姓)을 하사받은 고구려계 유민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고려군으로 이주한 시기, 선주한 고구려계 씨족 간의 관계, 그가 고려신사의 주신이 된 과정 등은 명확하지 않다. 종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고려씨계도>의 분석을 통해 고려약광이 고려군으로 이주한 시기 등 일족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려군을 관할하고 있던 현직 무장국수(武藏國守) 대신조신박마려(大神朝臣狛麻呂)의 역할이다. 그의 이름 중에 ‘박(狛)’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고려군의 성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멸망 직후 무장국으로 이주하여 고려군에서 재지세력으로 성장한 고려조신(高麗朝臣)씨에 대한 검토이다. 이 씨족의 본성은 배나(背奈)씨로서 고구려 5부의 하나인 소노부(消奴部)에서 유래하고 무장국수(武藏國守)를 역임하는 등 고려군의 탄생과 지배과정에서 부상하였고 중앙의 고위관료도 배출하였다. 고려조신씨가 고려군을 지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려조신씨와의 협력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고대의 지방사회에서 외국계 이주민으로 본국의 국명을 관칭하여 행정조직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세력을 펼친 씨족은 흔치 않다. 고려군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당지에 남아 있는 고려신사는 정신적 지주로서 역사적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군 설치 문제가 일본울령국가의 지방통치책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가는지를 고구려계 씨족의 동향에 주목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고려약광의 동향과 <고려씨계도>

1. 고려약광과 그의 관력

고려약광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천지(天智) 5년(666) 10월조에 고구려 사절단의 일원으로 나온다.

[1-1] 高麗遣臣乙相奄郢等進調.[大使臣乙相奄郢, 副使達相通, 二位玄武
若光等]

상기 고구려 사절은 고구려 멸망 2년 전에 도착하였고, 당의 침공이 최성기에 달한 시점이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¹이 사망하고 장남 남생(男生)이 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계승하면서 대당전쟁과 외교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666년 정월에도 고구려에서 전부(前部) 능루(能婁)를 보내 대일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는데,² 이 사절이 귀국한 후에 다시 사절단을 보내고 있어 고구려의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의 사절단 구성을 보면 대사 을상 엄추(乙相奄郢), 부사 달상(達相) 둔(遁), 이위(二位) 현무약광 등 3인의 대표명으로 나온다. 이 중에서 현무약광은 『속일본기』 대보(大寶) 3년(703) 4월조에 보이는 ‘중5위하 고려약광에게 왕(王) 성을 하사하였다’라고 하는 고려약광과 동일인물이고, 이때 일본조정으로부터 ‘왕(王)’의 가바네(姓)를 받았다. 현무약광에서 고려약광으로의 개명은 일본에 정주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명을 씨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백제, 고구려의 망명집단에 대한 관위와 사성이 이루어지는 천무조(天武朝)에서 지통조(持統朝) 연간(680~690년대)이라고 생각된다

2 『日本書紀』天智紀 5년 춘정월 무인조, “高麗遣前部能婁等進調.” 이 사절은 동년 6월조에 귀국 기사(“高麗前部能婁等罷歸”)가 나온다

다. 현무약광과 함께 온 대사 을상 업추, 부사 달상 등에 대해서는 정사 등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찬성씨록』 등에도 이들을 선조라고 주장하는 후손도 보이지 않는다. 추측하건대 직계 후손이 단절되었거나, 혹은 동국지방 등 변방으로 이주 후 토착화되어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고려약광으로 씨명을 바꾼 현무약광은 고구려에서 어떤 신분으로 파견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현무약광 앞에 관칭된 ‘二位’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翰苑)』 「고려」조에 보이는 고구려 관등제를 검토해보자.

【1-2】官崇九等，高麗記曰，其國建官有九等，其一曰吐拵，比一品，舊大對廬，惣知國事，… 次曰太大兄，比[正]二品，一名莫何何羅支 …

「高麗記」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중앙 9등관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1은 토족이고 중국의 1품에 해당하며, 옛 관등은 대대로이고 국사를 총람한다. 다음은 태대형이며 2품에 해당하고 일명 막하하라지라고 하는데 막리지를 가리킨다. 태대형은 『수서』 고려전에는 최고 관위로 나오고, 『구당서』 고려전에는 정2품에 비견된다고 한다. 1923년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천남생묘지명(泉男生墓誌銘)>에는 남생의 증조부와 조부가 모두 막리지를 역임하였고, 아버지 개금(蓋金)은 태대대로였는데, 군권을 장악하여 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였다고 한다. 묘지명의 주인공인 남생은 28세에 막리지가 되어 삼군대장군을 겸하였고, 32세 때는 태막리지가 되어 군국(軍國)을 총괄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 이들 기록으로부터 일본에 파견된 현무약광이 관칭한 2위는 2품을 가리키고, 태대형, 막리지의 관등을 가질 수 있는 최고위직임을 알 수 있으며, 대일 군사외교에 어울리는 신분으로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파견된 것으로

3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1992，『譯註韓國古代金石文』，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참조.

보인다.

한편 『한원』에 인용된 「위략(魏略)」에는 고구려의 5부를 소개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1-3】魏略曰，其國大有五族 … 五部皆貴人之族也，… 二曰北部，卽絕奴部，卽名後部，一名黑部

5부 중 2번째는 북부이고, 즉 절노부라고 하고, 일명 후부, 흑부로도 표기하고 있다. 도교의 사신사상에서는 현무는 북방지신이고, 방향성에서 후방에 해당하며 색깔은 흑으로 표현한다. 즉, 현무는 절노부로서 고구려 왕비족을 가리킨다. 현무약광은 고구려의 부계 왕족혈통은 아니지만 왕비족을 배출한 절노부 출신의 지배계층이고,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의 집정기 이후에는 집권층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약광은 일본에 온 지 37년 만인 대보 3년(703)에 새롭게 ‘왕’ 성을 받는다. 이때의 왕성에 대해서는 ‘고려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고려약광의 고려는 성이 아니고 고구려 출신자임을 나타내는 통칭을 의미하고, 대보 3년에 받은 왕성에 대해 ‘고려왕’이 아닌 가바네로서 ‘왕’이라는 견해가 있다.⁴ 고려약광이 사성된 같은 달 신해조에 “중7위하 화기판본(和氣坂本)에게 군성(君姓)을 하사하였다”라고 하여 화기판본이 군(君) 성을 받지만 그의 가바네는 화기군(和氣君)이 되고, 『신찬성씨록』 화천(和泉) 황별(皇別)조에는 화기공(和氣公)으로 나온다. 천평보자(天平寶字) 5년(761)에 도래계 씨족의 사성에서도 상부왕(上部王) 미야대리풍원련(彌夜大理豐原連) 등 11인에게 어판련(御坂連)을 주었다⁵고 한다. 또 『속일본기』에는 후부왕동병(後部王同竝, 和銅 5년 정월조), 후부왕기(後部王起, 神龜 2년 윤정월조) 등 고구려 5부의 부족명을 관칭한

4 加藤謙吉, 2018, 「高麗若光と高麗福信」, 『日本古代の豪族と渡來人』, 雄山閣.

5 『續日本紀』天平寶字 5년 3월 경자조.

‘왕’ 성의 인명이 다수 보인다. 이 경우도 단독 ‘왕’ 성이 아니라 5부명을 더한 일종의 씨명으로 가문의 칭호의 가깝다. ‘왕’ 성이 단독으로 쓰인 사례는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고려」조에 “王, 出自高麗國人 從五位下王仲文[法名東樓]也”라고 하여 왕중문(王仲文)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왕’은 원래의 씨명이 가바네가 아니다. 『신찬성씨록』에 기재된 고구려계 씨족의 성을 보면, 최고위 조신(朝臣) 성을 비롯하여 연(連), 사(史), 조(造), 수(首), 사주(使主), 촌주(村主), 숙네(宿禰) 등이고, ‘왕’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요컨대 고려라는 국명에 ‘왕’을 더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고려약광에게 준 ‘왕’은 ‘고려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려왕 약광은 지통조(持統朝) 때에 일본에 정주하고 있던 의장왕자 선광(善光, 禪廣)에게 ‘백제왕’이라는 특별 칭호(姓)를 준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그가 백제왕 칭호를 받은 것은 백제왕의 적통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대일본의 율령제 성립 이전의 왜왕권 내의 신분을 표시하는 가바네의 성격이 있다. 망명세력에게 국명을 관칭한 ‘왕’ 성을 하사한 것은 멸망 이전의 왕조를 계승시킨다는 일본적 중화사상의 하나이고,⁶ 고구려 역시 고려왕이라는 가바네를 통해 일본적 중화의식을 만족시키는 이념적인 조치로 이해된다.⁷ 고려약광이 일본조정으로부터 ‘왕’ 성을 받은 이후 정사 등 공적 기록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6 算敏生, 1987,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帝國主義」, 『日本史研究』 317; 算敏生, 2002, 『古代王權と律令國家』, 校倉書店.

7 田中史生, 1997, 「王姓賜與と日本古代國家」,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店.

한편, 김은숙은 ‘高麗王’이라는 칭호는 고구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武藏國 高麗郡을 처음 설치하면서 이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고려왕’이라는 존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金恩淑, 2007, 「일본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동북아역사논총』 15, 431쪽.

2. 고려약광과 <고려씨계도>

무장국의 고려군에 있는 고려신사에 전해오는 <고려씨계도>에는 고려씨 일족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동 계도에는 고려가의 역대 계보를 기록하고, 고려약광으로부터 제59대 고려징웅(高麗澄雄)에 이르기까지 고려향, 고려신사, 고려가의 변천과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창기 계보는 고려약광을 시조로 하여 그의 아들 가중(家重)과 성운(聖雲)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세대로 가중의 아들 흥인(弘仁)으로 계승되어 있다.

<고려씨계도>가 작성된 유래에 대해 살펴보자. 이 계도는 명치 16년(1886) 당시 내각수사국 편수부장관으로 있던 역사학자 중야성재(重野成齋)가 관명을 받아 관동지역 6개 현의 고문서를 조사할 때 고려가(高麗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계도를 발견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⁸ 여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고려씨 가문의 28대 고려영순(高麗永純)의 주기(注記)가 있고, 동 계도가 세상에 전해진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⁹

【2-1】正元元年十一月八日大風時節出火系圖□高麗持來寶物
多燒失，因之一族老臣高□□新井本所新神田中山福泉
吉川丘登□□大野加藤芝木等始高麗百苗相集諸家故記
錄取調系圖記置也。然不詳處有之以來代々無違失書次
可致者也。

상기 사료에 따르면 정원(正元) 원년(1259) 11월 8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고구려에서 가져온 보물류와 함께 <고려씨계도>도 소실된 까닭에 고려씨 일족과

8 金光林, 1993, 「高麗神社からみた朝鮮渡來文化」, 『比較文學研究』 64.

9 본 사료는 東京大學 소장본 <高麗氏古系圖>(謄寫本)을 참고한 것이다. 加藤謙吉氏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촌로들이 논의하여 고려백묘(高麗百苗)가 제가의 고기록(諸家故記錄) 등을 취합하여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계보가 어느 정도 원본에 충실하게 복원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의 고기록’이란 고려씨 일족이 보관하고 있던 씨족의 기록물을 말한다. 고대의 사실이 재편수된 시기의 인식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초기의 계보가 의도적으로 변형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상기 <고려씨계도>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2】因之，從來貴賤相集，埋屍城外，且依神國之例，建靈廟御殿後山，崇高麗明神，郡中有凶，則祈之也，長子家重繼世也，天平勝寶三辛卯，僧勝樂宿，弘仁與其弟子聖雲，同納遺骨，一字草創，云勝樂寺，聖雲若光三子也。

위 기록에는 (若光이 사망하자)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성 외곽에 매장하였고, 신국의 예에 따라 어전(御殿)의 뒷산(後山)에 영묘를 세워 고려명신(高麗明神)으로 숭배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평승보 3년(751)에 승려 승락(勝樂)이 사망할 즈음에 흥인과 승락의 제자인 성운이 유골을 안치한 곳이 승락사이고, 성운은 약광의 셋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정효중(新井孝重)에 따르면 ‘명신(明神)’의 신호(神號)가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9세기 중엽이기 때문에 8세기 기사로서는 부자연스럽고, 약광영묘(若光靈苗)가 고려명신으로 숭배된 것은 약광의 사후 훨씬 뒤의 일이라고 한다. 나아가 그는 원래 명신이 ‘칙허의 호’임을 고려하면 10세기 말 제14대 고려일풍(高麗一豊)이 고려대궁명신(高麗大宮明神)의 어면허(御免許)를 얻어 스스로를 대궁사로 칭했던 까닭에 약왕명묘가 고려명신이 된 것은 이 시점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고려명신으로서 제사 지낸 일은 없고, 씨족 내의 분묘로서 제사 지낸 것으로 추정한다.¹⁰ 재편수된 기록은 편찬 당시의 상황과 용어를 반영하고 후대의 인식이 소급되어

10 新井孝重, 2010, 「古代高麗氏の存在形態」, 『日本歴史』 749, 2~3쪽.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용어의 변용을 고려하면 고려명신을 모신 영묘는 고려신사를 가리키는데, 고려신사의 성립은 약광의 사후 그를 신으로 숭배하게 된 후대의 일이다. 일족의 규모가 커지고 지역사회에서의 발전을 보이게 되는 시점에서 가문의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조전승을 만들고 제사, 참배의 공간을 조영하는 일은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백제왕을 모시는 백제왕사와 백제왕신사를 비롯하여 백제 멸망 시 망명한 귀실집사(鬼室集斯)를 모시는 귀실신사, 462년에 외국에 온 백제의 왕족 곤지(昆支)가 제신인 비조호신사(飛鳥戶神社) 등도 동일한 사례이다.

〈고려씨계도〉의 기록대로 약광의 사후에 어전 뒷산에 영묘를 건립하고 천평승보 3년(751)에 승락사가 조영된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아도 대과 없을 것이다. 이 지역은 고려신사가 소재해 있고 대사폐사(大寺廢寺)와 고강폐사(高岡廢寺)라고 불리는 2개의 고대 사원적과 기와를 굽던 가마유적이 존재한다.¹¹ 또 대사폐사에는 당탑의 흔적이 있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전반경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¹² 특히 고강폐사에서는 8세기 후반에 완성된 금당이 확인되고 있어 천평승보 3년에 창건한 승락사로 추정되고, 〈고려씨계도〉에 보이는 승락사 창건기사는 고려신사, 승락사의 성천원(聖天院)이 존재하는 지역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¹³

그럼 고려약광이 왕경에 체재하다가 고려군으로 이주한 시점은 언제인가. 등원궁적(藤原宮跡)의 관아유적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若光’으로 표기된 문자가 발견되었는데, 고려약광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 이곳에서 출토된 기년목간은 무술(698)년 이래 화동(和銅) 2년(709)이 하한이다. 등원궁은 지통 8년(694)에서 평성경으로 천도하는 화동 3년(710)까지 일본고대의 왕경이 있던 곳

11 日高市史編集委員會 編, 1997, 『日高市史』 原始古代資料編, 665~735쪽.

12 埼玉縣入間郡日高町教育委員會 編, 1984, 「日高町埋藏文化財調査報告」, 『大寺廢寺』.

13 新井孝重, 2010, 앞의 글, 4쪽.

14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81, 『飛鳥藤原宮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6.

이다. 이 목간은 약광이 ‘고려왕’을 사성받은 대보 3년(703)에 이전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703년 이후라면 ‘고려왕약광(高麗王若光)’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666년에 일본에 온 이래로 고려군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반세기 동안 왕경에서 보냈다. 왕경에서 약광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인명이 새겨진 목간의 존재로 보아 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왕경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계 이주민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약광이 대보 3년에 고려왕의 성을 받았을 때의 연령은 적어도 60세는 넘었고 고려군으로의 이주 시에는 70세를 넘긴 고령이었을 것이다. 그가 태대형, 막리지라는 신분으로 일본에 왔을 때에는 적어도 20대 중반 이후이고 약광의 일본 체재기간을 고려하면 그의 후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약광이 종5위하의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자손들도 음위제만으로도 관직에 올라갔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인물이 씨족지에 해당하는 <고려씨계도>를 제외하면 정사 등 기타의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사신으로 왔다가 정착한 까닭에 원래 가족이 있었다면 고구려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일본 체재 중에 재차 결혼을 했다면 자손도 당연히 출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7세기 후반 이후 8세기에 걸쳐 수많은 도래계 씨족은 일본조정으로부터 관위수여와 사성을 받고 있듯이 종5위하라는 약광의 신분이면 당연히 나와야 한다. 게다가 『신찬성씨록』에도 약광을 선조라고 주장하는 후예씨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직계 후손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일본서기』 천지 5년(666) 정월조에 보이는 일본에 온 고구려 사절 전부 능루의 후예임을 칭하는 씨족이 『신찬성씨록』 좌경제변에 “복당련(福當連)은 고려국인 전부 능루(能婁)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¹⁵ 고려약광을 시조로 하는 후손이

15 이 인물은 동년 6월에 귀국기사가 보여 고구려 멸망 후에 재차 일본으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福當連 일족이 그들의 선조를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사 중에서 前部能婁에 부회했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선조의 유래를 알 수 없는 경우, 國史에 나오는 동족의 인물 중에서 자신들의 선조로 삼아 씨족지를 만드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는 『신찬성씨록』 편찬 시에 제출한 씨족지의 신뢰성을 확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가등겸길(加藤謙吉)의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무장국의 고려신사의 계도와 소전은 『속일본기』 대보 3년조의 고려약광의 ‘왕’ 성 사여의 기사를 근간으로 하여 후대에 유포된 고려왕약광 전설을 수용하여 작성된 고려신사의 연기로서 이해된다고 하면서, 『일본서기』의 현무약광과 『속일본기』의 고려약광은 본질적으로는 무장국 고려군과 고려신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추정한다.¹⁶ 예리한 시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약광이 고려군으로 이주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약광이 고려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왕경에 남아 관인으로 활동했다면 정사에 기록되고, 사망기사인 ‘졸전(卒傳)’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도래계 씨족으로 본국의 국명을 딴 ‘고려왕’ 성을 하사받을 정도의 인물이면 일본조정에서도 그에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고 본다. 같은 고구려계 씨족인 고려복신(高麗福信)의 사망과 관력이 『속일본기』에 ‘홍진’으로 실려 있다는 사실과도 비교된다.¹⁷ 약광은 고려군 성립 시기에 왕경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 고려군으로 이주했음은 분명하다. 고려왕씨 후손이 정사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직계 혈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그는 이주 후, 신분상의 고귀성으로부터 현지의 고구려계 씨족과의 양자의 입적 등 의제적 동족관계를 통해 가문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왕약광과 동족관계를 맺은 씨족은 다음 장에서 언급할 고구려 멸망 직후 망명해 온 배나씨(背奈氏) 일족으로 후에 고려조신(高麗朝臣)의 성을 받아 씨명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씨계도>에 보이듯이 ‘왕’ 성을 제외하고 ‘고려’라는 씨명으로 통일되었고, ‘고려왕’ 성도 약광의 사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광이 정사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방에서 토호화

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의 계보와는 관계없이 조작된 계보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16 加藤謙吉, 2018, 앞의 글, 304쪽.

17 『續日本紀』延曆8년 10월 을유조.

되고, 고려군 설치 당시에는 이미 고령으로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것이다. 약광의 사후에는 그를 조령(祖靈)으로 기리는 고려신사가 조영되고 고려씨 가문의 공동의 조상신으로 공유하고 존송되어왔다고 생각된다.

Ⅲ. 고려군의 성립과 배경

1. 고려군 설치와 에미시 대책

고려군은 현재의 동경과 기옥현(埼玉縣)을 아우르는 일본고대 율령국가의 무장국에 설치된 군이다. 701년 대보율령의 제정과 더불어 전국을 국·군·리로 편성하고, 그 후 현지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군(國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고려군의 성립에 대해 『속일본기』 영귀(靈龜) 2년(716) 5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1】以駿河·甲斐·相摸·上總·下總·常陸·下野七國高麗人千七百九十九人，遷于武藏國始置高麗郡焉

영귀 2년(716)에 준하국을 비롯한 7개 지역(國)의 고구려인 1,799인을 무장국으로 이주시켜 새로이 고려군을 설치하였다. 무장국에 건군(建郡)한 고려군의 후방에는 준하(駿河, 靜岡縣), 갑비(甲斐, 山梨縣), 상모(相模, 神奈川縣)가 있고, 우측으로 상총·하총(上總·下總, 千葉縣), 위로는 상륙(常陸, 茨城縣), 하야(下野, 栃木縣) 등이 배치되어 있다. 율령국가의 동해도에 해당하고, 현재의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이다. 고대에는 이들 지역이 기내에서 볼 때 변방이고 그 북으로는 이종족인 에미시가 거주하고 있었다. 5세기 이래 대화정권의 영토적 팽창에 따라 중앙에서는 이 지역을 모인(毛人)이 거주하는 이역세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중앙정부와 마찰이 일으키는 등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존재하였다. 7세기 중엽 대화개신 이후에는 월국(越國, 新潟縣)에 방어시설로서 정족책(滄足柵), 반주책(磐舟柵)을 설치하였고, 제명(齊明) 4년(658)에는 아베 비라부(阿倍比羅夫)가 수군 180척을 이끌고 에미시를 공격하기도 하였다.¹⁸ 7세기 후반에는 에미시 거주지역에 육오국(陸奧國), 화동 2년(712)에 출우국(出羽國)을 설치하여 울령국가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지만, 에미시 세력을 제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양로령』 「부역령」 변원국(邊遠國)조에는 이들을 ‘이인잡류(夷人雜類)’로 규정하였다. 북륙(北陸), 출우(出羽)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에미시에 대한 지배는 울령국가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인 국사에게는 대보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향급(饗給)’, ‘정토(征討)’, ‘척후(斥候)’라고 하는 타 지역에는 없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진수부(鎭守府), 성책(城柵)를 설치하여 책호(柵戶), 진병(鎭兵)으로서 동국, 북륙의 농민들을 징발, 배치하였다. 때로는 중앙정부에 예속하는 자에게는 성을 하사하고 호적에 편입하여 반전농민으로 만드는 등 회유책을 시도하였다.¹⁹

고려군의 설치된 주변지역은 이중족 에미시 대책이라는 군사상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행정구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고려군 설치에 즈음해서 중앙정부에서 취한 에미시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살펴보자. 『속일본기』의 관련 사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 ① 和銅 2년(709) 3월조, “陸奧, 越後 2국의 에미시는 거칠어 순종하지 않고, 자주 양민들에게 해를 가하니, 이에 사신을 보내 遠江·駿河·甲斐·信濃·上

18 『日本書紀』齊明 4년 하4월조, “阿陪臣[關名]率船師一百八十艘伐蝦夷.”

19 『續日本紀』和銅 3년 4월 신축조, “陸奧蝦夷等請賜君姓同於編戶, 許之.”

20 근년 고려군의 설치목적에 대해 일본형 중화주의에 기초하여 일본이 고구려 왕권을 국내에 흡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나왔다(宮瀧交二, 2008, 「高麗郡の設置と渡來人」, 『名栗の歴史』上, 飯能市教育委員會). 이러한 인식은 百濟王姓, 高麗王姓에 대한 일본적 중화주의적 논리를 고려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무리한 해석이다.

野·越前·越中の 제국에서 (병사 등을) 징발하고, 좌대변 정4위하 巨勢朝臣 麻呂를 陸奥鎮東將軍, 民部大輔 정5위하 佐伯宿禰石湯을 征越後蝦夷將軍, 內藏頭 중5위하 紀朝臣諸人을 부장군으로 삼고, 양도로 나가 정벌한다. 節刀와 軍劄을 주었다.²¹

- ② 和銅 2년(709) 추7월조, “중5위상 上毛野朝臣安麻呂를 陸奥守로 삼고, 제국에 명하여 出羽柵으로 병기를 운송하게 했다. 蝦狄을 정벌하기 위함이다.”²²
- ③ 和銅 2년(709) 7월조, “越前·越中·越後·佐渡 4국에 명하여 선박 1백 척을 蝦夷를 정벌하는 곳으로 옮기게 했다.”²³
- ④ 神龜 원년(715) 5월조, “相摸·上總·常陸·上野·武藏·下野 등 6국의 부유한 백성 1천 호를 육오국으로 배치시켰다.”²⁴

사료 ①에는 에미시에 대한 백성들의 피해가 커지자 중앙의 고위 관인을 육오진동장군, 정월후하이장군, 부장군으로 삼고, 병사 등 전쟁물자는 에미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국들로부터 징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고구려인들을 이주시킨 지역이 3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사료 ②와 ③도 에미시를 공격하기 위해 동해와 접한 북륙지방의 제국으로부터 병기, 선박을 새롭게 징발하여 배치했다고 하였다. 특히 사료 ④에 보이는 동북지방의 6개국의 부민(富民) 1천 호를 에미시 거주지에 편성된 육오국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은 에미시와의 전쟁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고려군이 설치되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에미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다. 고려군의 건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치되었다. 즉, 고구려계 씨족이 갖고 있던 무기생산과 관련된 기술력, 식량조달을 위한 농업생산력의 강화 등 전쟁물자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나

21 『續日本紀』 和銅 2년 3월 임술조.

22 『續日本紀』 和銅 2년 추7월 을묘조.

23 『續日本紀』 和銅 2년 7월 정묘조.

24 『續日本紀』 神龜 원년 5월 경술조.

온 것으로 보인다. 고려군은 에미시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의 최전선 기지로서 작전사령부가 주둔했을 가능성도 있다.

2. 고구려계 씨족의 동국 이주와 개발

먼저 고려군 설치 이전에 동국지방에 산재해 있던 고구려인들이 언제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지 살펴보자. 고구려인이 일본열도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고구려 멸망기이지만, 그 이전 시기에 일본에 정주하면서 활동한 고구려인들도 적지 않다. 『일본서기』 흙명 26년(548)에 “고구려인 두무리아뻬(頭霧唹耶陟) 등이 축자(筑紫)에 투화하였으므로 산배국(山背國)에 안치하였다. 지금의 무원(畝原), 나라(奈羅), 산촌(山村)의 고구려인의 선조이다”²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장배련(長背連)」조에도 자신을 고구려 추모왕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흙명조 때 무리를 이끌고 일본에 왔다고 하는 설화가 보인다.²⁶ 『일본삼대실록』 정관 3년(861)조에도 흙명천황(539~571) 때에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백제의 구원요청으로 협수언(狹手彦)이 대장군이 되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포로를 바쳤는데 지금 산성국의 박인(狍人)들이 바로 그들이다²⁷라고 하듯이 조상의 유래를 담은 전승담이 보인다. 연력(延曆) 18년(799)에는 무장국과 인접해 있는 신농국(信濃國)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고구려인이고, 추고(推古, 593~628), 서명(舒明, 629~641) 시대에 일본에 왔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성으로 개성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²⁸ 여기에 청원한 인명이 열

25 『日本書紀』欽明紀 26년 하5월조.

26 『新撰姓氏錄』右京諸蕃 高麗 「長背連」조.

27 『三代實錄』貞觀 3년 8월 19일조.

28 『日本後紀』延曆 18년 12월 5일조. “又信濃國人外從六位下卦婁眞老, 後部黑足, 前部黑麻呂, 前部佐根人, 下部奈弓麻呂, 前部秋足, 小縣郡人无位上部豊人, 下部文代, 高麗家繼, 高麗繼楯, 前部貞麻呂, 上部色布知等言, 己等先高麗人也, 小治田, 飛鳥二朝庭時節, 歸化來朝, 自爾以還, 累世平民, 未改本號, 伏望依去天平勝寶九歲四月四日勅, 改大姓者, 賜眞老等姓須岐, 黑足等姓

기되어 있는데 괘루진로(卦婁眞老), 후부(後部) 흑족(黑足), 전부(前部) 흑마려(黑麻呂), 전부 좌근인(佐根人), 하부(下部) 나테마려(奈弔麻呂), 전부 추족(前部 秋足), 소현군인(小縣郡人) 무위 상부 풍인(豐人), 하부 문대(文代), 고려가계(高麗家繼), 고려계순(高麗繼楯), 전부 정마려(貞麻呂), 상부 색포지(色布知) 등 고구려의 5부명, 고려를 씨명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청원문에 “누대로 평민으로 본성을 바꾸지 않았다(累世平民, 未改本號)”라고 하듯이 그들의 선조가 일본에 정착 후 여러 세대 지난 후예들이고 고구려계 씨족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

7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구려 등 한반도에서 망명한 유민들이 일본조정(日本朝廷)의 사민정책에 따라 동국지방으로 이주되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7세기 말까지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 ① 天智 5년(666) 是冬, 以百濟男女二千餘人, 居于東國.
- ② 天武 13년(684) 5월조, 化來百濟僧尼及俗人, 男女并廿三人, 皆安置于武藏國
- ③ 持統 원년(687) 3월조, 以投化高麗五十六人, 居于常陸國. 賦田受稟, 使安生業. 丙戌, 以投化新羅十四人, 居于下毛野國, 賦田受稟, 使安生業.
- ④ 持統 원년(687) 하4월조, 筑紫大宰獻投化新羅僧尼及百姓男女廿二人, 居于武藏國, 賦田受稟, 使安生業.
- ⑤ 持統 2년(688) 5월조, 以百濟敬須德那利, 移甲斐國.
- ⑥ 持統 3년(689) 하4월조, 以投化新羅人, 居于下毛野
- ⑦ 持統 4년(690) 2월조, 以歸化新羅韓奈末許滿等十二人, 居于武藏國.
- ⑧ 持統 4년(690) 8월조, 以歸化新羅人等, 居于下毛野國.

豊岡, 黑麻呂姓村上, 秋足等姓篠井, 豊人等姓玉川, 文代等姓清岡, 家繼等姓御井, 貞麻呂姓朝治, 色布知姓玉井.”

〈표 1〉 도래인의 동국 이주

번호	이주 시기	국적	인원	이주 장소	사유
1	天智 5년 (666) 겨울	백제	남녀 2천여 인	東國	
2	天武 13년 (684)5월	백제	남녀 23인 僧尼, 俗人	武藏國	化來
3	持統 원년 (687) 3월	고구려	56인	常陸國	投化 賦田受粟, 使安生業.
4	持統 원년 (687) 3월	신라	14인	下毛野國	投化 賦田受粟, 使安生業.
5	持統 원년 (687) 4월	신라	僧尼 백성 남녀 22인	武藏國	投化 賦田受粟, 使安生業.
6	持統 2년 (688) 5월	백제	敬須德那利	甲斐國	
7	持統 3년 (689) 4월	신라	인원 불명	下毛野國	投化
8	持統 4년 (690) 8월	신라	인원 불명	下毛野國	歸化

〈표 1〉의 사료 ①에 보이는 천지 5년(666)에 백제인 2천여 인을 동국지방으로 이주시킨 것은 미간척지에 대한 개발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대보령의 주석서인 「고기(古記)」에 만약 재능이 있는 자가 있다면 보고하여 조정의 명을 받으라는 규정에도 나오듯이²⁹ 도래인의 지식을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기 사료에는 신라인의 이주도 4건이 보이는데, 백강전투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던 시기의 적대국 백제에 대한 조치라고 보면, 변방지역으로의 격리와 개척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료 ③의 고구려인 56인에 대한 동

29 『令集解』戶令「沒落諸蕃條」, “古記云, 問, 若有才伎者, 奏聞聽勅, 又上句, 具狀上飛驒, 若爲分別. 答, 上飛驒時不知有才伎, 後始顯寸伎(才伎)者, 重奏聞耳.”

국의 상륙국으로의 이주 역시 미간척지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주와 도래인의 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요한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지 5년(666)의 백제인 2천 인의 동국 이주기록은 백강전투가 끝난 계해년(663)부터 일본에 이주한 망명 백제인들에게 국가에서 관식을 제공했는데, 3년이 경과한 후 자립을 위해 새로운 경지를 주어 공민으로 편입한다는 조치이다. 이것은 사료 ③, ④에 보이는 망명 이주자에 대한 조치 중에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도모하였다(賦田受粟, 使安生業)”라는 내용과도 상통하며, 멸망 이후의 모든 망명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조정의 법적인 조치이다. 천무 10년(681)에는 일본에 온 망명자를 대상으로 “삼한(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귀화 후 10년의 면제기간은 종료했지만, 이에 더하여 함께 온 자손에게도 과역을 동일하게 면제한다”³⁰는 조를 내렸다. 그 후 지통 3년(689)에 시행된 비조정어원령(飛鳥淨御原令)에서는 일반 공민과 같이 구분전이 지급되고 전조가 징수되었다. 10년간은 과역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비조정어원령에서 대보령, 양로령으로 계승되어갔다. 영귀 3년(養老 원년, 717) 11월에는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사졸이 본국의 난을 만나 일본에 왔는데, 조정에서는 나라 잃은 처지를 불쌍히 여겨 종신토록 과역을 면해주었다”³¹는 것이다. 이때의 사졸이란 병사만 의미하지 않고 백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집해(令集解)』 부역령 「고기(古記)」에 인용된 영귀 3년 11월 8일의 태정관부에도 외蕃(外蕃)에 대한 과역의 면제는 고구려, 백제의 멸망 시에 투화해온 자로 종신토록 과역을 면제한다는 관련 내용이 나온다.³² 영귀 3년의 조치는 천무 10년 이래의 고구려, 백제 망명자에 대한 10년 과역 면제를 종신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때 내린 조서는 고려군

30 『日本書紀』天武 10년 8월 병자조, “詔三韓諸人曰, 先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歸化初年俱來之子孫, 並課役悉免焉.”

31 『續日本紀』養老 원년 11월 갑진조, “靈龜三年十一月八日, 太政官符 外蕃免課役事, 高麗百濟敗時投化, 至于終身, 課役俱免, 自余依令施行.”

32 『令集解』賦役令 「古記」所引 太政官符, “靈龜三年十一月八日, 太政官符 外蕃免課役事, 高麗百濟敗時投化, 至于終身, 課役俱免, 自余依令施行.”

설치 직후의 일로서 동국의 개발과 안정 그리고 에미시 대책이라는 일본율령국가가 당면한 2개의 과제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인다.

고려군이 창설된 영귀(靈龜) 2년(716) 전후한 시기에 일본조정에서는 율령제 지배를 위한 시책으로 지방관에 대한 감독과 국사를 통해 농민층의 증산을 독려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관아유적이 급증한다.³³ 북무장(北武藏)에서도 8세기가 되면 조사(造寺), 조와(造瓦)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때부터 사원은 씨사(氏寺)에서 군사(郡寺)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³⁴ 또한 일고시(日高市) 중심지역의 여영폐사(女影廢寺) 등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고, 고려군에 속해 있는 고려향의 고려구릉 복축을 중심으로 관아가 조영되고 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³⁵ 특히 여영폐사에서 출토된 복변(複弁) 팔연연화문의 현환와(軒丸瓦)의 연대는 8세기 초로 『속일본기』 고려군 설치기사와 일치하고 있어 이 사찰은 고려군의 군사(郡寺)로 추정되고 있다.³⁶ 고려군 건도와 거의 동시에 공한지가 새로이 개발되었고, 이 지역에 많은 집락이 형성된 것은 720~740년경이고, 도노네(堂ノ根) 유적의 거주자는 716년에 매우 가까운 시기에 이주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³⁷ 8세기 이후 경작지의 출현이 급속히 많아지고 주거지 유적, 군 설치와 관련된 시설물, 유구, 사찰의 존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따른 건군(建郡)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고구려인의 동국 이주와 관련하여 고려군 성립 이전에 이미 고구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다고 추정되는 동국의 갑비국(山梨縣)에 거마군(巨麻

33 埼玉縣史編纂室, 1982, 『埼玉縣古代寺院調査報告書』, 198쪽.

34 埼玉縣史編纂室, 1982, 위의 책, 198~199쪽.

35 中平薫, 2002, 「武藏國各郡の官衙及關連遺跡15 高麗郡」, 『坂東の古代官衙と人びとの交流』, 埼玉縣考古學會.

36 高橋一夫, 1982, 「女影系軒丸瓦の一試論」, 『研究紀要』, 埼玉縣埋藏文化財調査事業團, 191쪽.

37 富元久美子, 2014, 「渡來人による新都開發-武藏國高麗郡-」, 天野努·田中廣明編, 『古代の開發と地域の力』, 高志書院, 169~170쪽, 173쪽.

郡)이 있다. 이곳은 고려군 설치기에 고구려인들을 이주시킨 지역이다. 『화명류취초(和名類聚抄)』에 보이는 하내국(河內國)의 대현군(大縣郡) 거마향(巨麻鄉)에는 대박신사(大泊神社)가 있고 고구려계 대박씨(大泊氏)의 거주지라고 알려져 있듯이, ‘고마’라고 혼독하는 거마군의 거마는 고려를 가리킨다.³⁸ 거마군의 설치 연대는 불명이지만 고구려 멸망 전후에 이곳에 정주하였고, 고려군 설치 이전 갑비국에 고구려인들이 본국명을 따서 고마군이라고 부르던 지역을 거마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화동(和銅) 4년(711)에 상야국(上野國, 群馬縣)에 설치된 다호군(多胡郡)의 존재도 주목을 끈다.³⁹ 다호군이 설치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다호비(多胡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4】“弁官符上野國片置郡綠野郡甘良郡并三郡內三百戶郡成給羊成多胡郡 和銅四年三月九日甲寅 宣左中弁正五位下多治比真人 太政官二品穗積親王左大臣正二位石上尊右大臣正二位藤原尊”

이 비문은 화동 4년 3월 9일에 다호군이 설치되었을 때, 제국을 관할하는 사무국인 변관국의 명령을 기술한 것으로, “상야국의 편강군, 녹야군, 감량군의 3군 중에서 300호를 분할하여 새로운 군을 만들고, 양(羊)에게 지배를 맡긴다. 다호군이라고 한다. 화동 4년 3월 9일 갑인에 선언한다”라는 내용이다. 말미에는 중앙의 주요 관인명이 열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 중에 ‘급양(給羊)’의 ‘양(羊)’에 대해서는 방각설, 인명설 등이 있으나 현재는 ‘양’씨 도래인설이 유력하고 인근에 있는 고려신사의 존재도 도래인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야국에 새로 설치된 다호군의 군사(郡司)가 고구려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영귀 2년

38 關晃, 1996, 「甲斐の歸化人」, 『古代の歸化人』(關晃著作集 3卷), 吉川弘文館, 258쪽.

39 『續日本紀』和銅 4년 3월 신해조, “辛亥, 伊勢國人磯部祖父, 高志二人賜姓渡相神主, 割上野國甘良郡織裳, 韓級, 矢田, 大家, 綠野郡武美, 片岡郡山等六郷, 別置多胡郡.”

(716)의 고려군 설치 당시 상야국에서는 고구려인을 이주시키지 않아 이미 토착 호족화한 고구려계 씨족에게 신설된 군의 지배를 맡겼을 가능성도 있다.

무장국으로 이주한 백제, 신라인 중에는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사찰의 건립과 불교의 포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고려군에 남아 있는 불교사원의 유적, 유구도 선주한 도래인들의 불교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고 융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사원건축은 선진문화의 표상이었고 왕실과 지배층의 권위의 상징이었다. 국·군에 설치된 관아 등의 건축물 역시 사원건축이 중요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려군에 불교사원의 건립은 불교신앙의 확산이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구복신앙뿐 아니라 그 당시 동국지방의 에미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의 관련성도 존재한다. 에미시 대책에 현지에서 병사가 차출되었고 여기에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연력 2년(783)에 판동제국(坂東諸國, 東國地方)에 내린 칙에 따르면, 군사부담의 증대로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농작물도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칙사를 보내 진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⁴⁰고 하는 상황에서 현지 토착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구제받으려는 현실적 욕구가 불교신앙, 사원건축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⁴¹

이와 같이 무장국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제국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인을 유입시켜 고려군을 만들고 고구려계 씨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국 지방 개발의 거점으로 삼았다.

40 『續日本紀』延曆 2년 4월 음측조.

41 森田悌, 1994, 「武藏國における佛教信仰の展開」, 柳田敏司·森田悌 編, 『渡來人と佛教信仰-武藏國寺内弊寺をめぐって』, 雄山閣出版, 137~138쪽.

IV. 무장국의 고구려계 씨족과 고려군

1. 대신조신박마려와 고려군

고려군 설치에 대해 일본조정의 에미시 대책, 동국지방에 대한 고구려인의 이주와 이들의 신기술을 이용한 미간지 개척 등을 중심으로 건군(建郡)의 배경을 논하였다. 한편으로는 고려군의 설치를 추진한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건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계획한 것은 군 설치를 열망하는 집단, 고구려계 씨족과 관련 있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군 성립 이전에 이미 동국지방에는 많은 고구려인이 각지에 거주해 있었고, 거마군(巨麻郡)의 존재는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들에 의해 새로운 경지가 개간되고 지역적 공동체가 출현하여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망이 형성되고 상호 간의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민들에게 고구려라는 동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공동체의 실현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미 기내지역에는 고구려인들의 집단거주지로 보이는 지명, 인명이 산견되고 있다. 평안(平安)시대 승평(承平) 연간(931~938)에 편찬된 『화명류취초』의 산성국(山城國) 상락군(相樂郡)에는 상박향(上狛鄉), 하박향(下狛鄉)의 2향이 기록되어 있다. 경도 분지에 있는 상락군은 고구려 사신을 위한 영빈관인 상락관이 조영된 곳이기도 하다. 또 산성국 남산성(南山城) 지역에는 상박(上狛), 하박(下狛), 박전(狛田)의 지명이 있고, 근대의 명치시대까지 고려촌도 남아 있었다.⁴² 『일본서기』, 『신찬성씨록』 등에도 고구려 출신의 인명에 박수(狛首), 박조(狛造), 대박련(大狛連), 박련부(狛連部), 박인(狛人) 등이 보이고, 지역명을 관칭한 인명도 보인다. 도래계 씨족들 간에 동족집단을 만드는 것은 당시의 흐름이었고, 동시에 거대씨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수단이었다.

42 井上滿郎, 2010, 「古代南山城と渡來人-馬場南遺跡文化の前提-」, 『京都府埋藏文化財論集』 6, 193~195쪽.

고려군 설치를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중에 대신조신박마려(大神朝臣 狛麻呂)가 있다. 그는 대화국(大和國) 성산면(城山郡) 대신향(大神郷)을 본거지로 하는 대신조신씨의 일족으로 화동 원년(708)에 중5위상으로 단파수(丹波守)에 임명되었고, 영기 원년(715)에는 정5위상으로 승진하면서 무장수(武藏守)에 임명된다. 그는 고려군이 설치될 당시 관할국인 무장국의 장관이었다. 대신조신박마려라는 인물은 임신의 난 공신인 고시마려(高市麻呂)와 안마려(安麻呂)의 동생이고, 대화의 호족 삼륜씨(三輪氏) 본종가의 1인이지만, ‘고마(泊)’라는 이름으로부터 추정하면 그의 모계 혹은 양육자가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⁴³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화개신의 주역인 등원겸족(藤原鎌足)의 아들이자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한 등원불비등(藤原不比等)이 유년 시절에 백제계 씨족인 전변사대우(田邊史大隅)에게 양육되었던 까닭에 양육자의 사(史) 성을 받아 이름을 후히토(不比等, 史)라고 하였다.⁴⁴ 후히토의 이름이 원래 사(史)였다면 『일본서기』 지통 3년(689) 2월조에 등원조신사(藤原朝臣史)로 표기했고, 『회풍조(懷風藻)』에는 ‘태정대신등원사(太政大臣藤原史)’로 기록되어 있으며, 『등씨가전(藤氏家傳)』(下)에도 등원불비등을 ‘태정대신사(太政大臣史)’로 나와 있다. 대신조신박마려의 양육자가 고구려계 씨족인지 혹은 모계가 고구려 사람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명에 모계의 흔적을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 대신조신박마려가 산성국 등 기내지역을 비롯하여 동국지방에 정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단파국수(丹波國守)로 재임할 때의 관할구역은 도래계 씨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경도(京都) 중북부, 병고(兵庫) 북부와 중부의 동편, 그리고 대판(大阪) 일부 지역으로 고구려 유민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군은 박마려(狛麻呂) 자신이 지방장관으로 재임하던 관할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43 荒井秀規, 2015, 「渡來人(歸化人)の東國移配と高麗郡・新羅郡」, 『古代東ユーシア研究センター-年報』第1號, 專修大學社會知性研究開發センター-, 27쪽.

44 坂本太郎 外 校注, 1965, 日本古典文學大系本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295쪽 頭註 29.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대외교섭에 종사한 전통을 갖는 대신조신(大神朝臣)씨 가문에서 배출한 대신조신박마려가 고구려 유민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려군 건군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⁵ 율령국가의 국·군의 설치는 권력의 핵심부인 의정관에서 다루는 문제이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사의 건의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대신조박마려신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무장국수 지위에서 자신의 관내 고려군 창설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2. 고려조신과 고려군의 번영

다음으로 고려군의 설치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고려조신(高麗朝臣)가문이다. 이 씨족은 무장국, 고려군과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 『속일본기』 연력 8년(789)조의 고창조신복신(高倉朝臣福信)의 흥전(薨傳)을 통해 그 내력을 살펴보자.

[4-1] 산위 종3위 고창조신복신이 죽었다. 복신은 무장국 고려군 사람이다. 본성은 背奈이다. 그 조부 福德은 당나라 장군 이세적이 평양성을 함락했을 때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무장에 살게 되었는데, 福信은 곧 福德의 손자이다. 어렸을 때 백부 背奈行文을 따라 왕경으로 들어왔다. … 聖武皇帝는 은혜와 총애를 더하여 勝寶初에는 종4위 자미소필에 이르러 본래 성을 고쳐서 高麗朝臣을 내리고 신부대보로 옮겼다. 神護 원년에 종3위를 주어 造宮卿에 임명하고 겸하여 武藏守와 近江守를 역임하였다. … 天應 원년(781)에 彈正尹 겸 武藏守로 옮겼다가 延曆 4년(785)에 표를 올려 벼슬에서 물

45 鈴木正信, 2017, 「大神朝臣狛麻呂と武藏國高麗郡」, 『日本古代の氏族と系譜傳承』, 吉川弘文館, 213~218쪽.

러나기를 청원하자, 산위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망 시의 나이가 81세였다.⁴⁶

이 흥전에는 복신의 본관, 조상의 내력, 씨명의 변화, 관직에 오르는 과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무장국 고려군 사람으로 본성은 배나(背奈)이고 조부인 복덕이 당나라 장군 이세적이 평양성을 함락했을 때 일본에 귀화하여 무장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668년 고구려가 당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당시의 상황이다. 요동군행군대총관에 임명된 이세적이 이끄는 당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남진, 남산 등 많은 고구려인이 당으로 끌려갔다. 이때 많은 고구려 유민이 발생하였고, 복신의 조부 복덕은 일본으로 망명한 것이다. 복신이 사망한 연력 8년(789)에 나이가 81세라고 하니 그의 출생은 고구려 멸망 후 30년이 지난 화동 2년(708)이다. 즉, 고구려 유민의 3세에 해당된다. 조부 복덕이 무장으로 이주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정기간 왕경에서 관직을 제공받다가 일본조정 유민정책에 따라 무장국으로 배치되어 정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복신의 조부 일족은 무장국에 토착하여 유력자의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그 기반으로 중앙의 관계에 진출했다고 생각된다. 복신은 이러한 선대의 후광을 입어 중앙의 관료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씨족의 본성은 배나로 되어 있는데, 고구려 5부의 소노부(消奴部)에서 유래하는 ‘초나(肖奈)’에서 나왔고 고구려 5부 중의 소노부 출신으로 생각된다.⁴⁷ 고구려 유민들 중에는 자신의 출신 부명을 씨명으로 한 씨족이 적지 않다. 배나씨(背奈氏)는 양로 5년(721)을 하한으로 하는 시기에 배나공(背奈公)으로 바뀌었고,⁴⁸ 천평 19년(747)에 배나왕(背奈王)으로 개성되고,⁴⁹ 천평승보 2년(750)

46 『續日本紀』延曆 8년 10월 을묘조.

47 佐伯有清, 2001, 「背奈氏の氏族とその一族」, 『新撰姓氏録の研究』拾遺編, 吉川弘文館, 357쪽.

48 『續日本紀』養老 5년 정월 갑술조에 ‘第二博士正七位上背奈公行文’이라는 인명이 나온다. 背奈公은 肖奈公을 가리키고, 개성된 기사는 없으나 이해가 肖奈公

에 고려조신(高麗朝臣)으로,⁵⁰ 보귀 10년(779)에는 다시 고창조신(高倉朝臣)⁵¹으로 개성되었다.⁵² 특히 도래계 씨족으로 조신의 성을 받는다는 것은 일본조정
의 특별대우였다. 배나는 고구려에서의 씨명이고, 배나공 및 그 후의 성은 일본
조정으로부터 받았다.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고려」조에는 “고려조신은 고구
려왕 호태(好台) 7세손 연전왕(延典王)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태왕은 광개토왕으로 그 7세손에 해당하는 고구려왕은 영양왕(590~618),
영류왕(618~642), 그리고 영류왕의 동생으로 즉위하지 않은 대양왕(大陽王)이
있다. 아마도 사서에 전하지 않은 방계의 인물에 왕의 호칭을 붙인 것으로 생각
된다.

고려군 성립 이후에 고려군을 지배한 군령(郡領)에 대해 살펴보자. 대보령에
규정된 군에는 대령(大領)·소령(少領)·주정(主政)·주장(主帳) 등 4등관으로 정
비되어 있고, 대령과 소령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郡司) 임면권은 중앙의 식부
성(式部省)이 장악하고 해당국의 국사가 추천하면 군사 후보자는 식부성에 와서
면접을 통해 임명된다.⁵³ 이 경우 이전 국조였던 지방호족이 세습하는 것이 관
례이고 중앙에서 파견되어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사로서는 재지 유력자의 도움
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무장국수는 고구려계 씨족과 관계 깊은 대신조신
박마려(大神朝臣狍麻呂)였고, 무장국에는 고려복신(高麗福信) 일족이 정주하고

성이 나오는 최초의 해이다.

- 49 『續日本紀』天平 19년 6월 신해조, “正五位下背奈福信, 外正七位下背奈大山, 從八位上背奈廣山等八人, 賜背奈王姓.”
- 50 『續日本紀』天平勝寶 2년 정월 병진조, “從四位上背奈王福信等六人賜高麗朝臣姓”
- 51 김은숙의 견해에 따르면, 종래 ‘高麗’를 ‘高倉’으로 개성한 것을 일본적인 씨로 바꾼 것으로 보았으나, 高倉은 ‘たかくら’로 읽히지만 ‘こくら’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상기시키는 씨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金恩淑, 2007, 앞의 글, 462쪽). 온당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 52 『續日本紀』寶龜 10년 3월 무오조, “從三位高麗朝臣福信賜姓高倉朝臣.”
- 53 馬場基, 2016, 「中央と地方を結ぶ人々の動き」, 館野和己·出田和久 編, 『日本古代の交通・流通・情報1, 制度と實態』, 吉川弘文館, 91~95쪽.

있었다. 고려군 설치 당시에는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난 상황으로 그의 일족은 재지세력으로서의 기반은 다져놓았다고 보인다. 무장국수의 입장에서 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인 이들 고구려계 씨족에게 고려군의 군사(郡司)를 추천 하고 군령을 맡았을 것은 분명하다.

한편, 고려복신 일족 중에는 재지에서뿐 아니라 중앙정계에 관인을 배출하 고 있었다. 『속일본기』 양로 5년(721)조에는 복신의 백부 배나공행문(背奈公行文)이 ‘명경(明經) 제2박사 정7위상’의 직위에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그 내용은 백료 중에서 학업이 뛰어나고 사범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후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⁴ 이른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관료의 양성이다. 그는 고려군 설치 이전에 중앙관료가 되었고, 어린 조카인 복신을 왕 경으로 데려와 관인으로 성장시켰다. 복신홍전(福信蘆傳)에 따르면 씨름 실력 으로 발탁된 후,⁵⁵ 궁중의 내수소(內堅所)에서 보조일을 하면서 정8위에 상당하 는 우위사대지(右衛士大志)로 출발하였고, 천평 연간에는 외종5위하를 받고 춘 궁량(春宮亮)에 임명되었다. 성무천황의 총애를 받아 천평승보(749~757) 초에 는 종4위 자미소필(紫微少弼)에 이르렀고, 신호 원년(765)에 종3위로 조궁경(造宮卿)에 임명되어 무장수(武藏守), 근강수(近江守)를 겸임하였다. 고려복신은 천평승보 8세(756), 보귀 원년(770), 연력 2년(783) 등 세 번에 걸쳐 무장국 장 관인 무장수를 겸임하고 그의 일족인 고려대산(高麗大山)은 천평보자 5년(761) 에, 고려석마려(高麗石麻呂)는 보귀 9년(778)에 무장개(武藏介)에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씨 일족이 무장국 국사에 임명된 것은 그들이 무장국 출신이었기 때문이고, 나라조(奈良朝)에서 복신 일족의 무장국에 대한 지배는 계속되었다.

54 『續日本紀』養老 5년 정월 갑술조.

55 福信이 ‘교묘하게 그 힘을 이용해서 이겼다’는 기술은 神事 예능적 요소가 강한 일 본의 고습속의 씨름과는 분위기가 다르고, 북방민족의 전통을 가진 고구려 전래의 요소가 풍부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近江昌司, 1988, 「背奈福信と相撲」, 直木孝次郎先生古稀記念會 編, 『古代史論集』中, 塙書房, 161쪽). 양국의 씨름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무장국은 사실상 복신 일족의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망명 초기의 배나씨에서 시작하여 배나공, 배나왕, 고려조신, 고창조신으로의 씨성의 변천을 거치면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무장국 예하의 고려군 역시 군사의 주요 구성원은 재지에 거주하던 복신의 일족인 고려씨의 소관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 멸망 후 일본으로 망명한 고려씨 일족의 번영은 중앙과 재지에서 관인으로 진출한 씨족 상호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중앙의 관인이 된 배나행문(背奈行文)은 문사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당대 왕실을 대표하는 실세였던 장옥왕(長屋王)의 저택에서 열린 신라사의 연회석상에도 초대되어 단가 2수를 지었다. 『회풍조』에 실려 있는 “종5위하 대학조(大學助) 배나왕행문(背奈王行文) 이수(二首) 육십이(六十二)”라고 하여 그의 나이 62세 때에 「추일어장왕택연신라(秋日於長王宅宴新羅)」와 「상사계음응소(上巳禊飲應詔)」 2수를 남겼다. 전자는 장옥왕이 신라사를 위해 연회를 베풀어 태평의 세를 축복하고 귀빈을 맞이하여 환담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후자는 천자의 자비와 성스러운 가르침을 찬양하고 있다. 배나행문은 『등씨가전(藤氏家傳)』에 명망 있는 학자 6인 중에도 나온다. 그는 등원부지마려(藤原武智麻呂)의 별저에서 열린 문인의 모임에 참석한 문인재사였다.⁵⁶ 당시 장옥왕은 황친세력의 대표였고, 등원씨는 귀족의 대표로서 권력의 실세였다. 권력자의 측근에서 시문을 과시하는 것은 권력에 접근하는 기회였다. 고려조신복신 역시 당시의 권력자 등원중마려가 자미중태(紫微中台) 장관인 자미령(紫微令)의 지위에 있을 때 중위대령(中衛大將)을 겸직하면서 신임을 얻었다.⁵⁷ 그 후 복신이 종3위 조궁경(造宮卿)에 임

56 『藤氏家傳』, “… 宿儒有守部連大隅, 越智直廣江, 背奈行文, 箭集宿禰蟲麻呂, 鹽屋連吉麻呂, 檜原造東人等. … 至于季秋, 每與文人才子, 集習宜之別業, 申文會也, 時之學者, 競欲預座, 名曰龍門點額也.”

57 加藤かな子, 1987, 「北武藏の古代氏族と高麗郡設置」, 『駒澤史學』 37, 64~65쪽; 近江昌司, 1985, 「仲麻呂政權下の高麗朝臣福信」,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續群書類從完成會, 148~153쪽.

명되고 무장수, 근강수 등 지방장관에 보임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중앙정계에서 복신 일족의 활약은 동족이 거주하는 재지에 영향을 미쳤고, 재지세력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복신은 만년에 이르러 연력 4년(785)에 조정에 사직을 청하고 동족이 있는 무장국 고려군으로 귀향한 것(上表乞身, 以散位歸第焉)은 중앙과 지방의 일족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V. 맺음말

8세기 일본율령국가는 대보령을 제정하고 전국을 국·군·리로 편성하는 지방 행정조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동국지방은 미간척지인 데다 에미시라는 이종족이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중앙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본조정에서는 백제, 고구려의 멸망 전후로 하여 망명해 온 유민들의 일부를 동국지방에 이주시켰다. 일본고대국가의 동국지방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목적하에 단행된 사민정책이었다.

고려군은 동국지방에 산거하고 있던 고구려인 1,799인을 무장국으로 이주시켜 만든 행정구역이다. 이들을 한곳에 집거시킨 것은 동국 경영에 대한 일련의 시책 속에서 추진되었다. 무장국은 동국지방의 중심지로서 중시되었고, 고려군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고려군 설치 당시 관할국인 무장국수였던 대신조신박마려는 고구려계 씨족과 친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려군의 건군에 조력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고려군의 조직과 운영은 재지의 고구려계 씨족들이 맡았다. 그중에서 고구려 멸망 직후 망명한 배나씨는 고려군의 재지 수장층으로 성장했으며, 중앙에도 고위 관인을 배출하는 등 고려군의 중앙과 지방에서 씨족의 위상을 높여갔다. 배나씨는 배나공-배나왕-고려조신-고창조신으로 상위의 성을 획득하면서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고려군의 실질적 지배는 배나씨 일족이 담당했지만, 고려신사의 제신으로

모셔져 있는 고려약광의 존재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약광은 일본조정으로부터 고려왕이라는 성을 받아 고려군의 창설 시기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고구려계 씨족의 원로적 지위에서 존송받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사후 세워진 고려신사는 고려약광을 제신으로 하는 현지의 고구려계 씨족을 아우르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고려씨계보>에 보이는 고려씨는 고려약광의 혈연적인 관계로 이어진 계보가 아니라 의제적 동족관계이고, 고려씨라는 통일된 씨명으로 가문을 이어갔다. 고려약광은 본국에서의 절노부 출신이고, 배나씨 역시 소노부에서 유래하는 고구려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계층으로 양자는 고구려의 신분 구조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고구려라는 공동의 출처의식으로 가문을 일체화시켰다.

일본을령국가가 만들어낸 고려군은 동국지방이라는 변경의 일개 군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구려계 씨족들의 공동의 안식처였고, 나라 잃은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화 과정 속에서 융화되어갔지만, 고려신사라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의례행위를 통하여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씨족의 결속력을 유지해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사료

- 『藤氏家傳』.
『三代実録』.
『續日本紀』.
『新撰姓氏錄』.
『令集解』.
『日本書紀』.
『日本後紀』.

단행본

- 筧敏生, 2002, 『古代王權と律令國家』, 校倉書店.
關晃, 1996, 『古代の歸化人』(關晃著作集 3卷), 吉川弘文館.
埼玉縣史編纂室, 1982, 『埼玉縣古代寺院調査報告書』.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81, 『飛鳥藤原宮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6.
日高市史編集委員會 編, 1997, 『日高市史』 原始古代資料編.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논문

- 金恩淑, 2007, 「일본울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동북아역사논총』 15.
加藤かな子, 1998, 「北武藏の古代氏族と高麗郡設置」, 『駒澤史學』 37.
加藤謙吉, 2018, 「高麗若光と高麗福信」, 『日本古代の豪族と渡來人』, 雄山閣.
筧敏生, 1987,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帝國主義」, 『日本史研究』 317.
高橋一夫, 1982, 「女影系軒丸瓦の一試論」, 『研究紀要』, 埼玉縣埋藏文化財調査事業團.
_____, 2013, 「どうしてこの地に高麗郡が建郡されたの」, 高麗浪漫學會 編, 『早

- わかり高麗郡入門Q&A』, 高麗郡建郡1300年記念事業會。
- 宮瀧交二, 2008, 「高麗郡の設置と渡來人」, 『名栗の歴史』上, 飯能市教育委員會。
- 近江昌司, 1985, 「仲麻呂政權下の高麗朝臣福信」,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續群書類從完成會。
- , 1988, 「背奈福信と相撲」, 直木孝次郎先生古稀記念會 編, 『古代史論集』中, 塙書房。
- 埼玉縣入間郡日高町教育委員會 編, 1984, 「日高町埋藏文化財調査報告」, 『大寺廢寺』。
- 金光林, 1993, 「高麗神社からみた朝鮮渡來文化」, 『比較文學研究』64。
- 馬場基, 2016, 「中央と地方を結ぶ人々の動き」, 館野和己・田出和久 編, 『日本古代の交通・流通・情報1, 制度と實態』, 吉川弘文館。
- 富元久美子, 2014, 「渡來人による新都開發-武藏國高麗郡-」, 天野努・田中廣明 編, 『古代の開發と地域の力』, 高志書院。
- 森田悌, 1994, 「武藏國における佛教信仰の展開」, 柳田敏司・森田悌 編, 『渡來人と佛教信仰-武藏國寺内弊寺をめぐる』, 雄山閣出版。
- 新井孝重, 2010, 「古代高麗氏の存在形態」, 『日本歴史』749。
- 鈴木正信, 2017, 「大神朝臣狛麻呂と武藏國高麗郡」, 『日本古代の氏族と系譜傳承』, 吉川弘文館。
- 田中史生, 1997, 「王姓賜與と日本古代國家」,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 井上滿郎, 2010, 「古代南山城と渡來人-馬場南遺跡文化の前提-」, 『京都府埋藏文化財論集』6。
- 佐伯有清, 2001, 「背奈氏の氏族とその一族」, 『新撰姓氏錄の研究』拾遺編, 吉川弘文館。
- 中平薫, 2002, 「武藏國各郡の官衙及關連遺跡15 高麗郡」, 『坂東の古代官衙と人びとの交流』, 埼玉縣考古學會。
- 坂本太郎 外 校注, 1965, 日本古典文學大系本『日本書紀』下, 岩波書店。
- 荒井秀規, 2015, 「渡來人(歸化人)の東國移配と高麗郡・新羅郡」, 『古代東ユラシア研究センター年報』第1號, 專修大學社會知性研究開發センター。

고대일본의 고려군(高麗郡) 설치와 고구려계 씨족의 동향

연민수

고려군은 동국지방에 산거하고 있던 고구려인들을 이주시켜 신설한 군이다. 당시 관할지역의 장관이었던 대신조신박마려(大神朝臣狛麻呂)는 고려군의 설치에 조력하였다. 고려군의 조직과 운영은 재지의 고구려계 씨족들이 맡았다. 그 중에서 배나씨(背奈氏)는 고려군의 유력자로 성장했으며 중앙에서 관인을 배출하는 등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고려신사의 제신으로 모셔져 있는 고려약광(高麗若光)은 일본조정으로부터 고려왕이라는 성을 받아 고려군의 창설 시기에 이주하여 고구려계 씨족의 원로적 지위에 있었다. 그의 사후 세워진 고려신사는 고려약광을 제신(祭神)으로 하는 현지의 고구려계 씨족을 아우르는 정신적 중심점이 되었다. 고려신사라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의례행위를 통해서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해갈 수 있었다. 고려군은 동국지방이라는 변경의 일개 군이었지만, 고구려계 씨족들의 공동의 안식처이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주제어: 고려군, 대신조신박마려, 배나씨, 고려약광, 고려신사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Goryeo-Kun and the Trends of Goguryeo-Derived Families in Ancient Japan

Yeon Minsoo

Goryeo-Kun was a new Kun built by moving Goguryeo people that scattered around in the Dongguk area. Daesinjosin Park Ma-ryeo, who was the minister of its jurisdiction those days, offered assis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Goryeo-Kun, whos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as left in the hands of Goguryeo-derived families in the local area. Of them, the Baenae family grew into an influential family in Goryeo-Kun and raised its status as a distinguished family by producing government officials in Junge. Goryeoyakgwang, who was the god enshrined at the Goryeo Shrine, received the last name of Goryeowang from the Japanese royal court and moved to the Goryeo-Kun during its formation, holding an elder position among the Goguryeo-derived families. Goryeo Shrine, which was set up after his death, became a spiritual pivot to encompass the local Goguryeo-derived families that enshrined Goryeoyakgwang. They were able to form spiritual bonds

with one another in a ritual act of serving their common ancestor at Goryeo Shrine. Goryeo-Kun was just a Kun established in the frontier of Dongkuk area, but it was a common resting place for Goguryeo-derived families to maintain their identity.

Keywords: Goryeo-Kun Daesinjosin Park Ma-ryeo, The Beanae family grew, the Chonae family grew Goryeoyakgwang, Goryeo Shrine,

장제스의 친중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1945~1947)

정형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정창원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유엔창립총회 기간 중국인사와 이승만의 접촉
- III. 장제스의 친중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의 방중 배경
- IV. 이승만의 방중과 정치 자금 지원
- V. 맺음말



I. 머리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사건 이후 진장(鎭江), 광저우(廣州), 류저우(柳州) 등지로 소재지를 옮겨 다니다가 1940년 충칭(重慶)에 와서야 안착하였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귀국할 때까지 임시정부는 대체로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중국 땅에서 힘겨운 투쟁의 시기를 보내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상당 부분 중국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장제스의 이름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위시하여 중국과의 관계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한다.¹

임시정부 인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김구와 장제스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으로 회자된다. 이에 비해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은 장제스와 접점을 찾기 어렵다. 이승만과 장제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1949년 이후의 자료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동아시아 ‘반공동맹’의 결성 논의에서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관계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은 각자가 처한 군사적·정치적 위기에서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 투고: 2020년 10월 5일, 심사 완료: 2020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0년 11월 25일

** 이 글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배경한, 2010, 「중일전쟁시기 장개석·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역사학보』 208; 배경한, 201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1-1945)」, 『중국근현대사연구』 56;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조덕천, 2016,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동양학』 63; 배경한, 2017a, 「윤봉길의거 이후 장개석·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장기항전」, 『역사학보』 236; 윤은자, 2019, 「1932-1937년 김구의 난징행적」, 『중국근현대사연구』 84 등.

동맹관계는 대체로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다만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배경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김구나 임시정부 인사들처럼 장제스와 접점을 갖지 못했던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승만과 장제스의 첫 만남은 1947년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방미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던 이승만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짧은 만남이었다. 그보다 앞선 1945년, 샌프란시스코의 유엔창립총회에서 이승만은 중국 대표단 인사들과 짧은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은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국제무대에 호소하기 위해 구미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 주영대사 귀타이치(郭泰祺)와 같은 국민정부 인사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1943년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재정부장이자 주미대표였던 송쯔원(宋子文)과도 짧은 접촉이 있었다.

1941년 외교부장에 임명된 귀타이치는 원래 반장(反蔣)계열 인사로 장제스와 갈등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외교부장으로 낙점되었다. 그러나 8개월도 안 되는 짧은 외교부장 재임기간 장제스와의 관계는 평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자신이 만난 이승만에 대해 견해를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반영한다. 송쯔원은 장제스의 처남으로 장제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였다. 1943년에 작성된 그의 개인 자료나 장제스에게 보고된 문서를 살펴보면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는 이승만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 인상이나 영향력을 평가한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는 장제스에게 자주 의견을 전달했던 국민정부 인사의 자료가 남아 있는 1945년의 유엔창립총회부터 이승만의 방중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승만이 총회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측 인사와 접촉한 것에 대해 언급된 서술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946년 말부터 1947년 초까지 이루어진 이승만의 방미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이루어진 이승만의 외교활동으로 여러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였지만, 방미외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장제스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다

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승만의 방중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 연구서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며,² 광복 후 한중관계를 다룬 김지훈의 논문에서 이승만의 방중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³

이승만의 방중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료에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일전쟁 시기의 장제스 정부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장제스와 김구의 친분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장제스일기(蔣介石日記)』나 『장중정총통문물: 사략고본(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 『총통장공대사장편초고(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등 장제스의 개인적 기록을 수록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1947년 이전에는 이승만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구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1930년대부터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947년부터 등장하는 이승만의 방중에 관련된 중국 측 기록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맥락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다만 산재하는 일부 자료들이 이승만이 방중하였던 상황의 맥락들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지훈의 연구도 김영신이 편역한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 관련 자료 집역』에 수록된 자료를 인용하여 이승만의 방중을 기술하고 있다.⁴

이 글에서도 국사관 소장의 장중정총통 당안뿐만 아니라, 필자가 확인할 수

2 광복 후부터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가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난징(南京)에서 장제스를 만났다는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양동안, 2002, 「45-48년 기간에 있어서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5(3); 박진희, 2006,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76; 차상철, 2009,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수립」, 『미국사연구』 29; 손세일, 2015 『이승만과 김구』 제6권, 조선뉴스프레스 참조.

3 김지훈, 2015,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 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군사』 96.

4 장중정총통당안은 1923년부터 1972년까지 타이완의 국사관(國史館)이 소장하고 있는 장제스와 관련된 전보, 전문, 공문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 관련 자료 집역』(김영신, 2011, 선인)은 장중정총통당안의 한국 관련 자료 중에서 1947년까지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있는 범위에서 국사관의 국민정부 당안, 타이완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가 소장한 국민정부 외교부 당안, 그리고 국민정부 외교부장을 지낸 왕스제(王世杰) 일기, 주영 중국대사와 미국대사를 지낸 직업외교관인 구웨이쥔(顧維鈞, Wellington Koo)의 회고록, 주한 중국대사를 지낸 샤오위린(邵毓麟)의 저작을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과 이해를 보완하였다. 또한 한국의 언론자료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등 미국 자료 및 일부 국내 신문 등의 자료도 참조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본문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였다. 첫째, 1945년 유엔창립총회 시기에 이승만의 활동이 중국 측 인사에게는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 둘째, 이승만의 방중을 전후하여 장제스 측근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셋째, 1947년 이승만과 장제스의 짧은 만남으로 장제스는 이승만에게 어떠한 인상을 갖게 되었으며, 원래 김구를 염두에 두었던 친중정부 구상의 변화와 이·장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본문에서는 필자들이 주목한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을 이어가고자 한다.

II. 유엔창립총회 기간 중국인사와 이승만의 접촉

1941년 진주만 공습이 발발하자 중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여 연합국의 편에 섰다.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중일전쟁을 4년간 힘겹게 끌어오던 중국은 전쟁의 동반자가 생겼으나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아편전쟁 이후 오랜 기간 반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던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더불어 4대 강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세계 강국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던 중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일본 패망 후 만주와 타이완의 귀속 및 조선의 독립 등과 같은 의제를 구상하며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카이로회담에 참석하였다.⁵

5 呂芳上, 2015,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國史館, 493쪽.

카이로회담에서 ‘장제스가 어떤 자격으로 한국문제를 논의의 의제로 삼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간여한 시간과 인연은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의 상황에 관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통시대부터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고 일컬을 만큼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는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면서부터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한반도가 어느 특정 강국의 영향하에 놓이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친중(親中)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랐다. ‘친중정부’라는 단적인 측면만 본다면 장제스와 국민정부에게 가장 편한 한국 측 대상은 아무래도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였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장제스나 국민정부 측과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이승만은 구미 국가에 주재하던 중국 외교관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또한 1943년 카이로회담 직전, 이승만은 미국과 중국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주미 중국대표 송쯔원,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 등에게 보냈다. 송쯔원에게는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왔을 때 장제스에게 보고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다.⁶ 그러나 이 정도의 보고만으로 장제스와 접촉한 시간이 긴 김구와 견줄 만한 인물로 평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후 8년간 지속된 중일전쟁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5년 봄의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가 국민정부 외교관인 구웨이권의 회고록에 남아 있다. 이것은 이승만

6 「宋子文電蔣中正報告韓僑李承晚韓吉秀兩派在美活動情報及請示韓國義勇軍是否已被我國解散」(1942. 4. 6.), 『蔣中正總統文物：革命外交－對韓菲越關係(二)』, 典藏號：002-090103-00010-005; 「邵毓麟戴笠分電蔣中正美政府對韓國臨時政府駐美代表李承晚要求承認態度及韓國獨立黨召開臨時代表大會改選金毅漢爲組織部長等」(1942. 9. 23.),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一年』, 典藏號：002-080200-00297-078.

의 유엔창립총회 당시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1942년부터 중·미 매체들은 ‘조선을 국제 공동관리하에 두기로’ 한다고 보도하였고,⁷ 1943년의 카이로회담에서 ‘적당한 절차에 따라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독립 애국지사는 4대 강국이 한국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중국도 4대 강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이라는 의제를 두고 임시정부 인사들은 중국 국민정부의 인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였다.

1944년 8~9월에 개최된 덤바턴 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에서는 전후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모스크바 선언의 실행을 위해 논의하고, ‘일반적 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⁸ 이 제안을 기초로 1945년 4월 25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창립총회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1945년 3월 5일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발기국의 자격으로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 모든 국가에 유엔 창설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총 46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개최될 무렵에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덴마크, 아르헨티나가 추가로 초청되었고, 이후 폴란드가 서명에 참여하면서 유엔창설회원국은 총 51개국이 되었다.⁹

1945년 3월 5일 중국 외교부도 발기국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었다.¹⁰ 충칭(重慶)주재 「한인(韓人) 제26주년 3·1절 기념대회」의 주석 신익희는 국민정부 주석 장제스에게 서한을 보내 임시정부 대표가 유엔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달라고 요청하였다.¹¹ 그러나 최종적으로 충칭의 임시정부는 유엔창립총회의 참가 초청장을 받지 못하였다.

7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장개석」, 『역사학보』 224, 324쪽.

8 박흥순·조한승·정우탁 엮음, 2013, 『유엔과 세계평화』, 도서출판 오름, 30쪽.

9 박치영, 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56쪽.

10 秦孝儀, 1978,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五下, 中正文化基金會, 683쪽.

11 「在渝韓人第二十六週三一節紀念大會主席申翼熙函國民政府主席蔣中正爲本紀念大會要求允許韓國代表正式參加舊金山會議」(1945, 3. 5.), 『國民政府：國際政治運動』, 典藏號: 001-060100-00001-013.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승만도 유엔창립총회의 참가를 중시하였다. 그는 이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독립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비록 회의 참가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 교민들과 대표단을 조직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였다. 소련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한 이승만은 우선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¹² 총회의 사무총장 앨저 히스(Alger Hiss)에게 한국 대표단의 옵서버 자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¹³

이러한 외증에 5월 중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이승만은 미국언론에 “알타밀 약에서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¹⁴ 이어 이승만은 트루먼(Harry S. Truman)에게도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이 유엔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¹⁵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며 그 배경에는 ‘친공(親共)적인 성향의 국무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⁶ 트루먼은 이승만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

5월 22일 이승만은 주영 중국대사이면서 중국의 유엔 대표단으로 창립총회에 참석 중이던 구웨이진을 찾아갔다. 다음은 이승만과의 회담에 대한 구웨이진의 기록이다.

12 언론에 발표하기로 결정한 후 이승만은 샤오위린에게도 전화하여 “알타비밀회의에서 중국 동삼성의 주권과 한국의 국가이익을 팔아버렸고”, 석간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승만은 샤오위린에게 이 소식을 미국 군부에 있는 친구에게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邵毓麟, 1980, 『使韓回憶錄』, 傳記文學社, 58쪽.

13 邵毓麟, 1967, 『勝利前後』, 傳記文學社, 27쪽.

14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역사비평사, 262~263쪽.

15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Rhee) to President Truman”(May 15, 1945),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pp. 1028~1029.

16 邵毓麟, 1967, 앞의 책, 27쪽.

이승만은 나를 찾아와 조선이 읍서버의 신분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중국대표단이 건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미 미국 국무부와 접촉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으나 국무부에서는 조선이 대서양현장의 서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 점에 대해 이승만은 이것이 사실이기든 하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도 대서양현장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였다. 그는 중국 대표단이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출해주기를 희망했고, 또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듯하였다. 그는 “나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문홍보도 더 이상은 미루어둘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에 직접 편지를 써서 초청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프랑스 대표단에게도 이미 이 문제를 요청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은 전적으로 조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카이로 협정에서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 조선에 독립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협정 당사국의 하나로 영국이나 미국과 논의하여 동의를 얻기 전에는 협정을 위배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이는 너무 빨리 조선정부를 승인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 내에 일부 인사는 이승만의 주장을 지지하나 대다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 조선의 문제는 이승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¹⁷

이승만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 대표단의 참석이 거부되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단이 유엔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구웨이원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영국이 카이로에서 논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카이로의 약

17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顧維鈞回憶錄』 第五分冊, 中華書局, 494~495쪽.

속이란 한국은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어느 정도의 절차(5년간 동맹국에 의한 공동 관리)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중국도 카이로에서 동의했던 바였다.¹⁸

1944년 9월 미국정부와 영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전후 한국을 국제 감독 아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한국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른바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독립’을 미·영과 함께 이끌어낸 공식으로 간주하였다.¹⁹ 그렇기 때문에 구웨이젠과 중국 대표단원들은 유엔창립총회에서 “알타밀약을 맺어 한국을 소련에 넘기기로 했다”는 이승만의 폭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돌적인 이승만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구웨이젠을 방문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이승만과 대립하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소속의 한국 청년들이 구웨이젠을 방문하였다. 구웨이젠은 그들에게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미 국무부에 대한 이승만의 도발적인 공격은 미국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암시하였다. 그러면서 구웨이젠은 당장 유엔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최후의 평화회의에는 참가할 수 있기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은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²⁰ 이 짧은 두 차례의 사례를 볼 때, 아직 세계 대전이 종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폭로는 당시 미 국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구웨이젠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에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1945년 유엔창립총회 기간에 이승만이 접촉한 다른 중국정부인사는 샤오위린(邵毓麟)이다. 샤오위린은 1940년 중국 국민정부 외교부 정보사(情報司)의 사장(司長)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정부의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또한 1944년

18 邵毓麟, 1980, 앞의 책, 52~53쪽.

19 邵毓麟, 1980, 위의 책, 53쪽.

20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앞의 책, 495쪽.

부터 그는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임시정부의 중국 측 정치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1945년 1월 샤오위린은 미국에서 개최된 태평양학회 국제회의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한국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와 전경무(田景武)가 이끄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대립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가는 샤오위린에게 김구는 재미 한국독립운동단체들의 화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²¹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샤오위린은 이승만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승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국무부와 이승만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국무부의 동아시아 사무 담당자들이 ‘친공(親共)’인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²² 샤오위린은 이승만이 매우 완고한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하였다.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는 동안 샤오위린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수장 전경무와 그의 후원자인 로스앤젤레스의 부농 한시대(韓始大)를 만났다. 샤오위린은 이들에 대한 인상이 좋았고, 특히 전경무에 대해서는 태평양학회 회의 참석 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 측도 전경무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²³

전경무와 한시대는 샤오위린에게 “이승만은 너무 독재적이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을 통해서도 국무부의 한국승인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샤오위린은 한국 독립을 위해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독립의 문제가 내부적인 분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경무와 한시대에게 “힘들겠지만 조직을 해산하고, 이승만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고 권고하였다.²⁴

21 邵毓麟, 1967, 앞의 책, 26쪽.

22 邵毓麟, 1967, 위의 책, 27쪽.

23 邵毓麟, 1967, 위의 책, 28쪽.

샤오위린은 나를 임시정부 정치고문으로서 김구에게 부탁받은 역할인 독립 운동 각 단체들의 화합과 한국 대표단의 유엔회의 참석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재미 한국 인사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이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주장한 중요한 원인이 한국의 해외파의 분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엔창립총회 회의 기간에 한국 측 각 단체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유엔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²⁵

샤오위린도 총회 사무총장 히스에게 한국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히스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 샤오위린은 히스가 친공계열이기 때문이라고²⁶ 기록한 것을 보면 샤오위린도 이승만처럼 당시 유엔창립총회 안팎의 분위기와 미국 측 인사들의 성향이 친공적이라고 분석한 것 같다.²⁷

샤오위린도 구웨이진처럼 한국 승인을 얻기 위해 이승만이 취하는 저돌적인 방법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미지역에 오래 거주하며 외교활동을 해온 구웨이진과는 달리, 샤오위린은 임시정부와 오랜 친분을 쌓아온 만큼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구웨이진보다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김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샤오위린은 재미 한국단체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가능한 한 강경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격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재미

24 邵毓麟, 1967, 앞의 책, 29쪽.

25 邵毓麟, 1967, 위의 책, 16~17쪽.

26 邵毓麟, 1980, 앞의 책, 57쪽.

27 한중 인사들은 미 국무부의의 접촉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친공파가 국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1948년 『타임(Time)』지 편집인이었던 위태커 체임버스(Whittaker Chambers)는 몇몇 전직 국무부 인사가 소련 스파이라고 고발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 대표단의 옵서버 자격조차도 거부했던 유엔창립총회 사무총장이자 미 국무부의 고위관료였던 앨저 히스는 친공의 수준을 벗어나 이후 소련 스파이였다는 혐의로 44개월간 복역하였다. 그가 소련의 스파이였는지, 아니면 냉전의 희생물이었는지의 논란은 1950년대 매카시즘만큼이나 전미 대륙을 강타한 주요 쟁점이었다. 이주천, 2005, 『앨저 히스(Alger Hiss) 간첩사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전통주의자의 입장에서』, 『미국사연구』 22, 119~155쪽.

한인들이 결합하기를 바랐다.

1945년 유엔창립총회 기간 이승만이 접촉했던 장제스 정부의 인사 중 구웨이진은 이승만이 국무부의 친공 성향을 비난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반면, 샤오위린은 미국인사의 친공 성향에 대한 이승만의 비난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동조하였다. 구웨이진과 샤오위린은 이승만에 대해서 각각 다른 분석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을 통해서 장제스 정부의 인사들은 이승만의 ‘반공’ 성향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Ⅲ. 장제스의 친중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의 방중 배경

알려진 바와 같이 각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은 광복 후 환국하여 미군정하에서 한민족의 국권회복을 위해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내부적인 조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한국에 어떠한 기대를 하였을까?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8월 12일 소련군은 북한지역으로 출병하고, 9월 8일 하지가 이끄는 미 제24군이 인천으로 상륙했으며, 9월 9일 조선총독 노부 유키(阿部信行)가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남한지역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한반도가 광복과 더불어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장제스의 책임도 있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 참여하면서 장제스와 그의 참모들은 조선독립 승인을 하나의 의제로 준비하였다. 당시 그들이 구상한 방안은 중·미·영·소 4개국이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즉각 조선독립을 승인하거나 조선독립을 보증한다는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나머지 참가국이 승인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단독승인에 대한 유불리를 검토하였으며, ‘적당한 시기’에 중국이 먼저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고려하였다.²⁸ 11월 23일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만찬 회담에서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루스벨트도 동의하였다.²⁹ 다만, 회담 결과를 정리한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루스벨트는 장제스와 논의 없이 “일본 패망 후 적당한 시기에”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³⁰

카이로회담의 결과가 한국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중국 외교부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단독으로라도 한국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적 승인을 단독으로 강행하기 어렵다면서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보자고 답하였다.³¹

한국의 외교적 승인 지연문제와 더불어 국제 공동관리의 문제도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다. 카이로회담이 열리기 전인 1943년 7월, 임시정부 인사들은 장제스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영국과 미국은 한국의 장래에 대해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즉각적인 한국 독립 주장을 관철해달라”고 주장하였다.³²

그러나 결국 영·미 양국은 1944년 9월 한국문제에 관한 연구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에는 한반도를 군사점령한 후 국제 감독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수록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도 전후 한국에 대해 미·영·중·소 4개국 공동관리를 제안하였다.³³ 한·중관계 연구자 중 한국의 국제 공동관리 문제에서

28 배경한, 2014, 앞의 글, 314쪽.

29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8p.m.: Chinese Summary Record” (Nov. 23, 1943),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pp. 324~325.

30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Nov. 24, 1943),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pp. 399~400.

31 邵毓麟, 1980, 앞의 책, 38쪽.

32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 『大韓民國臨時政府資料集』 22, 238~239쪽; 배경한, 2014, 앞의 글, 324쪽 재인용.

장제스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배경한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한국 신탁통치 방안 준비과정에 대해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루스벨트가 수정한 카이로선언문의 초안에 대해서 장제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기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장제스가 친중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카이로에서 선제적으로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지만, 영국의 전후 식민지 처리와 류큐 등의 유사한 문제 처리를 고려한 미국에 밀려 소극적으로 국제 공동관리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⁴

또 다른 논문에서 배경한은 1945년 1월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 양윈주(楊雲竹)가 미 국무부 동북아국의 실무자에게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이 식자층이 적고 행정능력도 부족하여 즉각적인 독립을 이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 기간 국제 공동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하였다.³⁵

1945년 초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카이로선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미 인지했고 재차 확인한 것이며, 미국의 구상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었다. 1945년 초 중국의 최대 관심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후 한반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친중정부의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친중정부’라는 표현에는 미국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장제스 정부는 이를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광복 직후 장제스가 보인 한국에 대한 입장은 이러한 측면에 상당히 부합

33 邵毓麟, 1980, 앞의 책, 38~39쪽.

34 배경한, 2014, 앞의 글, 323~328쪽.

35 「高麗問題中美會談紀錄：第二次會談紀錄」(1945. 1. 26.), 『외교부당안』 11-EAP-05862, 76-77쪽; 배경한, 2017b, 「중전 전후 시기 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중국근현대사연구』 76, 100~101쪽 재인용.

36 배경한, 2017b, 위의 글, 103쪽.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제스는 주미 중국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에게 미국정부의 대한(對韓)정책에 대해 명확히 하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트루먼 대통령이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논의했던 절차대로 우선 4개국이 공동으로 조선인들이 훈정(訓政)정부를 조직할 수 있게 한 후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자고 주장한다. 훈정정부의 조직은 충칭에 있던 원래의 정부를 기초로 삼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공산당이 장악하여 이후 처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장제스는 루스벨트의 ‘국제 공동관리’를 확인해달라고 트루먼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훈정기간이 필요하므로 국제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훈정(訓政)’의 의미는 중국의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조가 멸망하고 중국에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중화민국은 쑨원(孫文)의 지도이념에 따라 정치체제를 구상하였다. 쑨원은 공화주의자였지만, 중국정치의 특징인 현인지배의 선정주의 전통, 즉 ‘먼저 깨닫는 자(先知先覺者)’가 무능한 ‘늦게 깨닫는 자(後知後覺者)’를 지도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을 정치체제 구상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삼서론(三序論)에 근거하여 혼란이 이어지는 중국에서 군정(軍政)을 실시하고,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먼저 깨닫는 자들이 훈정을 통하여 민주공화에 무지한 인민대중을 지도하며, 민중의 정치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헌법을 제정하고 헌정(憲政)을 실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쑨원 사후 대권을 잡은 장제스

37 「蔣中正電魏道明令與美政府切商對朝鮮之政策」(1945. 9. 15.), 『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4-015.

는 이를 일당독재의 논리에 활용하였으며, 이 논리에 따라 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47년 12월 25일 당시 중국은 여전히 혼정기간에 머물러 있었다.

장제스는 오랜 식민통치를 거친 한국이 광복을 맞더라도, 무지한 인민대중을 지도할 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카이로에서의 “적절한 시기를 거쳐”라는 표현과, 1944년 한국을 국제 감독하에 두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받아들였으며, 한국이 즉각적인 독립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미국 측의 주장도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제스는 혼정정부의 조직에는 충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인사들을 기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신이 구상하는 ‘친중정부’ 수립에 가장 적절한 인선으로 배치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승만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시 장제스는 이승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인선을 생각했을 것이다.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 중앙선전부장이었던 우귀진(吳國楨)을 통해 임시정부 인사의 귀국문제와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주중 미국대사 대리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에게 전하였고, 로버트슨은 이를 국무부에 보고하였다.

장 위원장(장제스)은 충칭 임시정부 구성원을 정부 내 행정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귀국해야 할 것이다. 우 박사(우귀진)는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 중국정부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³⁸

장제스는 주미대사 웨이다오밍을 통해서 미 국무부 차관 애치슨(Dean

38 “The Chargé in China (Robertson) to the Secretary of State”(Sep. 25, 1945),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p. 1057.

Acheson)에게도 임시정부 인사들이 미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웨이다오밍이 애치슨을 만나는 자리에는 국무부 동아시아국의 빈센트(John C. Vincent)도 함께하였다. 세 사람의 회의 후 중·미 양측이 남긴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 측 기록에 따르면, 애치슨은 가능한 한 빨리 신탁 통치를 받는 민간정부가 군정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³⁹ 그러나 웨이다오밍은 장제스에게 미군당국이 필요로 할 시에는 개인 자격으로 그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애치슨이 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⁰

귀국을 앞둔 김구는 장제스에게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최소한 비정식적인 혁명 과도정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묵인함으로써, 동맹국의 지지하에 각 방면의 대표를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확대하고 마침내 민선의 정식 민주정부가 성립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⁴¹ 김구는 임시정부를 당장 정식으로 승인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과도정권으로 묵인해주고 이후 수립할 한국에서 임시정부가 정식정부의 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제스도 임시정부 측의 이러한 바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도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배제한 ‘친중정부’를 수립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임시정부를 근간으로 한 정부수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구와 면담하기 전에 장제스는 미국 측에 임정 인사들의 기용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웨이다오밍의 보고에 따라 장제스는 임시정부 인사들이 미군정하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3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Vincent)” (Sep. 26, 1945),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p. 1058.

40 「魏道明電蔣中正關於美對朝鮮方針今訪代理國務卿艾其遜詳談美現時步驟擬先設中美英蘇四國託管制其原則前經與宋子文商談並經英蘇贊同現正草擬辦法」(1945. 9. 26.), 『蔣中正總統文物：革命外交－對韓非越關係(一)』, 典藏號：002-090103-00009-029.

41 「金九函蔣中正請求徵得美國同意運在滬同人僑民返國及撥借三萬萬元」(1945. 9. 26.),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3.

하였다.

그러나 환국한 이후 임시정부 인사들과 미군정의 협력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임시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장제스의 요청은 미군정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여 입국한 임시정부 인사들은 미군정의 행정직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 한국 신탁통치안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지자 그 여파는 확연히 드러났다. 김구와 이승만은 모두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였다. 미국이 주장하고 장제스도 타당하다고 수긍한 국제 공동관리 방안에 한국 측 인사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 김구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통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도 1945년 12월 31일 모든 국민에게 반탁 시위 참가를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였고,⁴² 1946년 1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는 좌익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였다.⁴³ 미 국무부는 김구나 친소세력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취한 반탁·반공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김구도 이승만도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보라고 미군정에 전하였다.⁴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결국 미국의 선택은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한 좌우합작운동이었으며, 하지도 이에 동의하였다.⁴⁵

그러나 좌·우파 모두의 비판 속에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며 중도세력이 중심이 된 과도입법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기대와 달리 선거에서 우익들이 대거 당선되자 좌우합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고, 입

42 「이승만, 반탁시위운동에 대한 담화발표」, 『동아일보』, 1945년 12월 31일.

43 「이승만, 민족통일문제에 대한 담화발표」, 『동아일보』, 1946년 1월 16일.

44 “Proposed Messag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Draf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Undated), *FRUS 1946, Vol. VIII, The Far East*, pp. 645~646.

45 차상철, 2015, 『이승만과 하지 장군』, 백년동안, 68쪽.

법의원 중 일부는 하지가 관선의원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⁴⁶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의 방미가 결정되었다. 이승만은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장도에 올랐다. 도중에 도쿄에 들른 이승만은 미국과 소련의 협상에 의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⁴⁷ 그리고 미국에서의 일성으로 이승만은 열강들의 한국 공동관리에 반대하고 카이로의 약속을 지켜 한국을 즉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이승만의 주장은 미국의 구상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원래 11월 4일 개정을 예정하였던 과도입법의원이 1개월 연기되어 12월 12일 개원하였다. 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하였다. 민선의원 45명에는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 계열을 포함한 보수 세력이 많았고, 하지 장군이 임명한 관선의원에는 좌우합작 계열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워싱턴에 있던 이승만은 미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와 맥아더에게도 하지가 관선의원 선정에 ‘공산주의자’를 포함시켰다고 전하면서 시정을 요청하며 하지의 관선의원 임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⁴⁹

하지와 미군정도 이승만을 포함한 보수 세력이 반탁, 반군정 시위운동을 일으켜 미군정부로부터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⁵⁰ 미 국무부도 하지의 주장을 지지하였다.⁵¹ 국무부의 발표에 이승만도 다시 국무부가 공산주

46 양동안, 2002, 앞의 글, 207쪽.

47 차상철, 2015, 앞의 책, 155쪽.

48 「韓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文件彙輯：聲援李承晩赴美呼籲韓國獨立文」(1946.12.20.), 『陳誠副總統文物』, 典藏號: 008-010601-00010-005.

49 “Limb to Byrnes”(Dec. 14, 1946), 『대한민국사자료집(28) 이승만관계서한 자료집 1』, 172~173쪽; “Rhee to MacArthur”(Dec. 14, 1946), 『대한민국사자료집(28) 이승만관계서한 자료집 1』, 174~176쪽.

50 「하지, 입법의원의 성격과 주둔사령관의 책임에 관한 성명서 발표」, 『경향신문』 1947년 1월 5일;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Jan. 17, 1947),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 pp. 598~599.

5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Jan. 24, 1947),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 p. 600.

의에 기울어지고 있다고 반박하였다.⁵² 이승만과 하지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 국무부 극동국 국장 빈센트(John C. Vincent)는 이승만이 제출한 한국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국무부는 어떠한 의견도 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⁵³ 이승만은 미 국무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그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중국의 장제스와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방중이 추진되었고, 친중정부를 기대한 장제스는 이승만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V. 이승만의 방중과 정치 자금 지원

방미(訪美)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이승만은 귀국길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중국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지지를 통하여 국내외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을 통한 정치적 입지 확보에는 자금을 통한 기반마련도 중요하였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승만은 장제스가 김구에게 약속한 활동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활동자금을 일면식도 없는 장제스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구는 1945년 8월 30일 국민정부에 편지를 보내와 임정요인들의 귀국을 위한 비행기 1~2대를 지원해줄 것과 한국에 돌아간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자금 3억 위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⁴ 장제스가 즉시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52 「재미중 이승만, 미국성의 하지성명 부연설명에 대해 언명」, 『동아일보』, 1947년 1월 26일.

5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Eastern Affairs (Vince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Occupied Areas (Hilddring)” (Jan. 27, 1947),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 pp. 603~604.

54 「甘乃光吳鐵城玉逸曙呈蔣中正請派軍事及華務人員赴韓國與美蘇聯絡辦理華

9월 21일 우티에청(吳鐵城)은 비준을 요청했고, 장제스는 총 1억 위안 중 우선 5,00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⁵ 장제스는 총 1억 위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한국에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김구와 임정요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금이었다. 따라서 김구는 9월 26일 오전 장제스와 면담할 때, 그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한국의 내외 상황이 급박하므로 지원이 절실하다며 3억 위안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⁵⁶ 10월 7일 김구는 우티에청에게 보낸 편지에서 “귀국여비조로 법폐 5,000만 위안과 귀국 후 활동비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⁷

장제스는 10월 22일 김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1억 위안 중 먼저 제공하기로 한 5,000만 위안의 지급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⁸ 그리고 이어 30일에는 김구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위안 중 이미 지급한 5,000만 위안 외에 나머지 5,000만 위안과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⁹ 당시 김구는 한미 간에 외화송금의 길이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미군정이 자금 반입을 제한하고

務與金九轉請借款及請援助返韓國工作經費」(1945. 8. 29.),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四年(二)』, 典藏號：002-080200-00302-045.

- 55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1945. 9. 21.),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2.
- 56 「金九函蔣中正請求徵得美國同意運在渝同人僑民返國及撥借三萬萬元」(1945. 9. 26.),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3.
- 57 「吳鐵城呈蔣中正請照准韓國所請撥派大運輸機運送人員公文核撥借款」(1945. 10. 15.),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4.
- 58 「蔣中正電吳鐵城俞鴻鈞程潛陳立夫稱韓國臨時政府壹億元活動費已飭財政部先撥予五千萬元」(1945. 10. 22.),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四年(三)』, 典藏號：002-080200-00303-028.
- 59 「蔣中正電程潛陳立夫吳鐵城俞鴻鈞韓臨時政府經費准撥壹億元與已撥五千萬外再撥五千萬元與美金二十萬元」(1945. 10. 30.),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四年(三)』, 典藏號：002-080200-00303-044.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직접 가지고 귀국할 수 없었다.⁶⁰ 그래서 김구는 우선 주미 중국대사관으로 20만 달러를 보낸 후 다시 서울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⁶¹ 12월 11일 중국정부 재정부는 장제스의 긴급지시에 의한 임시정부의 경비 20만 달러를 중국 중앙은행에 예치하였다.⁶²

이승만은 중국정부에 자신은 남한 민주대표동맹의 주석에, 김구는 부주석에 선출되었고, 미군정 장관 하지 장군도 남한 민주대표동맹을 승인하였으므로, 주미대사 웨이다오밍에게 지시하여 미국보험증권회사(The American Security and Trust Company)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국민정부 중앙설계국 비서장 우딩창(吳鼎昌)은 이승만의 편지를 장제스에게 보고하면서 20만 달러 지급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선 우티에청에게 편지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을 첨부하였다.⁶³

우티에청은 아직 송금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주중 한국 대표단과도 논의를 했다면서, 우선 주미 중국대사관에 20만 달러를 보관했다가 외화송금이 가능해지면 임시정부에 전달하자고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⁶⁴ 공식적으로 외화송금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은 20만 달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티에청은 외화송금이 가능해지면 ‘임시정부’에게 전달하는 것

60 김지훈, 2015, 앞의 글, 57쪽.

61 「陶希聖呈蔣中正轉呈李承晚致陳之邁參事函」(1946. 12. 30.),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95.

62 중국 중앙은행이 12월 11일 임시정부 앞으로 예치한 자금의 영수증은 9월 21일 우티에청이 장제스에게 올린 9월 21일자 보고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다.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圓」(1945. 9. 21.),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82.

63 「李承晚電蔣中正請以本人名義存入美元及霍奇巴承認南韓民主同盟」(1946. 2. 15.),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88.

64 「吳鐵城呈蔣中正美元仍暫存中國駐美大使館俟匯兌通貨後再匯交韓國臨時政府」(1946. 3. 11.),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91.

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에게 전달하지는 의견은 주지 않았다.

1946년 12월 30일, 20만 달러에 대해 장제스에게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티에청은 “이 돈은 아직 지급대상이 김구 주석이고, 그 지급대상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⁶⁵ 임시정부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우티에청은 처음 약속한 대로 김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46년 한 해 동안 이승만은 중국정부로부터 20만 달러를 받기 위해 애썼으나,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⁶⁶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주미대사관 참사 천즈마이(陳之邁)에게 20만 달러를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중국정부에 전달되었고, 20만 달러 지급문제가 다시 검토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에 가면서 중국정부가 김구에게 주기로 한 자금의 수취도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주미 중국대사관 측에 연락하였고, 필요하다면 장제스를 직접 만날 계획도 하고 있었다.

1947년 1월, 이승만은 2월 상순 미국을 출발하여 귀국하는 길에 중국을 방문하여 장제스와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중국정부에 전하였다.⁶⁷ 김구도 이승만의 중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전문을 장제스에게 보냈다.⁶⁸ 그러나 이승만의 일정은 지연되었다.⁶⁹ 주미 중국대사 구웨이진은 4월 1일 미국을 출발한 이승만이

65 「陶希聖呈蔣中正轉呈李承晚致陳之邁參事函」(1946. 12. 30.),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95.

66 정병준, 2000, 「1945~19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이승만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16쪽.

67 「李承晚電蔣中正二月上旬將自美國返朝鮮途經南京擬晉謁商談」(1947. 1.),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97.

68 「金九電蔣中正謂李承晚將至南京商談朝鮮獨立問題」(1947. 2. 22.),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02; 「민주의원, 이승만 도중 관련 장제스에게 전문 발송」, 『경향신문』, 1947년 2월 23일.

69 1947년 3월 12일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고, 미국무부 차관 애치슨이 조선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는 미

일본에서 이틀 정도 머문 뒤 난징으로 가서 장제스 주석을 예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⁷⁰

이승만의 중국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민정부 인사들은 이승만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견해들을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중국 외교부가 장제스에게 한 이승만의 경력에 관한 보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승만은 반공의식, 특히 소련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2) 이승만의 재미활동 시기 미국의 한인단체 5개 중 3개는 이승만을 반대하였다. 3) 미국 관방은 이승만이 나이가 많고 그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며 충분한 호소력과 영도력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4) 광복 후 한국에서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하고 있으며, 친일파의 자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였고, 현재 만들어진 입법기구에 정식 직책이 없다.⁷¹

외교부에서 제출한 위의 보고 외에도 당시 국민정부 참군처 군무국 국장(國民政府參軍處軍務局局長)이던 위지스(俞濟時)도 장제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⁷² 위지스는 주미대사 구웨이진, 유엔 안보리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중이던 허잉친(何應欽), 국민정부 중앙실계국 비서장 우딩창, 전 주한

국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이승만은 미국을 떠나 중국을 방문하려던 시간을 잠시 연기하며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진전이 있을지 관망하고 있었다. 「미 국무장관대리 애치슨, 조선사태 상seite히 검토 중이라고 발표」, 『경향신문』, 1947년 3월 13일.

70 「顧維鈞電蔣中正據美國務院告知因李承晚歲高性頑固且最近言行多逆行逆施等故美府及駐韓當局對其不滿將如何招待其來訪以防美蘇疑忌」(1947. 4. 2.), 『蔣中正總統文物：革命外交－對韓非越關係(二)』, 典藏號：002-090103-00010-096.

71 「外交部函國民政府文官處抄送編輯韓國獨立運動領袖李承晚經歷希請參考」(1947. 3. 15.), 『國民政府：國際政治活動』, 典藏號：001-060100-00001-016; 「前駐韓代表邵毓麟呈國民政府主席蔣中正為報告李承晚之經歷訪華意義及在美活動情形及返韓後之政治活動等僅供參考」(1947. 4. 5.), 『國民政府：李承晚訪華及我國資助南韓』, 典藏號：001-062212-00001-007.

72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10.

대표 샤오위린 등이 보내온 의견을 모아 정리하였다.

외교부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위지스의 보고서 내용은 대체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이 보고는 이승만이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순조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관방은 이승만과 접촉하려 하지 않고, 영수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샤오위린도 미국이 한국에 6억 달러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고려한 일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하면서 이승만의 방문으로 인해 중·미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한·중관계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민정부 측의 생각이었다.

당시 미국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 국무부와 좌충우돌하는 이승만의 방중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외교부장 왕세제(王世杰)는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이승만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제스에게 이승만의 주장에 원칙적으로는 찬동을 표하라고 제의하였다.⁷³ 왕세제는 당시 미국과 이승만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곧 해소될 조짐이 보이므로 중국정부가 이승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4월 13일 장제스와 이승만이 회담하였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한국의 독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⁴ 회담 이후 장제스는 개인 기록에 이승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5시에 한국대표 이승만 씨를 접견하였는데, 그는 비록 연로하나 그의 훌륭한 정신자태는 한국의 어떠한 지도자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자강자립에 힘쓰고 중한이 합작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본당의 목적을 관철하자고 하였고,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73 「王世杰函蔣中正似可原則同意李承晚之主張望其力求與美國保持協助」(1947. 4. 12.),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12.

74 「이승만, 장개석과 회견하고 조선독립문제 협의」, 『동아일보』, 1947년 4월 15일.

말하였다.”⁷⁵

주변에서 어떠한 보고가 있던 장제스는 직접 경험한 이승만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여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제스와 이승만 두 사람은 모두 미국과의 협력이 간절하게 필요한 동병상련의 상황에 있었고, 장제스는 이승만의 반공적인 성향과 그가 미국에 보이는 직설적인 태도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비록 당시 미국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승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갈등 상황에 있었지만, 장제스는 미국도 최종적으로는 이승만을 한국에서의 파트너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월 이승만과 장제스의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 기록에는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⁷⁶ 중국보도를 인용한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장제스에게 맥아더 사령관과 하지 장장이 조선의 독립정부 수립에 찬동한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를 통해서 장제스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였는지, 아니면 남북통일정부를 지지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⁷⁷

그러나 1947년 9월 유엔에 출석하기 전 왕스제가 장제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과 갈등이 두드러지자 중국은 남한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이후 통일을 논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장제스와 이승만의 회담 가운데 남한 단독정부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한 단독정부든 통일정부든 중국은 한반도에 친중정부 수립을 생각하고 있었고,

75 呂芳上, 2015b,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八冊, 臺北: 國史館, 648~649쪽.

76 「蔣中正接見李承晚彼對蔣中正於抗日戰爭期中所給予韓國政府之援助表示感謝並望蔣繼續支持韓國之獨立蔣中正亦表示將盡力協助韓國獨立等」(1947. 4. 13.), 『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23-013.

77 「이승만, 장개석과 회견하고 조선독립문제 협의」, 『동아일보』, 1947년 4월 15일.

78 「王世杰電蔣中正美國主張南北韓各先成立民選政府再協議成立統一政府」(1947. 9. 3.),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127.

친중정부의 수장은 오랜 친분이 있는 김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중국은 정보기관인 보밀국(保密局)의 보고에 근거하여 남한 현지에서 명망이 있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⁷⁹ 이러한 상황과 장제스가 직접 만난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더해져 장제스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파트너로 이승만도 고려하게 되었다.

정치자금 20만 달러 지급과정을 통해 장제스의 이러한 고려를 확인할 수 있다. 우티에칭의 보고에 따르면, 1947년 6월 1일 김구는 주한 중국총영사 류위완(劉馱萬)에게 공문을 보내 약속했던 20만 달러 중 10만 달러를 임시정부 주중 대표단 단장 박찬익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달러는 당분간 중국은행에 예치해달라고 하였다. 우티에칭은 김구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고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⁸⁰ 그러므로 1947년 6월 하순 10만 달러는 이승만이 아닌 주중 한국 대표단 단장 박찬익에게 지급된 상황이었다.

10월 10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장 주석)이 언급한 금액의 절반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중대한 난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주중대사관 비서가 워싱턴의 미국보험증권회사에 입금하기 곤란하면 대사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임병직 대령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⁸¹ 당시 이승만은 20만 달러 중 10만 달러가 이미 처리된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장제스는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제적 지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왕스제는 우티에칭을 통해 유

79 「保密局呈蔣中正中共在東北誘惑韓僑參加組織李承晚返漢城民眾歡迎」(1947. 4. 29.),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16.

80 「中國國民黨祕書長吳鐵城呈總裁蔣中正爲報告金九請撥濃純美金十萬元案一函餘函中國銀行照數撥付外暫請鑒核」(1947. 6. 19.), 『國民政府：李承晚訪華及我國資助南韓』, 典藏號：001-062212-00001-009.

81 「南韓李承晚函蔣中正請求經濟援助祈令聯合國中國代表團要求於南韓成立獨立政府及備忘錄等處理經過」(1947. 9. 25.), 『蔣中正總統文物：特交檔案-一般資料：專件(二十七)』, 典藏號：002-080200-00381-001.

엔회의 참가를 위해 뉴욕에 체류 중이던 주한 중국영사 류위완에게 전달하라고 처리하였다.⁸²

이 돈이 이승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선우진(鮮于鎭)은 1996년 인터뷰에서 이 돈이 김구에게 전달되었고, 김구는 이승만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류위완이 이승만에게 제공하기를 거절하였다고 한다.⁸³ 선우진의 말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장제스가 이승만에게 주겠다고 한 10만 달러는 이승만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그 책임은 중국영사 류위완에게 있었다. 여기에서 류위완이 김구 및 김구의 아들 김신과는 오랜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필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필자는 류위완이 본국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장제스는 1947년 10월 ‘경제적 지원과 유엔에서 한국문제 지지’라는 이승만의 두 가지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 점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장제스는 이승만을 한반도에 세워질 ‘친중정부’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고 김구는 반대하고 있었는데, 장제스는 류위완을 통해 김구를 설득하였다.⁸⁴ 장제스의 지시를 받은 류위완은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서로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이승만, 김구식과 협력해야 하며 공산주의와 대항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⁸⁵ 장제스는 김홍일 장군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에 전달한 메시지

82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晚及對中國在聯合國商討朝鮮問題經辦情形」(1947. 12. 19.),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36.

83 김지훈, 2015, 앞의 글, 65쪽; 정병준, 2000, 앞의 글, 217쪽.

84 「外交部呈蔣中正已飭劉馭萬極力疏通調解金九反對南韓舉行選舉事」(1948. 4. 12.),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36.

85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Kim Gu anf Liu Yuwan”(Jul. 11, 194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yngman Rhee

에서도 동일하게 김구, 김규식과의 합작을 희망한다고 전하였다.⁸⁶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장제스는 결국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반공·친중정부’의 수립이 안정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으며, 전후 아시아의 파트너로서 이승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V. 맺음말

1949년에 이승만과 장제스가 반공동맹의 이름으로 서로 만났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열두 살의 나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인사들과는 달리 장제스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 두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되고 아시아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광복 이후부터 1947년 이승만의 방중 전후까지 이승만에 대한 장제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제스는 임시정부 지도자 김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는 환국하는 김구의 요청에 따라 정치 자금을 약속하며, 광복 후 한반도에 친중정부가 건립되기를 기대하였다. 반면에 이승만에 대해서는 중국 측 인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다.

카이로회담 이전부터 임시정부 인사들은 열강들이 한국을 공동관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제스는 카이로에서 루스벨트와 회담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였다. 루스벨트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하였으나,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국제 공동관리를 검토

Institut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9630>.

86 「장개석 총통,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김규식 간의 합작 희망」, 『서울신문』, 1948년 9월 7일.

하고 있었다. 장제스도 ‘현인지배의 선정주의’에 근거하여 한국도 국제 공동관리에 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승만과 한국 인사들은 1945년 유엔창립총회 기간에 한국의 독립문제와 총회 참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국제 공동관리를 확정하려고 한 미국은 한국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승만의 태도도 강경하게 표출되었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 대표단의 유엔창립총회 참석을 거부하는 미국 무부인사들이 친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알타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기로 했다는 등의 직설적이고 저돌적인 발언으로 미국 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정부 인사들에게 그다지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했으며, 이승만을 반공주의자라고 확인하게 하였다.

한국의 국제 공동관리안이 대두되면서 도미 직전부터 이승만은 미군정과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도미했으나, 또다시 미국 무부의 유희주의자들이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측과는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고 말았다. 1947년 2월 미국에서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제스를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방문 목적은 국내외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 기반에는 장제스가 김구에게 약속한 정치자금을 자신이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승만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정부 인사들은 이승만과 미국의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장제스에게 이승만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오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그러나 장제스는 이승만과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친중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될 경우 그 주장이 김구가 아닌 이승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장제스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파트너로 이승만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방중 목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 이승만의 손에 자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어도 1947년 후반 장제스는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1947년 9월 소련이 남북 통일정부를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

단한 미국은 남북한의 민선정부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 안은 중국 측이 미국에 제안한 적이 있는 것이었다. 1948년 장제스는 김구에게 남한 단독정부를 받아들이고, 이승만, 김규식과 협력하여 공산주의에 대응하라고 설득하였다.

1945년 유엔창립총회 기간과 1947년 이승만의 방미 상황에 대해 국민정부 인사들은 이승만이 고집스러운 태도로 미국정부와 갈등을 빚는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로 지나치게 반소·반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정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오히려 장제스에게는 결점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긴 보고에 비해 난징(南京)에서의 짧은 만남을 통해 아시아의 맹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승만과 장제스의 관계는 냉전 초기 아시아의 반공 파트너이자, 혈맹관계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및 사료집

『경향신문』.

『대한민국사자료집(28)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동아일보』.

『서울신문』.

『國民政府：國際政治運動』.

『國民政府：李承晚訪華及我國資助南韓』.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四年(二)』.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四年(三)』.

『蔣中正總統文物：一般資料-民國三十一年』.

『蔣中正總統文物：特交檔案-一般資料：專件(二十七)』.

『蔣中正總統文物：革命文獻-蔣總統訪韓』.

『蔣中正總統文物：革命外交-對韓菲越關係(一)』.

『蔣中正總統文物：革命外交-對韓菲越關係(二)』.

『陳誠副總統文物』.

※ 이상 타이완 국사관 소장

呂芳上, 2015a,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七冊, 臺北: 國史館.

_____, 2015b,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八冊, 臺北: 國史館.

秦孝儀, 1978,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五下, 中正文化基金會.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FRUS 1945, Vol. VI,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FRUS 1946, Vol. VIII, The Far East.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Kim Gu and Liu Yuwan”(Jul. 11, 194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yngman Rhee Institut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9630>.

단행본

- 김영신, 20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 관련 자료 집역』, 선인.
박치영, 1994, 『유엔정치론』, 법문사.
박홍순·조한승·정우탁 엮음, 2013, 『유엔과 세계평화』, 도서출판 오름.
손세일, 2015, 『이승만과 김구』 제6권, 조선뉴스프레스.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1988, 『주한미군사』 2, 들베개.
정병준, 2005, 『우남이승만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역사비평사.
정용욱, 2003, 『존 하지와 미국 점령통치 3년』, 도서출판 중심.
차상철, 2015, 『이승만과 하지 장군』, 백년동안.

- 邵毓麟, 1967, 『勝利前後』, 傳記文學社.
_____, 1980, 『使韓回憶錄』, 傳記文學社.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顧維鈞回憶錄』 第五分冊, 中華書局.

논문

- 김지훈, 2015,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 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군사』 96.
박진희, 2006,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76.
배경한, 2010, 「중일전쟁시기 장개석·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역사학보』 208.
_____, 201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화민국의 외교관계(1911-1945)」, 『중국근현대사연구』 56.
_____,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장개석」, 『역사학보』 224.
_____, 2017a, 「윤봉길의거 이후 장개석·국민정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장기항진」, 『역사학보』 236.
_____, 2017b, 「종전 전후 시기 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중국근현대사연구』 76.
양동안, 2002, 「45-48년 기간에 있어서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5(3).

- 윤은자, 2019, 「1932-1937년 김구의 난징행적」, 『중국근현대사연구』 84.
- 이주천, 2005, 「앨저 히스(Alger Hiss) 간첩사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전통주의자의 입장에서」, 『미국사연구』 22.
- 정병준, 2000, 「1945~19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이승만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 조덕천, 2016, 「중일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원」, 『동양학』 63.
- 차상철, 2009,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수립」, 『미국사연구』 29.
-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장제스의 친중정부 수립 구상과 이승만 (1945~1947)

정형아 · 정창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제스와 이승만은 냉전 초기 동아시아 반공의 파트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장제스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해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은 장제스와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승만은 1945년 유엔창립총회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미대사 구웨이권, 주한 대표를 지낸 샤오위린과 접촉하였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 대표단의 유엔창립총회 참석을 거부한 미 국무부 인사들이 친공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알타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기로 했다는 등의 직설적이고 저돌적인 발언으로 미 국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과도 마찰을 빚고, 또한 재미 한인 단체들과도 갈등을 보이는 이승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갖지 못하였고, 그를 반공주의자라고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한국에서 미군정의 수장 하지와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한국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연합국에 호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방미는 성

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었다.

귀국길에 이승만은 중국의 장제스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방문 목적은 한국 독립에 대한 장제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 측 인사들은 이승만이 고집스러운 반공주의자라고 보고하였고,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승만을 멀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직접 이승만을 만난 장제스는 이승만의 기백과 반공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김구에게 약속한 20만 달러 중 10만 달러는 임시정부 주중 대표단에 지급하고 남은 1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이승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제스의 이러한 지시와 더불어 이승만과 협력하라고 김구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면, 장제스는 꼭 김구가 아니더라도 이승만을 통한 친중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이승만을 이후 동아시아의 반공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 1947년 이승만과 장제스의 짧은 만남은 이후 냉전 초기의 혈맹관계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었다.

주제어: 장제스, 이승만, 샌프란시스코 회의, 친중정부

ABSTRACT

Kai-shek Chiang's Idea of Establishing a Pro-China Government and Syngman Rhee, 1945~1947

Jung Hyungah · Jung Changwon

As it is well known, Kai-shek Chiang and Syngman Rhee were anti-communist partners in East Asia in the early Cold War. While those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ied on 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nd maintained relations with Chiang, Rhee mostly stayed in the United States and had almost no chance to meet Chiang.

Whe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s held in San Francisco in 1945, Rhee met Wellington Koo, Chi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Yulin Shao,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Korea. Rhee back then criticized that those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who rejected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delegates in the conference were pro-communists. In addition, he made hard-hitting and aggressive statements, such as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agreed to hand over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oviet

Union in Yalta, which made him at odds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ose from China did not have a positive impression of Rhee who were in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reported to Chiang that Rhee was an anti-communist.

Rhee also came into conflict with John Reed Hodge, the military governor of South Korea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and visited the United States to appeal to the Allied to approv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However, he returned from the United States empty handed and the rift between him and the United States deep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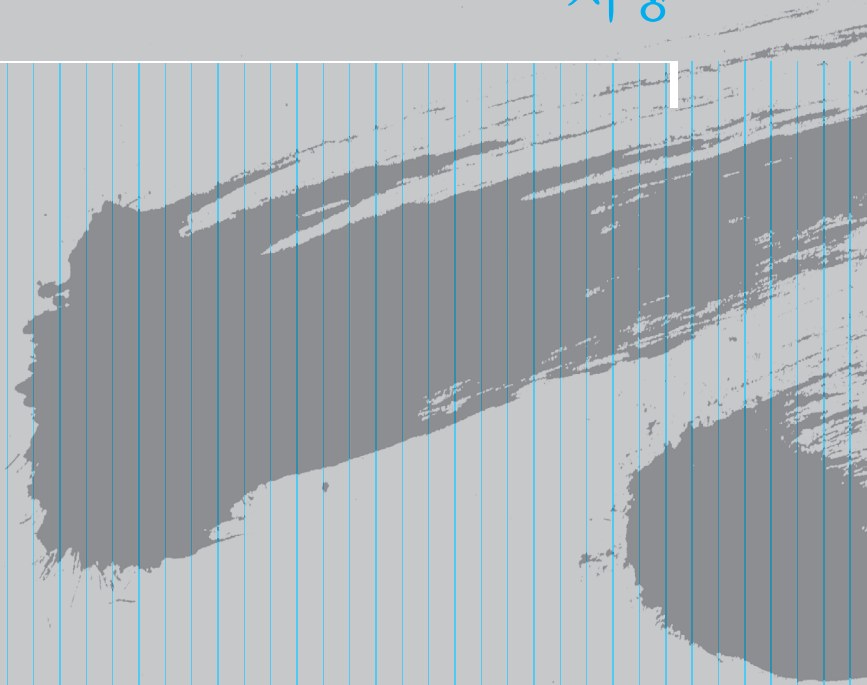
As he returned to Korea, he sent a message that he wanted to meet Chiang in China. The purposes of his visit to China were to have the support of Chiang for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to receive the support fund that Chiang promised to give to Gu Kim for his activities. Ahead of his visit to China, Chiang's aides reported to Chiang that Rhee was a headstrong anti-communist and suggested him to keep away from Rhee in order to avoid any misunderstanding with the United States. After Chiang met Rhee in person, however, Chiang highly appreciated his spirit and will against communism, and ordered to send to Rhee 100,000 dollars left out of 200,000 dollars that were promised to give Gu Kim after being paid to the delegat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Whether the money was handed over to Rhee or not is still disputable, but the way Chiang gave such orders and advised Kim to cooperate with Rhee shows that Chiang seemed to think that a pro-

China government could be established not only by Kim but also by Rhee, and to start to consider Rhee as an anti-communist partner in East Asia.

The meeting between Rhee and Chiang in 1947 was short, but it served as the first button for the two to become strong allies later in the early Cold War.

Keywords: Kai-shek Chiang, Syngman Rhee, San Francisco Conference, Pro-China Government

서평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글항아리, 2020)

기세찬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 II. 중일전쟁사 연구에 대하여
- III. 책의 구성과 내용
- IV. 새로운 시각들
- V. 글을 맺으며



I. 들어가며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래너 미터(R. Mitter) 교수가 저술한 원제 『잊혀진 동맹(*Forgotten Ally*)』의 한글 번역서이다. 이 책은 2013년,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래너 미터는 서구 사람들이 잊고 있었으나, 중국과 중국인들이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8년간의 항일전쟁사를 생생하게 복원시켜놓았다. 그는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전쟁으로 그들의 사회에 초래한 엄청난 변화에 기뻐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중국에서는 8년 항전의 경험이 대중의 기억에서 사실상 제거되었다”라고 언급한다. 지난 세기, 일본과의 전쟁에서 2,000만 명의 중국인이 사망했고 1억 명의 중국인이 난민이 되었다. 이 전쟁은 중국의 대도시들을 파괴하고 농촌 지역을 황폐화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켰으며, 아편전쟁 이후 근대화 사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갔다. 래너 미터는 “이 전쟁의 줄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언급한다.

래너 미터는 중국의 대일항전사가 그저 망각된 중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체제와 민중의 삶에서 가장 격렬한 변화를 겪은 연합국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1941년 독일의 침공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보았던 소련조차 중국이 겪어야 했던 근본적인 변화에는 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4년 반 동안 홀로 일본에 맞섰던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버린 옛 강대국 중국의 모습만 기억해왔다.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는 이전에 무심코 넘겼던 중국의 항일전쟁사에 관한 일부 오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책이며, 장제스와 국민당, 그리고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에 관한 재평가서이기도 하다.

II. 중일전쟁사 연구에 대하여

중일전쟁사 연구는 1990년대를 전후로 극명히 갈린다. 1990년대 이전 중국의 항일전쟁사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는 사실상 언제나 마오쩌둥과 팔로군이 중심이었다. 연안에서 마오쩌둥의 혁명을 둘러싼 신화는 현대 중국사의 중심이 되었다. 즉, 중국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은 무자비한 야만 국가인 일본의 침략을 받아 용맹하게 항일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위대한 중국 인민들은 악당 일본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이제 중국대륙에서조차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신 마오쩌둥의 정적이었던 장제스가 항전 시기 중국의 지도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대체로 기존의 통설적 견해는 중일전쟁에서 미국의 참전과 국공 간의 항일 민족통일전선 형성이 중국의 전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미군이 태평양 전역에 참전한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 이었고, 국공합작에 의한 중국의 항일민족통일전선도 외적으로는 유지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국민과 장제스 정권이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중일전쟁기의 국민정부군에 관한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전쟁의 당사자인 타이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타이완의 중일전쟁사 연구는 주로 정부·군 등의 기관에서 진행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연구서라 이를 수 있는 것이 총 10권으로 구성된 장위국 총편(蔣緯國總編) 『국민혁명전사(國民革命戰史)』의 제3부 『항일어모(抗日禦侮)』 편과 타이완 국방부사정편역실(國防部史政編譯室)에서 발간한 『국군항일전사전집(國軍抗日戰史全集)』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장제스를 항일전쟁의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으나, 중국과 서구의 연구자들은 장제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과 관련된 많은 1차 사료가 공개된 후, 중국과 서구에서 중일전쟁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장제스와 국민당의 기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 항일전에서 중국공산당군의 역할만 강조했던 중국 학계는 중일전쟁의 전장을 국민정부군의 ‘정면전장(正面戰場)’과 공산당군의 ‘적후전장(敵後戰場)’으로 구분하여 국민정부군의 역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실 타이완과 중국은 오랜 정치적 대립으로 양측 모두 시각상의 객관성을 의심받아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구 연구자들의 시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지만, 이들의 연구도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쫓겨난 ‘실패한 정권과 군대’라는 결과론적 시각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이스트만(Lloyd E. Eastman)의 『파괴의 씨앗(Seeds of Destruction: Nationalist China in War and Revolution, 1937-1949)』(Stanford, CA, 1984)은 국민정부군이 공산당군에게 패배한 군사적 원인을 국민정부군 자체의 군대 전투력 저하, 사병들의 징발과 훈련문제, 식량공급과 의료문제 등을 제기했고, 마빈 윌리엄슨(Marvin Williamsen)의 『중국의 쓰라린 승리(China's Bitter Victory: The War with Japan 1937-1945)』(New York: M. E. Sharpe Inc., 1992)는 국민정부군의 통솔력과 협조체제의 부족,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력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도 국민정부군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의미 있는 연구는 한스 반 드 벤(Hans J. Van de Ven)의 『중국의 전쟁과 국민당(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London, 2003)이다. 이 작품은 장제스의 항일전부터 중미관계와 국민당의 전시동원 노력까지 기존과는 다른 많은 시각을 끌어냈다. 특히, 그는 기존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장제스와 스틸웰(Joseph W. Stilwell)의 불화로 인한 미국의 부정적 여론의 결과였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정부에 대해 재평가했다.

한국 학계에서는 장제스를 중심으로 국민정부 초기의 군사·정치적 문제를 다룬 배경한의 『장개석연구』가 1995년에 출판되었지만, 이후 국민당의 군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군사사 연구는 기세찬의 『중일전쟁과 중국의 대일군사전략(1937~1945)』(경인문화사,

2013)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중일전쟁의 전략과 각각의 전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국민정부군의 전쟁활동이 보잘것없다는 견해를 뒤엎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서구의 ‘선유럽후아시아정책’이 제2차 국공내전에서 장제스가 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수정주의적 결론을 끌어냈다. 전 세계적으로 대륙에서 쫓겨난 ‘실패한 정권과 군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항일전에서의 역할을 평가받지 못했던 장제스와 그 군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Ⅲ.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총 4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중일전쟁의 배경을,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중국 단독의 대일항전 경험을, 그리고 제4부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태평양전쟁사를 다루고 있다. 이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 내용의 간략한 설명이다.

제1부에서는 왕조시대에 형과 아우의 관계였던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전쟁으로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래너 미터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은 193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긴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조되었으며”, ‘순치(이와 입술)’의 관계였던 두 나라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한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는 양국이 서로 다른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은 19세기 말까지 홍수, 기근, 외세의 침략 등 총체적으로 암울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점점 취약해져 분열·군벌화되었고,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강력한 근대 민족국가인 제국의 길로 나아갔다. 결국, 극명하게 벌어진 양국의 국력 차이는 일본이 한반도, 만주, 나아가 중국 북부지역을 통제권에 넣으려는 야심을 갖도록 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와중에 쑨원이 사망했고, 장제스가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일본 지배층은 반제국주의적 구호를 외치는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했다.

장제스는 국제적인 혼란 시기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고, 세계무대에서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국공내전이라는 국내적 분열과 함께 찾아온 1931년 일본군의 만주 침략은 장제스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의 만주 점령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장제스의 결정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만주에서 1,6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정치적으로 장제스를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일본의 공격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1932년부터 장제스는 독일의 지원을 받아 중앙군 60개 사단을 정예화하기 시작했다. 비록 1937년에 전쟁이 발발하여 그 절반인 30개 사단이 완성되었지만, 그 군대는 다가올 상하이 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일본은 점점 안정되고 강력해지는 중국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양국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양국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 결국, 1937년 7월 7일 베이징 북서쪽의 완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중국과 일본 어느 쪽도 깨닫지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이미 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2부에서는 1937년 7월 개전부터 1938년 10월까지 재난 같았던 전쟁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937년 7월 7일 저녁 마르코폴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의 하나”라고 격찬했던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이 총격을 가했고, 양측은 이를 동안 싸웠다. 장제스는 이 사건이 단순한 충돌인지 아니면 1931년의 만주사변처럼 중국 영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려는 일본의 의도적 행위인지 고민했다. 일본과의 전쟁은 국가적 자살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렇지만 장제스는 노골적인 일본의 야욕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장제스는 독일의 도움으로 건설된 자신의 최정예부대에 희망을 걸었다. 장제스는 중국 북부보다는 자신의 최정예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중국 중부의 거대한 항구 도시 상하이에서의 결전을 결심한다. 그는 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중국이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

다. 국민정부군은 상하이전투에서 11월까지 고군분투했지만, 장제스는 더이상 상하이를 방어할 수 없었다. 장제스는 우한으로 후퇴해 항전을 지속하기로 한다. 그 사이 중국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에서 일본군의 진격이 계속되자 수많은 중국인이 피란의 행렬에 올랐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란길에 올랐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8,000만 명에서 1억 명이 이동했다고 추정된다. 미처 피란행렬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불행이 닥쳤다. 1937년 12월, 중국에서는 전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2월 13일에 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이 수십만 명의 중국 민간인을 강간·약탈·살해한 것이다. 학살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지만(중국정부는 30만 명, 일본은 수만 명이라고 주장), 이 논란이 자신들의 진격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들에게 보복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는 없다.

1937년 11월, 장제스는 총사령부를 우한으로 옮겼다. 장제스는 항전과 더불어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1938년 4월, 쉬저우 근처의 타이얼좡에서 일주일에 걸쳐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했고 중국군이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8,000명이 사망했다. 중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타이얼좡 전투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국제사회도 항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장제스는 그 승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군벌들은 장제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것을 우려해 전투를 회피했다. 그 후 쉬저우가 함락되면서 타이얼좡의 광채는 며칠 만에 사라졌고, 이는 중국중부를 중심으로 항전을 계속하고자 했던 장제스의 노력에 치명적이었다.

장제스 정권은 국민에게 최악의 폭력 중 하나로 기억될 만한 일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1938년 5월 말까지 중국 중부지역으로 깊숙이 진격했고, 중국총사령부가 있는 우한이 일본군의 다음 목표가 되고 있었다. 일본군의 우한 접근을 우려한 장제스는 정저우의 황허강 제방 폭파를 지시한다. 황허강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지는 생각은 특별히 새로운 발상이 아니었지만, 그 제방을 폭파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다. 실제 제방의 폭파는 치명적이었다. 강물의 4분의 3에 달하는 수백 미터 폭의 물줄기가 중국 중부 평원을 가로지르며 동남쪽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중국 중부의 5만 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침수되었고, 84만 4,489명이 사망했으며, 4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민당은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었으나, 제방 파괴로 인한 재앙은 국민당 스스로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5개월이 지난 1938년 10월, 중국은 임시 수도 충칭에서 항전을 계속했으나, 중국 동부지역을 완전히 빼앗겼다. 중국의 주요 관세 수입, 곡창지대, 근대화된 기반시설을 모두 잃었다. 북쪽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일본군이 불안정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중국은 일본군의 가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웠으나 혼자였다.

제3부에서는 1938년 말 우한 함락부터 1941년 말 진주만 공격까지 중일 간의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중국이 고군분투했던 시기의 국내 상황을 다루고 있다. 1938년 말, 우한이 함락된 뒤 전선은 교착되었고, 중국 남부와 중부를 차지한 국민당, 북부의 공산당, 그리고 동부의 일본군 3개 세력이 대치하면서 지구 전에 들어갔다.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몰려들면서 변경에 있던 충칭은 국민정부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충칭은 끝없는 일본군의 공습에 시달려야 했고 방공호 대피는 중국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급진적 저항의 상징이 된 중국공산당의 수도 옌안으로 수만 명의 지식층이 몰려들었으나 옌안의 부족한 식량과 형편없는 거처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점은 마오쩌둥에게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전쟁에서 한 영웅은 배신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이름은 왕징웨이이다. 청년 시절의 왕징웨이는 민족주의 혁명가로 쑨원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항일전쟁 중 그는 중국인들에게 ‘천고의 배신자’라고 비난받을 만한 결정을 했다. 1938년 겨울, 장제스를 배신한 왕징웨이는 그의 측근들과 함께 충칭을 떠나 난징으로 향했고, 그곳에 일본의 괴뢰정부를 세운 것이다.

1939~1941년까지 2년 동안 중일전쟁은 일본군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항

전만이 아니라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이 되었다. 항전 초기에 중국공산당은 그럭저럭 통일전선의 합의사항을 지키면서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장제스는 동북 쪽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까지 중국공산당원의 수는 4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어났고, 9만 2,000여 명 정도였던 중국공산당군은 44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국민당은 4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간강변구(陝甘寧邊區)의 서남부를 봉쇄했다. 중국 중부에서 신4군이 영역을 확대하자 1940년 10월, 장제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신4군을 창장강 이북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신4군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이동했고,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할 속셈이라고 의심한 국민정부군은 이들을 포위해 공격했다. 군사적으로 성공했으나 장제스와 국민당은 국내의 적을 제거할 속셈으로 동맹자들을 배반했다는 후폭풍에 직면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경쟁자인 신4군의 지도자 샹잉이 제거되자 중국공산당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했다. 난징의 왕징웨이 정권은 일본과의 협력이 쑨원의 대아시아주의 실현을 위한 제3의 길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국민은 그들을 일본의 부역자로 치부했다. 1941년의 여름은 전쟁의 전환점이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로 눈을 돌렸고, 미국은 동남아에 진출하는 일본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 1941년 12월 7일,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공습부대가 진주만을 공격했다.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홀로 싸우고 있던 중국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제4부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부터 전쟁 종결까지의 연합국의 전략과 중국 내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자 중국·미국·영국은 동맹을 결성하고 함께 일본과 싸우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경계하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영국은 최대 식민지인 인도의 방어를 원했고, 루스벨트는 미국의 지상군을 중국 본토 어디에도 파견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합국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중국이 아닌 미얀마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는 것이었다. 대신 미국은 스틸웰을 장제스의 미군참모장으로 보냈다. 장제스 정권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자연적·사회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쌀 수확량의

감소, 가뭄,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는 1941년 허난성에 대기근을 초래했다. 기근은 지독한 재앙이었고, 그것은 중국이 세계대전에 발은 담근 이후 국민정부가 와해되는 과정의 일부였다.

미국·영국·중국 수뇌가 참가한 1943년 11월의 카이로회담은 연합국의 대일전략과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모두 태평양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었다. 연합국은 벵골만 상륙작전을 하기로 했으나 중국이 빠진 테헤란회담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독일의 항복 후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벵골만에 대한 상륙작전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미국은 미얀마 북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장제스는 태평양에서 전면적인 공세가 수행되지 않는 것과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표명하면서 윈난 주둔군의 미얀마 출동을 거부했다. 루스벨트는 장제스가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제스는 굴복했고, 스틸웰은 전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미얀마 북부의 미치나로 중국군과 미군 부대를 투입했다. 한편, 태평양에서 열세에 몰린 일본군은 아시아 대륙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했다. 일본은 8만 5,000명의 병력을 미얀마에서 인도로 진격시켰고, 동시에 50만 명을 투입하여 중국 중부에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진격했다. 인도에서는 영국의 슬림 장군이 일본군을 가까스로 물리쳤으나 중국 본토의 중국군은 괴멸 직전이었다. 당시 장제스의 정예군은 중국 본토가 아닌 미얀마에서 스틸웰의 지휘하에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중국이 붕괴 위협에 처하자 루스벨트는 스틸웰을 중국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장제스는 이를 거절했다. 루스벨트는 스틸웰을 미국으로 소환했고, 이는 전후 미국과 중국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 전쟁의 끝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장제스는 쉰원이 완성하지 못한 재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려고 했으나, 그 자리는 마오쩌둥이 차지했다.

IV. 새로운 시각들

래너 미터는 이 작품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몇 가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래너 미터는 유럽 중심의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닌 그보다 2년 앞선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본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1939년 유럽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탱하고 있을 때 8,000킬로미터 떨어진 동쪽에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언급한다. 사실 중일전쟁의 명칭과 시기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논란거리였다. 일본에서는 전진 및 전쟁 중에 유조구사건(1931. 9.)으로 시작되는 전쟁을 ‘만주사변’, 노구교사건(1937. 7.)으로 시작되는 전쟁을 ‘북지사변’ 또는 ‘지나사변’, 1941년 12월에 시작되는 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불려왔다. 전후에는 각각 ‘만주사변’, ‘일중전쟁’, ‘태평양전쟁’으로 불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을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통틀어 ‘15년 전쟁’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중국과 타이완에서는 ‘항일전쟁’ 또는 ‘중일전쟁’이라 하여 전쟁 기간을 1937년 7·7사변부터 1945년 8월까지로 보고 있으나, 일본처럼 1931년의 9·18사변을 항일전쟁의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서구에서는 중일전쟁 기간을 대체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래너 미터는 국민정부와 장제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미국·소련·영국과 더불어 전시 4대 강국 중 하나였던 중국의 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대일항전사는 가장 격렬한 변화를 겪은 연합국의 역사였다. 심지어 독일이 소련에 입혔던 엄청난 피해조차 중국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변화에는 비할 수 없었다. 소련은 극한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국가가 붕괴하지는 않았다. 반면 난타당해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1945년 국민당의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동안 중국의 항전 노력, 특히 국민당 정권의 역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인 시각은 장제스 정권의 부패와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다는 질책에 근거해왔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재정과 물자 지원을 요구하는 장제스를 비난했지만, 연합국의 유럽 우선 전략은 장제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장제스는 연합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작 자신들의 이익에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군대를 배치하도록 거듭 강요당했다. 래너 미터는 1945년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국민당 정권이 절뚝거리며 동정받지 못하는 불구가 된 이유는 맹목적인 반공과 항일의 포기나 우둔한 군사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국내 혼란과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소련·영국이 전쟁의 주역을 차지한 것에 비해 중국은 고작 이류 선수나 단역배우로 여겨졌던 것이다. 래너 미터는 “비록 미국의 원자탄이 일본을 항복하게 했지만, 중국이 일본을 전쟁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며 정곡을 찌른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조차 장제스를 부르주아 반동분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충칭 대폭격 당시 장제스가 머물렀던 황산의 별장에서는 항일지도자로서 장제스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장제스의 중국은 마오쩌둥의 중국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국 근현대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중국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래너 미터는 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한다. 그는 이 전쟁이 “중국이 제국주의 식민주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지역적·세계적 책임을 지닌 잠정적인 패권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언급한다. 그는 엄청난 역경을 감당했던 중국정부와 민중의 영웅적인 저항의 역사가 ‘최후의 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며, 4년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웠던 연합국의 승리에는 중국의 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썼다. 즉, 전후 중국이 4대 강국의 하나가 된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 쟁취했다는 것이다. 래너 미터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자신을 ‘책임있는 대국’으로 강조할 때마다 그들의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과거 중국이 미국·소련·영국과 함께 연합국 일원으로 참전했던 시절을 상기시킨다”라고 강

조한다. 나아가 래너 미터는 중일전쟁이 중국의 사회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는 사회복지라는 사회 발상이 있었다”라고 언급한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완성하지는 장제스 정부는 국가가 파멸위기에 직면하자 대중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부에 헌신하는 만큼 보상받기를 기대했다. 옌안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개혁보다는 혁명을 원했다는 점뿐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가가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만큼 국민 또한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중국공산당은 대중 동원을 원했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는 데 국민당보다 한층 열성적이었다.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과열된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인들의 사고에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스며들고 있었다.

넷째, 1949년 마오쩌둥의 승리 이후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70년 이상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래너 미터는 “일본과의 전쟁이 국민정부를 약화하고 분열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 통치하에 있는 대륙의 중국인들에게 장제스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과 대결해 패배한 악당이라는 이미지가 선명하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봤으며, 누가 가장 큰 손실을 보았는가? 전쟁 동안 모든 존경과 비판의 시선은 중국 국민당 지도자인 장제스에게 쏠렸다. 래너 미터는 전쟁 발발 8년 뒤에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승리한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은 완패한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장제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가를 잃었다. 항일전쟁은 장제스의 최대 맞수였던 중국공산당의 수장 마오쩌둥을 중국의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마오쩌둥은 중국 서북부의 농촌 지대를 전전하며 도망 다니는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 마오쩌둥은 약 1억의 인구가 사는 광대한 지역을 통제했고, 100여만 명의 군대를 호령했다”라고 언급한다. 전쟁이 끝나고 내전이 시작되자 상황은 국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동북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선을 확대한 장제스의 오판과 함께 중국공산당군은 중국 북부지역부터 국민당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49년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떠났고,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손에 넣었다. 래너 미터는 “이 전쟁은 중국을 황폐화했지만,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주었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V. 글을 맺으며

혹자는 서구사회가 중국이 전쟁에서 꺾어야 했던 경험에 왜 그토록 무관심한지에 대해, 전쟁이 미국과 유럽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서구 사람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1939년 5월 3~4일 충칭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공습 시 사이렌의 울부짖는 소리는 중국 바깥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중일전쟁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쟁이었다. 유명한 시인 오든(W. H. Auden)은 1938년에 쓴 시에서 “지금 악이 있는 곳은 난징과 다하우다”라고 언급했다. 오든과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 Isherwood),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R. Capa), 영화감독 요리스 이벤스(J. Ivens) 등 많은 서구의 관찰자가 스페인 내전에서 중일전쟁으로 이동했고, 민주적인 정부가 파시즘과 국수적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중요한 국제 분쟁의 현장을 보도했다. 중국의 전시 역사는 왜 서구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우리는 지금에야 그것을 되새기는가?

래너 미터는 “그 역사는 냉전 초기에 만들어진 구멍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항일의 기억은 독소 정치 속에 묻혔고, 냉전으로 인한 각국의 상황에 맞게 편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전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정치적인 질문과 함께 미국정부를 꼼짝 못하게 했다. 래너 미터는 “그 시절 몹시 험악했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다양한 기여와 결점을 신중하게 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한다. 미 의회에서는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진영 싸움이 벌어졌다. 1949년 미 국무부가 작성한 『중국백서』는 미국의 대중국정책 실패를 미국이 아

닌 중국에 돌리는 ‘책임전가서’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래 들어 중국에서 대일 항전의 진정한 모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에서 벌어진 국지적 분쟁은 동아시아 두 대국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8년 동안 중국 국민정부는 수백만 명의 난민과 함께 내륙 깊숙한 곳으로 쫓겨났다. 중국의 광대한 지역이 일본군에 점령당했다. 이 전쟁은 20세기 초반에 건설된 주요 철도망, 고속도로, 산업시설을 포함해 중국이 힘겹게 쌓아 올린 근대적인 성과 대부분을 파괴했다. 연합국과의 동맹은 또 다른 독소로 작용했다. 미국의 재정적 원조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국민당의 최정예부대는 중국 본토 방어에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미얀마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연합국의 ‘선유럽중심전략’은 연합국이 유럽에서의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소련이 독일까지 진출하여 전후 동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동아시아에서는 소련이 다른 강대국들보다 먼저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전후 국공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쟁이 끝난 뒤 중국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차지했지만, 래너 미터는 “그것은 역사의 필연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래너 미터의 『중일전쟁: 역사가 망각한 그들 1937~1945』는 이처럼 타자적 시각에서 중국이 경험했던 전쟁의 참상과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 상황의 변화과정 속에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프리즘을 제공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0호(2020. 12)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